

# 춘천 캠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춘천 캠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석 의원	부위원장 김지숙 의원	권주상 의원	김양욱 의원	박순자 의원	이교선 의원
					

# 목 차

1. 특별위원회 구성 - 4쪽
2. 활동방향 - 6쪽
3. 추진현황 - 7쪽
  - ▶ 추진현황 요약 - 7쪽
  - ▶ 민간검증단 추진일지 - 10쪽
4. 활동결과 - 30쪽
  - ▶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 30쪽
  - ▶ 민간검증단 활동결과 - 39쪽
5. 부서별 추진성과 - 64쪽
6. 의원 주요발언 - 71쪽
7. 재발 방지대책 - 71쪽
8. 총평 - 72쪽
9. 언론보도 모음 - 7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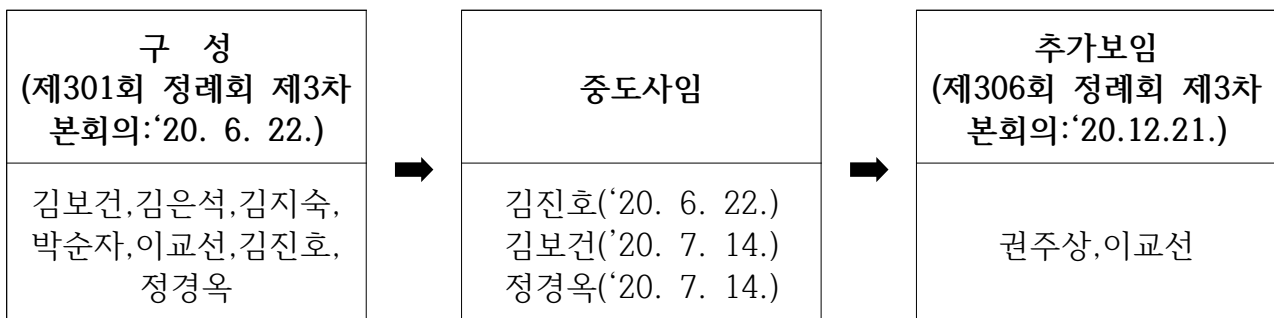
# 1 특별위원회 구성

## □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 발의일: 2020. 6. 19.
- 발의자(14명): 김은석(대표발의),권주상,김경희,김보건,김양욱,김운기,김지숙,김진호,박순자,박재균,윤채욱,이교선,이상민,이희자의원

## □ 특별위원회 개요

- 명 칭: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 구성일: 2020. 6. 22.(제301회 정례회)
- 위원명단: 6명
  - (위원장)김은석, (부위원장)김지숙
  - (위 원)권주상, 김양욱, 박순자, 이교선



## □ 활동기간: 2020. 6. 22. ~ 2021. 12. 31.

## □ 구성배경

-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 5만6,000㎡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벌였으며 춘천시는 2012년 국방부로부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 완료 검증 및 준공 보고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 그러나 최근 캠프페이지 내에서 문화재발굴조사 중 깊이 3~4M가량의 발굴터 15곳에서 지표층 아래 2~4M 사이에 검은색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부실정화 의혹이 불거졌다.
- 시료분석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고 캠프페이지 내 봄내체육관(옛 격납고) 인근 깊이 2m 지점 시료의 TPH 수치는 kg당 2,618mg으로 기준치(500mg/kg)를 5배 이상 초과했다.
-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정화에 따른 오염이 명백한데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관·의회가 하나된 긴급행동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 이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국방부의 조속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 하고 재조사·재정화·재검증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 함.

## 2 활동방향

### □ 활동목표

-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 투명한 재조사, 재정화, 재검증 시스템 구축과정 참여 및 감시
- 반환 후 캠프페이지 부지인수과정과 활용실태 조사
-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과정 점검 및 대책마련
- 캠프페이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의회 협력체계 구축

### □ 세부 활동방향

- 진상규명
  - 미군과 국방부 책임규명
  - 정화과정에 대한 춘천시 행정의 적절성
  - 반환 후 캠프페이지 부지인수과정 및 활용실태
- 재조사: 민간검증단 참여 및 재조사 방식 및 과정 검증
- 재정화: 재정화 방식의 적절성 및 재정화 과정 검증
- 재검증: 재검증 방식과 과정 검증 및 교차검증
- 시민복합공원 조성
  - 시민공원(구 캠프페이지)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과정 검증
  - 시민복합공원 조성 방향 검증

### □ 단계별 활동계획

연도	일정	집중 활동내용
`20년	3/4분기	국방부 책임규명 / 재조사 방식 및 과정 검증
	4/4분기	
`21년	1/4분기	재정화 / 재검증 방식 및 과정 검증 / 자문위원단운영
	2/4분기	
	3/4분기	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조성과정 점검 및 검증
	4/4분기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 3 추진현황

#### □ 추진현황 요약

#### < 2020년도 >

일 시	장 소	추진내용	비고
7.16.(목) 14:0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특별위원회 / 김은석,김지숙,박순자,이교선</li> <li>- 위원장: 김은석, 부위원장: 김지숙 선출</li> <li>- 구성인원: 7명</li> <li>- 기간: 2021. 12. 31.</li> <li>- 세부 활동계획서 작성 협의 : 진상규명, 재조사, 재정화, 재검증 및 시민복합공원 조성 등</li> <li>- 협의사항: '21년 당초예산반영(운영비,결과용역비)</li> <li>- 특위 회의일정 지정: 매 회기중 폐회일</li> </ul>	
7.23.(목) 14:0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특별위원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3</li> <li>- 집행부 참석: 환경정책과, 녹지공원과, 공공시설과, 총괄건축가TF팀</li> </ul>	*김양옥의원 참석
9. 1.(화) 14:00	복지환경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간담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3</li> <li>- 집행부 참석 :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li> <li>-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경과자료 설명 청취</li> <li>- 추가 토양오염 발생 국방부 대응 추진경과 청취</li> <li>- 향후 추진사항 협의: 전문가 자문 간담회 실시일정 조정(집행부), 국회방문 간담회 추진 등</li> </ul>	
9.10.(목) 10:3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간담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3</li> <li>- 자문단 참석 : 교수3, 공무원1, 시민연대 1 (한림대김헌기교수,한림대심재연교수,한림성심대 이용석교수,보건환경연구원박충기과장,시민연대 최은예사무국장)</li> <li>- 토양 전문가 의견 청취</li> </ul>	*황환주의장 참석 인사 *권주상의원 참석
9.24.(목) 14:00	시청 민방위 교육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프페이지의 철저한 오염 재조사와 완전한 정화를 위한 토론회</li> <li>- 주최: 캠프페이지특위 및 범시민대책위 공동</li> <li>- 내용: 오염의 특징과 정화 복원의 과제 등</li> <li>- 토론자: 김은석위원장,환경복원연구소김휘중소장, 녹색연합배제선팀장,한림대심재연교수, 오동철집행위원장</li> </ul>	

10.6.(화) 14:00	구,캠프 페이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프페이지 현장확인(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김은석,김지숙,박순자의원(*이교선의원불참)</li> </ul> </li> <li>환경복원연구소김휘중소장</li> <li>- 토양 복원 현황 등 현지확인</li> </ul>	
10.28.(수) 10:00	구,캠프 페이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프페이지 문화재발굴부지 현장확인(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김은석,김지숙,박순자,이교선의원</li> </ul> </li> <li>- 집행부: 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과장</li> <li>*유류통 발견에 따른 실사</li> </ul>	
11. 6.(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운영규정안</li> <li>국방부 의견에 대한 회신</li> </ul>	공문시행
11. 9.(월) 16:00	구,캠프 페이지 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캠프페이지 육아지원센터 앞 현장확인(3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 김은석,김지숙,박순자,이교선의원</li> </ul> </li> <li>- 집행부: 환경지도담당 (*공사현장소장 설명)</li> <li>*오염토 발견에 따른 실사</li> </ul>	
12.21.(월) 10:00	본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위 위원 추가 보임 의결: 권주상, 김양욱의원</li> </ul>	
12.21.(월) 14:0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특별위원회 / 김은석위원장외 4</li> <li>(*김지숙의원 불참)</li> <li>- 집행부 참석: 환경정책과장</li> <li>- 내용: 현 진행사항 점검 및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운영규정 의견청취 등</li> </ul>	



## < 2021년도 >

일 시	장 소	추진 내용	비고
3.12.(금) 13:00	장애인 스포츠 센터 앞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의회 차원 토양오염 재검증 지역 현장확인(4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11명): 황환주의장, 윤채옥, 김은석, 김지숙, 김양욱, 박순자, 이교선, 김보건, 박재균, 송광배, 이희자의원</li> <li>- 집행부: 교통환경국장외 1</li> </ul> </li> </ul>	
3.29.(월) 14:0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특별위원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참석:환경정책과장,녹지공원과장,공공시설과장</li> <li>- 내용:토양오염 관련 진행사항 확인 향후 추진방안 논의</li> <li>*향후계획:민간검증단과 간담회, 추진성과보도자료 배부, 중간보고 준비</li> </ul> </li> </ul>	
6.22.(화) 14:0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특별위원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4 (김양욱의원 불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참석:환경정책과장,녹지공원과장,공공시설과장</li> <li>- 내용:토양오염 향후 대응방안 논의</li> </ul> </li> </ul>	
7.23.(금) 10:3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특별위원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부의 캠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 비용 부담촉구 결의문 채택</li> <li>- 발송처:국방부, 기획예산과, 환경정책과</li> </ul> </li> </ul>	
9. 7.(화) 13:2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차 간담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4 (이교선의원 불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부 참석 : 환경정책과장, 녹지공원과장, 공공시설과장</li> <li>-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상황 논의</li> </ul> </li> </ul>	
11.1.(월) 11:10	복지환경 위원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차 간담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방법 및 향후계획 논의</li> <li>- 차기회의: 11. 29.(월) 예정</li> </ul> </li> </ul>	
11.29.(월) 14:00	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차 간담회 / 김은석위원장의외 4 (이교선의원 불출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대위참석: 공동대표 최승민, 김정애 집행위원장 오동철, 간사 최은예</li> <li>- 집행부 참석: 환경정책과장, 녹지공원과장, 공공시설과장</li> <li>- 내용: 상호 의견 교환 및 결과보고서 작성협의</li> </ul> </li> </ul>	

## □ 민간검증단 추진 일지

### <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 경과 >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1.12월(28개월)
- 정화방법 : 토양(토양경작법, 저온열탈착법) 지하수(양수처리)
- 정화기준 : “가”지역 기준
  - 토 지 : TPH 500mg/kg, BTEX 80mg/kg 이하
- 전체면적 : 639,342m<sup>2</sup>
- 오염현황 : 면적 48,182m<sup>2</sup> 토량 70,389m<sup>3</sup>

합 계		2005년 조사		2008년 추가조사량	
오염면적	오염토량	오염면적	오염토량	오염면적	오염토량
48,182m <sup>2</sup>	70,389m <sup>3</sup>	32,511m <sup>2</sup>	53,525m <sup>3</sup>	15,671m <sup>2</sup>	16,864m <sup>3</sup>

- 정화처리
  - 위탁사업자 : 한국농어촌공사 / 정화처리업체 : 한라건설(주)컨소시엄
  - 검증기관 : (재)자연환경연구소 + 울산과학대학

#### 2. 토양오염 조사

##### ○ 1차 조사

- 조사기관 : 환경관리공단
- 시료채취 : 584지점 / 2,228개
- 지하수시료 : 관측정 설치 49개 / 기설치 관측정 22개
- 오염현황 : 면적 32,511m<sup>2</sup> 토량 53,525m<sup>3</sup>
  - \* 오염량의 80%가 1~4m에 집중(4~5m 아래의 지하수 영향)

##### ○ 2차 조사

- 조사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시료채취 : 306지점 / 883개
- 지하수시료 : 관측정 설치 40개 / 신규 관측정 32개
- 오염현황 : 면적 15,671m<sup>2</sup> 토량 16,864m<sup>3</sup>
  - \* 오염량의 80%가 1~4m에 집중(4~5m 아래의 지하수 영향)

### 3. 정화현황

#### ○ 정화내용

- 오염면적  $48,182\text{m}^2 \rightarrow 60,476\text{m}^2$ (증  $12,294\text{m}^2$  / 26%)
- 오염토량  $70,389\text{m}^3 \rightarrow 94,347\text{m}^3$ (증  $23,958\text{m}^3$  / 34%)
  - 토양경작  $60,470\text{m}^3 \rightarrow 84,218\text{m}^3$ (증  $23,748\text{m}^3$  / 39%)
  - 저온열탈착  $9,919\text{m}^3 \rightarrow 10,129\text{m}^3$ (증  $210\text{m}^3$  / 2%)

#### ○ 정화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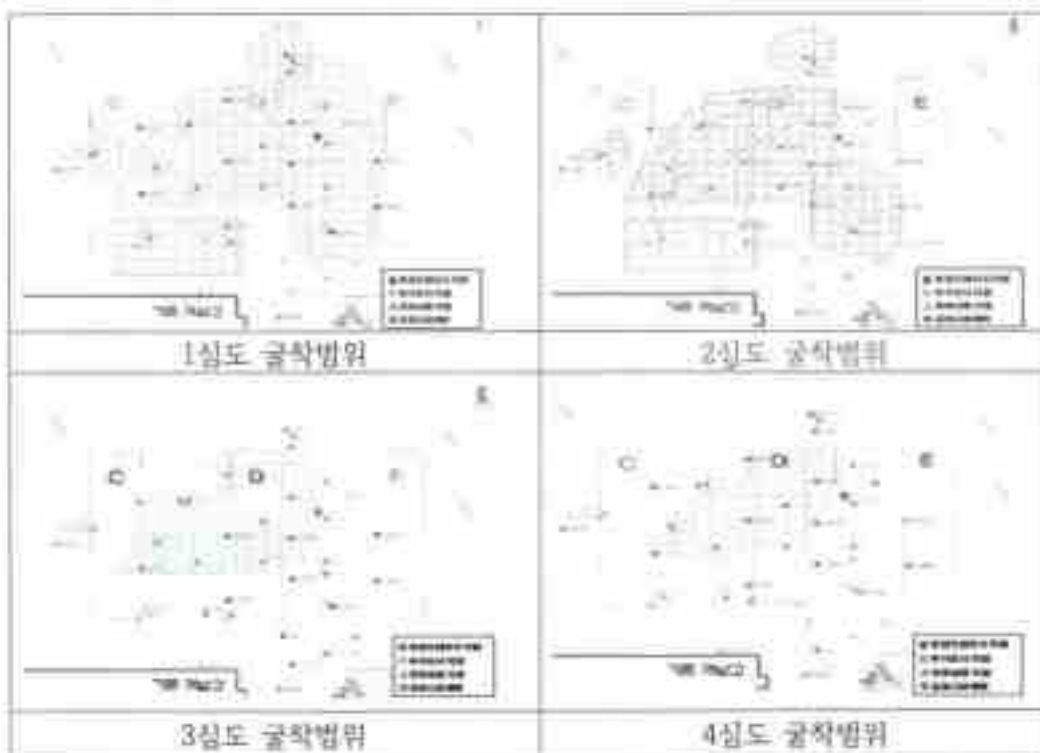
- 토양경작 : 초기평균농도(TPH)  $1,990\text{mg/kg} \rightarrow 327\text{mg/kg}$
- 저온열탈착 : 초기평균농도(TPH)  $12,608\text{mg/kg} \rightarrow 112\text{mg/kg}$

#### 4. 2020.5.7 시료채취 분석 결과

〈시료채취 위치도〉



〈토양굴착 설계도〉



- 시료채취: 2점(2,3m)
  - 토양오염 정화지역 내에 포함되나, 오염 토양 굴착 심도가 1m로 확인됨
  - B10-4 정화완료 검증을 심도 5까지 검증한 결과 기준이내 (1심도 : 119, 심도2:196, 심도3,4,5: ND)
- 따라서, 금회 시료채취 토양오염 심도가 2~3m인 것을 고려할 때 정화대상 범위는 아니나 정화검증 시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 지점과 불과 4~5m 차이

## < 추가 오염토양 발생 국방부 대응 추진 경과 >

### 1. 기존 오염토양 정화 완료까지 현황

- 캠프페이지 주둔 : 1958년
-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체결 : 2002.10.
- 환경오염조사(국방부) : 2005. 4. ~ 7
- 미군기지 반환 완료 : 2007. 5.
- 환경정화사업 협약 체결(국방부 ⇔ 수탁기관) : 2008. 2.
- 환경정화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08. 10.
- 문화재지표조사 시행(면적 : 637,191m<sup>2</sup>) : 2008. 12.
- 설계심의완료(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09. 3.
- 환경정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자문위원, 인근주민) : 2009. 6.
- 캠프페이지내 문화재시굴조사 위원회 개최 : 2009. 7.
- 환경정화사업 착공 : 2009. 9.
- 춘천시민 환경정화 현장 견학(8회237명) : 2011. 3.9. ~ 10.27.
- 고엽제 대량매입 및 살포기사(전 미군 델러스 스넬 증언) : 2011. 6.
- 국방부와 부지매매계약 체결(115,108,265천원) : 2012.6.29.
- 고엽제관련 민관군 공동조사단 구성 조사 실시(13명) : 2012. 7.
- 민관군 공동조사단 조사 종결(다이옥신 및 방사능 불검출) : 2012. 7.
- 오염토양 정화 완료 : 2012. 12.
- 추가오염토양 발견(면적 : 4,490m<sup>2</sup>, 오염토량 6,521m<sup>3</sup>) : 2012. 6.
- 추가오염토양 정화완료 : 2012. 10.

### 2. 신규 오염토양 발생 이후부터 현황

- 언론보도에 따른 토양시료채취 검사의뢰 : 2020. 5. 6.
-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통보 : 5.18

시료구분	검 사 결 과 (mg/kg)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2m지점	불검출	1.5	불검출	0.7	2,618
3m지점	불검출	3.2	2.2	5.4	3,083
기준(1지역)	1	20	50	15	500

- 국방부와 춘천시 현장 합동조사 : 2020.5.8.
  - 참석자 :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3, 한국농어촌공사 4, 자연환경 연구소, 춘천시 3,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 회의내용 : 검사결과 기준초과시 협의 진행
- 언론브리핑(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 2020. 5.18.
- 국방부 협의 : 2020. 5. 27.
  - 교통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과장, 담당2
  - 협의내용 : 원인자인 국방부에서 조사 및 정화 요구(춘천시→국방부)  
→ 춘천시가 원인 소명하여 비용 청구 요구(국방부)
- 춘천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요청: 2020. 5. 29.
  - 방법(공문) : 환경정책과-10878(2020.5.29.)호
  - 내용 가. 구 캠프페이지 지역 토양오염 저면 재조사  
나. 오염 토양 정화 조치
- 녹색연합 현장기자 설명회 개최 : 2020. 6. 1.
  - 설명내용 :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 및 정화 이행 촉구  
현장내 페아스콘 미철거 구역(4개 트랜치) 확인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 성명서 발표 : 2020.6.4
  - 장소 : 춘천시청 기자실
  - 대한노인회춘천시연합분회, 춘천시이통장협의회, 춘천시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춘천시농민단체협의회, 춘천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2020.6.13.
  - 장소 : 춘천시민연대사무실
  - 허영 국회의원, 김산(보좌관), 탁기열(담당비서), 오동철(운영위원장), 정윤경(여성민우회), 박한석(생명의 숲), 권오덕, 최은혜(시민연대), 김은석(시의원), 김지숙(시의원)

- **범대위 준비위** : 190개 시민사회단체에 범대위 동참제안서 발송(6.15)  
국방부 제안 의견 수렴 : 토양정화심의위원회 책임전문가 제안 거부  
시에 민관TF 구성 제안 : 기초단위의 조사팀 구성  
시민결기대회, 국방부 항의 방문, 기자회견, 현수막 게첨, 전단, 소식지 등  
시민 홍보
- **국회의원실** : 비공개1회 , 공개1회 주한미군이전사업단 면담  
국방부의 토양정화심의위원회 제안 건을 민간검증단 구성 역제안  
민간검증단 비용, 재정화비용 요구 , 국방부 보강한 제안서 방문 예정  
국회간담회, 토론회
- **시 의회** : 시 의회차원의 특위 구성(22일 이후), 진상규명, 재정화 요구

○ 전문가 그룹 시장 간담회 : 2020.6.19.

- 장소 : 시장 접견실
- 참석자 : 강원대 이진용교수, 한림대 김헌기, 심재연교수, 한림성심대  
이용석교수,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박충기 과장, 대한노인회 최  
승민 지회장, 시민네트워크 오동철위원장, 시민연대 최은혜 사무  
국장 허영 국회의원실 김산(보좌관), 교통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장, 공공시설과장
- 주요내용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민간검증단, T/F팀운영) 설명

○ 춘천시장 현장점검 : 2020.6.23. 16:00~

- 장소 : 구 캠프페이지 문화재발굴현장
- 참석자 : 환경정책과장외1, 공공시설과장외1
- 내용 : 유류냄새 발생지점 토양 보존, 폐아스콘 및 콘크리트구조물 검사  
지시

○ 녹색연합 주관 미군기지 환경정책 포럼 참석 : 6.24. 14:00~

- 장소 :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참석자 : 환경정책과장, 환경지도담당
- 주요내용 : 미군기지 주변 지역 환경오염문제 및 대응경과 발표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 : 오동철위원장 발표)

- 허영국회의원실 관계부처 회의 참석 : 2020.6.25. 15:00~
  - 장소 : 국회회관 허영국회의원실
  - 참석자 : 국방부 2, 환경부2, 춘천시2, 의원실 보좌관
  - 주요내용 : 민간검증단 구성 회의  
(국방부 예산 사용 및 환경부 회의 주제 내주 초 결정)
- 허영국회의원실 국방부 협의 : 2020.7.3.
  - 장소 : 국회회관 허영국회의원실
  - 참석자
    - 1) 국회의원실 : 김명진보좌관
    - 2)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팀장, 과장
    - 3) 춘천시: 환경정책과장(2명), 환경지도담당, 오동철 시민대책위 위원장
  - 협의내용
    - 1) 정화자문위원회 시민단체 추천한 위원 추가 협의
    - 2) 민간검증단 구성 제안 수정 논의
- 춘천 캠페이지 토양오염 원인규명 및 온전한 정화를 위한 합의문 합의 :  
2020.7.7.(합의안에 이견 없음 공문 회신)
  - 합의제안(2020.7.6.) : 허영 국회의원실
- 허영국회의원실 회의 참석 : 2020.7.13. 14:00~
  - 장소 : 국회회관 허영국회의원실
  - 참석자 : 환경부2, 춘천시2, 의원실 보좌관
  - 주요내용
    - 1)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지자체 및 환경부 의견 수렴(춘천시 찬성, 환경부 반대 입장)
    - 2) 환경부 지침을 개정하여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위원 제척기준 마련
- 캠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 회의 : 2020.7.16. 10:00~
  - 장소 : 시청 본관 소회의실
  - 참석자



- 1) 시민단체: 오동철 위원장, 최은예 사무국장, 김정애 시민연대 공동대표, 김희선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농민회
  - 2) 교수: 이용석(한림성심대)심재연, 김헌기(한림대), 이진용(강원대)
  - 3) 춘천시: 신영진 환경지도담당
- 주요내용: 경과보고, 향후 토양오염 정화문제의 주요쟁점 논의, 범대위 향후 추진 방향 논의.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방안 검토 보고(방침결정) : 2020.7.22.
- 국방부 정화책임으로 추진하되 민간검증단 오염조사 및 설계 후, 시정부가 자체 정화방안 보고
-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7.23(14:00)
- 장소 : 시의회 소회의실
  - 회의내용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관련 소관부서 의견 청취(김은석 위원장, 김지숙 부위원장, 박순자. 이교선 위원)
  - 출석대상 : 교통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등 11명
  - 회의결과 : 보고전 별첨
- 1) 주요내용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및 정화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 2) 질의요약

위원명	질 의 내 용
김은석	- 문화재 발굴 강행에 따른 작업자들의 건강권 문제지적 - 토지이력에 대한 자료 확보 요구
김지숙	- 방사능 오염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 및 재조사 - 자연학습장 조성 재검토 필요
박순자	- 캠프페이지 주말농장 재배 작물의 오염 여부 - 공동조사단 구성 관련
이교선	- 미세먼지 차단 숲 추진 현황 - 창작종합지원센터 추진 현황

- 국방부 방문 민간검증단 구성 등 MOA체결 실무협약: 2020.7.28.(화)
- 시간 및 장소 : 13:30~14:45 (국방부 국유재산관리팀 사무실)
  - 참석자
- 국방부: 임일빈 팀장, 손상혁 총괄담당, 김종학 전문관

춘천시: 교통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담당(이은심), 환경지도담당(신영진)

- 안건 : 국방부 정화책임으로 추진하되 최단기간 내 정화완료방안 모색

\* 민간검증단 활동 기간 내 토양정밀조사 범위 확정, 필요시 정밀조사 실시

\* 2020.8.7.까지 합의각서 체결에 관련 참석예정자 및 협의일자 확정 요청

○ 환경정책과-15695(2020.7.31.)호 문서 발송

- 제목 : 춘천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정화 합의각서(MOA) 체결 검토요청

- 내용 : 2020.7.20. 실무회의에 따른 2가지 검토 요청

1) 합의문 수정안

2) 합의각서 체결에 관한 세부사항: 참석 가능일자 및 대상자

○ 허영 국회의원실 회의: 2020.8.12.(수) 15:00 ~

- 참석자

1) 의원실: 김명진 보좌관 외 2

2) 춘천시: 환경정책과(신영진), 녹지공원과(박승기), 공공시설과(원치현)

3) 서울사무소: 소장(김관수) 외 1

- (회의내용) 국도비 반납 없이 사업추진에 국회 앞장, MOA체결 조속이행 국방부 참석 회의(8.18) 제안

○ 허영 국회의원실 회의: 2020.8.18.(화) 14:00 ~

- 참석자

1) 의원실: 허영 국회의원(회의 끝나고), 김명진 보좌관, 탁기열 비서

2) 춘천시: 환경정책과(신영진)

3) 국방부: 손상혁 중령

- (회의내용) 합의각서 정리 새로 작성, MOA 체결 9월 초까지 체결 최대한 노력 국방부 약속

○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1304(2020.8.27.)호 문서 수신

- 제목 춘천 구)캠프 페이지 토양오염정화 합의각서 체결 의견 통보

- (내용)8.18. 허영의원실 중재 작성 합의안에 따라 9월초 서면협약 체결 동의 및 춘천 오염원인자 규명 및 정화추진 적극협조

○ 의회 특위 간담회 참석 : 2020.9.1.(14:030 ~ 14:50)

- 참석자

- 1) 시의회: 김은석(위원장), 김지숙(부위원장), 의원(박순자, 이교선)
- 2) 춘천시: 환경정책과(신영진 환경지도담당)

- 내용

위원명	토의내용
김은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9월 계획: 전문가 간담회 -&gt; 허영 의원실 방문 -&gt; 대토론회</li> <li>- 전문가그룹 참여</li> <li>- 9월 8~10일 사이 전문가 간담회 개최 회의 참석자 추천 요청</li> </ul>
김지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홍보예산 확보 : 하반기(대토론회, 전시사진, 홍보리플렛)</li> <li>* 현재 : 행정지원, 시민주권담당관 : 3백만원 요청</li> <li>- 민간검증단 구성예산 확보 : 토론회 감담회 등 반영</li> <li>- 9월말 허영 의원실 주관 연합토론회 구상 중(환경부, 녹색연합 등)</li> <li>* 반환 미군기지 지자체 참여 문제점 도출 등</li> </ul>
박순자	- 춘천시 손해에 대한 법적검토 준비
이교선	- 전체 회의내용에 동의

○ 합의각서 체결 : 2020.9.3.(13:30)

- 체결주체 : 국방부, 춘천시, 범대위

○ 환경부 정화자문위원회 자문요청 : 2020.9.15.

- 과거 캠프페이지 조사나 정화에 직간접적 참여했던 위원 제척 요청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조사 및 정화를 위한 주제발표 및 토론회 :

2020.9.24.(목) 14:00 ~ 16:40

- 주최 : 범대위 + 의회 특위 (주관: 춘천시)
- 발제 :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 소장 김휘중, 녹색연합 자연생태팀 팀장 배제선
- 토론 : 의회 특위 위원장 김은석 의원,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심재연, 범대위 집행위원장 오동철

- 환경부 권정현 주사 요청자료 제공 : 2020.10.6.
  - 제공자료 : 2020.5.6. 오염토 발생 위치도(공공시설과 협조)
  - 통화확인 : 정화자문위원회 활동 준비 중
  
- 캠프페이지 특위 현장 확인 : 2020.10.6.(14:00)
  - 장소: 캠프페이지 현장(집결-봄내체육관)
  - 참석: 특위위원 4명 + 토양 및 퇴적물환경복원연구소장 김희중
  
- 구)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운영규정(안) 검토 및 위원추천  
협조 공문발송 : 2020.10.20
  - 수신처: 환경부, 국방부, 허영국회의원실, 범대위
  - 내용 : 10월중 검증단 구성 마무리 및 1차회의 계획 알림
  
- 캠프페이지 유류통 발견 시장 보고 : 2020.10.27.
  
- 캠프페이지 특위 현장 확인 : 2020.10.28.(10:00)
  - 장소: 캠프페이지 문화재발굴 현장(유류발견장소)
  - 참석
    - \* 특위위원(4명: 김은석, 김지숙, 박순자, 이교선 의원)
    - \* 집행부(2명: 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과장)
  
- 캠프페이지 유류통 발견 공동조사(10.27 ~ 28) 및 결과 시장 보고  
(2020.10.29.)
  - 공동조사 : 환경부(손상혁 중령, 감종학 전문관), 춘천시(환경정책과장, 환경지도담당), 10.28(11:00 ~ 15:00)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김창하 차장(10.27. 우선 점검-위치파악 도면 수령)
  - 조사결과 : 기존 활주로 성토구역 콘크리트 포장면 지하 1m깊이에서 발견된 것으로 볼 때 과거 미군에 의해 매립된 것으로 추정
  
-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위원 추천(안) 시장 보고 : 2020.10.29.
  - 보고내용 : 이진용, 김헌기 교수 추천

- 캠프페이지 매립폐기물(기름통) 처리 협조 요청 : 2020.10.30.
  - 수신처 : 국방부
  - 내용 : 기름통 처리요청 및 처리시 업무 담당자 협조 요망
  
- 허영의원실 환경정책과 방문 회의 : 2020.11.3.
  - 참석 : 의원실(김명진 보좌관, 탁기열 비서), 환경정책과(과장, 환경지도담당)
  - 내용 : 민간검증단 운영규정, 검증단 위원추천, 강원일보 공청회 관련
  - \* 당일 현장 확인(국방부 손상혁 중령, 농어촌공사 직원1, 당초 정화업체 직원 1 우연히 만남)
  - ~ 국방부에는 기존 정화구역 내 아스팔트층 발견 원인조사 중 추정
  
- 제1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개최 : 2020.11.6
  
-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정책과 방문 회의 : 2020.11.12.
  - 참석  
(시청) 교통환경국장, 환경정책과장, 공공시설과장, 환경지도담당  
(국방부) 손상혁 중령, (한국농어촌공사) 김건수 차장
  - 내용
    1. 캠프페이지 잔류 폐기물처리방안
    2.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운영규정(안) 수정 의견
  - 방청허용 및 운영결과 공개‘독립성 유지’-> 검증단 결정
  - 운영규정(안) 제2조(역할) 및 제4조(단장)에 관한 수정 의견
  
- 운영규정 2차 수정(안) 국방부 멜 발송 : 2020.11.12.
  - 제2조 및 제4조에 관한 사항
  
- 민간검증단 구성 완료 : 2020.11.13. (추천완료)
  
-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추가자료 요청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 2020.11.19
  - 요청(일자: '20.11.11 / 내용: '20.5월 춘천시에서 실시한 토양분석자료-GC크로마토그램 포함된 조사자료)

- 민간검증단 운영규정 시행 알림 : 2020.11.20.
  - 대상 : 환경부, 국방부, 허영의원실, 춘천시의회, 범대위
-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운영에 따른 자료협조 요청 : 2020.11.24
  - 대상 :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 내용 : 당초 오염조사 보고, 준공검사 보고, 완료검증 보고 도서(7종)
  - 사유 : 민간검증단 회의자료 활용
-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1차 회의: 2020.11.30.(월), 13:20 ~ 17:00
  - 참석 : 검증위원 8명(1명 불참: 이진용 교수) / 간사1(보조1)
  - 의결 : 세부내용 회의록 참조
-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1차 회의 의결사항 알림 : 2020.12.7
  - 수신 : 국방부, 공공시설과, 시의회, 범대위
-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1차 회의 의결사항 회의 : 2020.12.9
  - 참석: (시청)신영진, (시의회)김은석 위원장, (범대위) 오동철 집행위원장, 김정애 공동대표, 최은예 사무국장
  - 내용: 검증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 안 설명
- 국방부(손상혁 중령), 한국농어촌공사(차장) 방문 : 2020.12.10
  - 목적: 공공시설과 폐기물처리 관련 협의 외
  - \* 민간검증단 2차 회의 요청사항 협의(박승기 담당 외 1 입회)
  - 2차 안전 협의: 실태조서 발주처(국방부), 검증단 실태조사 업체지정(불가), 미세먼지숲 공사진행 방안 협의(절차 환경부 문의)
  - ※ 춘천시에서 발주 할 경우 예산 추경 반영 등 절차 소요 시간 과다.
-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2차 회의: 2020.12.23.(수), 10:00 ~ 15:00
  - 참석 : 검증위원 7명(불참2: 신경희 박사, 서용찬 교수) / 간사1(보조1)
  - \* 입회 설명 :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공공시설과
  - 의결 : 조사범위 및 밀도, 조사방법 결정

○ 202012.30. 민간검증단 3차 회의(임시) - 시(市) 주관 회의

- 참석 : 부서(신영진, 박소라, 김태흥, 박승기, 김수영, 조은빈)

검증단 위원(김용현, 이진용, 김휘중)

- 내용 : 토양조사(개략조사 및 정밀조사 밀도 방법 결정), 지하수조사(모니터링관정 100개소 설치), 매장문화재 별도 협의 필요(문화콘텐츠과 의견)

○ 2021.1.6. 구) 캠프 페이지 토양오염 재조사 계획에 따른 검토 요청

- 관련문서 : 환경정책과-272(2021.1.6.)호

- 수신처 : 녹지공원과, 문화콘텐츠과, 공공시설과

- 내용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검토 요청

○ 2021.3.5. 구)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조사 계획에 따른 수치화 파일 및 자문의견 공유

- 관련문서 : 녹지공원과-2227(2021.3.5.)호

- 수신 : 환경정책과, 문화콘텐츠과, 공공시설과

○ 2021.3.12. 미세먼지 차단숲(1차) 조성사업 대상지내 토양조사 관련 재자문 협조 요청

- 관련문서 : 환경정책과-5196(2021.3.12.)호

○ 2021.3.16. 미세먼지 차단숲(1차) 조성사업 대상지내 토양조사 관련 재자문 협조 요청 회신

- 관련문서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조사기획팀-117(2021.3.16.)호

○ 이후, 진행되어 유존지역내 토양조사 가능지역 재협의를 따라 일부오염구간 문화재 부분 정밀조사 결정

○ 2021.1.8.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2차 정기회의 의결사항 알림

- 수신처 : 국방부

- 내용 : 춘천시 주체 조사 가능여부 검토 및 예산지원 요청

○ 2021.1.14. 민간검증단 4차 회의(임시) - 국방부 협의

- 참석 : 춘천시(신영진, 박소라), 국방부(손상혁 중령), 농어촌공사(고민석 과장), 검증단 위원(김용현 원장)

- 내용 : 캠프페이지 토양조사 계획에 따른 국방부 의견 수렴

- \* 토양, 지하수, 중금속조사 : 이견없음
- \* 지하매설물조사 : 실효성 의문제기 및 발생 때마사 책임처리 협의 완료
- \* 다이옥신, 페놀 : 차기회의 재논의(11년 조사 결과 우선검토)

○ 2021.1.28. 민간검증단 5차 회의(임시) - 문화재청 협의

- 참석 : 춘천시(신영진, 이정예, 김수영), 문화재청(박윤정 과장, 김혜정 학예 연구사), 검증단 위원(김용현 원장)
- 내용 : 캠프페이지 토양조사 계획에 따른 문화재청 의견 수렴
  - \* 토양오염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추개수
  - \* 시추공의 위치는 최대한 기존 시굴조사 Tr.를 이용
  - \*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

○ 2021.2.18.(목)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6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7명(불참1: 이진용 교수) / 간사1(보조1)
  - \* 과거 조사이력(고엽제, 다이옥신, 방사능) 입회 설명 : 한국농어촌공사 이상화 차장 외 1
- 의결
  - \* 방사능, 고엽제, 다이옥신 조사 제외(기존 조사 충분 판단)
  - \*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변경 : GPR(정밀도 낮음) → 굴착방식
  - \* 트랜치조사 위치 결정을 위한 소모임 예정

○ 2021.2.19.(금) 미세먼지 차단숲 부지 토양조사 용역계약

- 계약자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착수일(2021.2.23.)로 부터 90일간(완수일자: 2021.5.23.)
- 조사결과 : 토양조사 1식

조사기간 (‘21년)	오염현황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비 고
	면적(㎡)	량(톤)	구 분	채취지점	분석수	초과지점	
1차 부지 (2.23 ~ 5.23)	5,093	14,800	토 양	523	1,725	55	TPH 53, BTEX 4(중복2)
			지하수	24	24	2	TPH 2
			중금속	24	24	0	-



○ 2021.2.24.(수) 캠프 페이지 토양조사 현장 확인

- 참석 : 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이상필 박사 외 1), 춘천시(환경과장 박장완, 지도담당 신영진, 공공시설과장 김영현, 토목시설담당 이원경, 주무관 김희철)
- 내용 : 토양조사 위치 확인(사유지 앞 흙더미 지장없음), 자연학습장 중금속조사(표토 50cm 감안 70cm 굴착 채취), 사업지구 우선조사 용역사 전달

○ 2021.2.26.(금) 민간검증단 6차 회의(정기) 후속 7차(임시) 회의

- 일시 : 2021.2.26.(금), 시청본관5층 소회의실
- 참석 : 검증위원(김용현 원장, 이진용 교수, 김휘중 소장), 춘천시(신영진 지도담당, 김진현 지하수담당)
- 의결
  - \* 모니터링용 지하수 관정 설치 : 5개소(경영지원과 협의)
  - \*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부지(문화재조사 유예구간)에 대한 트렌치 조사구역 설정(시료채취 및 지하매설물 확인)
  - \*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부지(문화재조사 유예구간)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결과 시료채취 불가지역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2021.3.5.(금)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8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5명(불참3: 박재우, 서용찬, 이재영 교수) / 간사1(보조1)
  - \* 강원대학교 착수보고회 이상필박사 참석
- 의결
  - \* 강원대학교 착수보고사항 의결 및 검증단 주문사항 전달
  - \* 김휘중 위원 소수의견 처리계획 회람조치

○ 2021.3.8.(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 추진상황 시민단체 설명회 개최

- 장소 : 5층 소회의실
- 참석 : 범대위 및 시의회 특위 의원 등
- 내용 : 추진경위 및 추진상황(자문위자문요청, 검증단 8회차까지 운영 상황) 설명(환경지도담당)

○ 2021.4.1.(목)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9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7명(불참: 최재영 박사) / 간사1(보조1)

\* 강원대학교 착수보고회 이상필박사 참석

- 의결

\* 고엽제, 방사능, 다이옥신 조사방안 / 2020.5.6. 새로운오염물질 원인규명 차기회의 논의 / 1단계 토양조사 폐기물발견 조사 / 문화재 보호구역내 시료채취 가능(29개) / 문화재 정밀조사 구역확대에 따른 해결방안(문화재 정밀조사시 유류, 폐기물등 발견즉시 조사 같음) / 국방부 요청사항 설명 / 캠프페이지 현장확인(1단계 초과지역, 폐기물 발생지역 확인)

○ 2021.5.26.(수) 1차 부지 외 잔여부지 전체 토양조사 용역계약

- 계약자 : 상지대학교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착수일(2021.6.1.)로 부터 152일간(완수일자: 2021.10.30.)

- 조사결과 : 토양조사 1식

조사기간 (‘21년)	오염현황		시료채취 및 분석결과				비 고
	면적(㎡)	량(톤)	구 분	채취지점	분석수	초과지점	
<b>2차 부지</b> (6.1 ~ 10.30)	14,747	33,000	토 양	911	3,099	181	TPH 174, BTEX 11(중복4)
			지하수	20	20	1	TPH 1
			중금속	13	13	0	-

○ 2021.6.1.(화)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10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7명(불참: 서용찬 교수) / 간사1(보조1)

\* 1차용역 농어촌공사 의견 발표(이상화 차장)

- 의결

\* 1차용역 검증단 조치사항 / 1차용역 농어촌공사 의견 발표 / 1차용역 민간검증단 위원(김휘중박사) 참관기 발표 / 2차 부지 용역 착수보고 / 물놀이장 인근 잔디마당 중금속 조사

※ 언론브리핑 병행 : 발표자(박재우 단장)

○ 2021.6.28.(월)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11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7명(불참: 서용찬 교수) / 간사1(보조1)
  - \* 제10차 검증단 회의 강원대학교 요청사항 발표(이상필 박사)
- 의결
  - \* 제10차 민간검증단 회의 농어촌공사 발표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김휘중 박사) / '20년 오염물질 발견 의견서 작성 : 국방부 정화책임
- 2021.7.20.(화)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12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7명(불참: 서용찬 교수) / 간사1(보조1)
    - \* 1차부지 강원대학교 용역 최종보고(이상필 박사)
    - \* 2차부지 상지대학교 용역 중간보고(김재중 차장)
  - 의결
    - \* 강원대학교 보고사항 보완(보고서 수정 및 교차분석에 관한사항) / 2차부지 상지대학교 용역 중간보고(조사 주의사항 등) / 2차조사부지중 일부(교란지역, 어린이물놀이장) 문화재 구간 추가조사 필요성 제기(김휘중 박사)
  - 조치 : 문화재 정밀조사 해제 요청(공공시설과), 물놀이장(디자인과)
- 2021.7.27.(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회의 의결사항 후속조치 협조 요청
  - 관련문서 : 환경정책과-16507(2021.7.27.)호
  - 수신처 : 디자인과, 공공시설과
  - 내용 : 디자인과(토양조사 추가), 공공시설과(문화재정밀조사 편입구간 일부 해제 요청)

- 2021.8.10. 정밀발굴조사 대상지역 해제 협의 결과 알림
  - 관련문서 : 공공시설과-4488(2021.8.10.)호
  - 수신 : 환경정책과
  - 내용 : 문화콘텐츠과 협의문서 첨부 시행(19,700㎡ 4,5구역 토양정밀조사 허용. 단,관계전문가 참관하에 추진)
- 이후, 해당부분 정밀조사 실시하여 유류오염 확인되었으나 오염지도(써퍼)는 경계지점 까지만 표기
  - ⇒ 향후, 문화재청 재협의 필요

- 2021.8.13.(금) 캠프페이지 토양조사 2차부지 일부구간 참관조사 용역계약
  - 계약자 : 강원도문화재연구소
  - 용역기간 : 착수일(2021.8.17.), (완수일자: 2021.8.27.)
  - 내용 : 참관 조사 용역보고서 납품
  
- 2021.8.13.(금) 캠프 페이지 민간검증단 13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8명(불참: 없음) / 간사1(보조1)
    - \* 1차부지 강원대학교 용역 최종보고-보완 재보고(이상필 박사)
    - \* 2차부지 상지대학교 용역 2차 중간보고(김재중 차장)
  - 의결
    - \* 강원대학교 보완 재보고(8월까지 보고서 마무리, 문화재 유존지역 정화물량 제외, 기타 수정사항) / 상지대학교 용역 2차 중간보고(조사 내용대로 오염지도 확정) / 민간검증단 운영기간 연장요청(국방부) 설명
  
- 2021.10.8.(금)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14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8명(불참: 없음) / 간사1(보조1)
    - \* 1차부지 강원대학교 용역 최종보고-보완 최종 재보고(이상필 박사)
    - \* 2차부지 상지대학교 용역 3차 중간보고(김재중 차장)
  - 의결
    - \* 강원대학교 보완 최종 재보고(오탈자, 실험값 없는 비중 삭제, 20,000이상 농도는 열탈착 공법 정화) / 상지대학교 용역 3차 중간 보고(일부 미조사 지역“꿈자람 물정원 등” 오염 위치 및 농도만 표기하고 향후, 실시설계시 조사 실시, 문화재 발굴지역 등 시료채취 불가지역 사유 명기)
  
- 2021.10.15.(금)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15차 회의(정기)
  - 참석 : 검증위원 6명(불참 2명: 김용현 원장, 이진용 교수) / 간사1(보조1)
    - \* 2차부지 상지대학교 용역 4차 최종보고(김재중 차장)
  - 의결
    - \* 2차부지 상지대학교 용역 최종보고 조치(오염미조사 지역 오염지도 작성 삭제, 문화재 구간 등 시료채취 불가지역 사유 명기, 기타 보고서 리뷰 사후 조치 등) / \* 2차부지 조사결과 민간검증단 의견서 작성(사전 검증위원별 메일 발송 의견수렴(기술검토) 완료후 세부 논의 / 2차부지 언론보

리핑 자료 작성(발표 : 박재우 단장, 배석: 일부 위원)

○ 2021.11.29.(월) 구)캠프페이지 토양오염정화 검증 용역 계약

- 계약자 : 재단법인 자연환경연구소
- 용역기간 : 착수일(2021.11.29.), 완수일자(2022.12.2.)
- 내용 : 토양정화 검증용역 1식

○ 2021.12.1.(수) 국방부 관계자 춘천시 방문 회의

- 참석 : 춘천시(신영진), 국방부(유경희 중령, 김종학 전문관),  
농어촌공사(이상화 차장)
- 내용 : 1,2차 부지 오염정화 전반적인 사항 의견 교환
  - \* (1차 부지) 문화재청 협의과정 설명, 토양정화설계 용역 없이 진행 중 토  
량 증가 예상 설명, 문화재 정밀조사 및 참관조사 용역비 국방부 예산 부  
담 검토 요청
  - \* (2차 부지) 토양정화설계 용역(1억 400만원) 발주 준비 중 설명
  - \* (1, 2차 부지 공통) 사업마무리후 향후 오염 발생에 대한 처리 공론화 마  
무리 되어야 할 것. 문화재구간 추가 정화 정리되어야 할 것.

○ 2021.12.3.(금) 구)캠프페이지 토양오염정화 공사 계약

- 계약자 : (주)아이케이
- 공사기간 : 착공일(2021.12.3.), (준공일: 금차 2022.5.31. / 총차  
2022.12.2)
- 내용 : 토양정화 공사 1식

## 4 활동결과

### □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 ① 특별위원회 회의: 6회
- ② 특별위원회 현장확인: 4회
- ③ 특별위원회 간담회: 5회
- ④ 성명서 및 결의안 채택 등

#### ①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차수	일시	참석위원	안건
1차	‘20. 7. 16.(목) 14:00~15:00	4명	- 위원장 호선의 건 - 부위원장 호선의 건 -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
2차	‘21. 7. 23.(목) 14:00~16:00	4명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및 정화 등과 관련한 질의·답변 및 의견 청취의 건
3차	‘20. 12. 21.(월) 14:00~15:00	5명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운영규정 의견 청취의 건
4차	‘21. 3. 29.(월) 14:00~15:30	6명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관련 추진상황 보고의 건
5차	‘21. 6. 22.(화) 14:00~16:00	5명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대응과제 논의의 건
6차	‘21. 7. 23.(금) 10:30~11:00	6명	-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비용 전액 부담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② 캠프페이지 현장 확인 결과

차수	일시	참석인원	장소	확인 내용
1차	‘20. 10. 6.(화) 14:00	4명	구, 캠프페이지 현장	토양 복원 현황 확인
2차	‘20. 10. 28.(수) 10:00	6명	구, 캠프페이지 현장	유류통 발견에 따른 실사
3차	‘20. 11. 9.(월) 16:00	5명	구, 캠프페이지 현장	오염토 발견에 따른 실사
4차	‘21. 3. 12.(금) 13:00	13명	장애인스포츠센터 앞	시의회 차원 토양오염 재검증 지역 확인

### ③ 특별위원회 간담회 결과

차수	일 시	참석인원	비 고
1차	‘20. 9. 1.(화) 14:00~14:45	5명	
2차	‘20. 9.10.(목) 10:30~12:00	10명	
3차	‘21. 9. 7.(화) 13:20~14:00	8명	
4차	‘21.11. 1.(월) 11:10~11:30	6명	
5차	‘21.11.29.(월) 14:00~15:00	12명	

#### < 제1차 간담회 >

##### □ 개 요

- 일 시 : 2020. 9. 1.(화) 14:00~14:45
-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의 원 : 김은석위원장, 김지숙부위원장, 박순자, 이교선의원
  - 집행부 : 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 신영진
- 주요내용
  - 캠페이지 부실정화 관련 소관부서 의견 청취
  - 추진방향 논의

##### □ 향후계획

- 전문가 초빙, 국회방문, 토론회 등



## < 제2차 간담회 >

### □ 개 요

- 일 시 : '20. 9. 10.(목) 10:30~12:00
- 장 소 : 소회의실
- 참 석
  - 의 원(5) : 특별위원회(4): 김은석, 김지숙, 박순자, 이교선의원  
권주상의원
  - 전문가(5) : 한림성심대 이용석 교수, 한림대 심재연 교수,  
한림대 김헌기 교수, 보건환경연구원 박충기 과장,  
춘천시민연대 최은예 사무국장
- 주요내용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관련 전문가와 의견 교환

### □ 종합의견

- 토양오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조사자료 공유 인식 공감
- 향후 추진계획의 구체화 필요





### < 제3차 간담회 >

#### □ 개 요

- 일시/장소 : '21. 9. 7.(화) 13:20~14:00 / 소회의실
- 참 석
  - 의원(5) : 김은석위원장, 김지숙부위원장, 김양욱, 이교선, 박순자의원  
(\*이교선의원 불참)
  - 집행부(3) : 환경정책과장, 녹지공원과장, 공공시설과장
- 주요내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추진 방향 논의



### < 제4차 간담회 >

#### □ 개 요

- 일시/장소 : '21. 11. 1.(월) 11:10~11:30 / 복지환경위원장실
- 참 석
  - 의원(6) : 김은석위원장, 김지숙부위원장, 김양욱, 이교선, 권주상, 박순자의원
- 주요내용 :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및 향후 계획 논의



## < 제5차 간담회 >

### □ 개 요

- 일시/장소 : '21. 11. 29.(월) 14:00~15:00 / 소회의실
- 참 석
  - 의원(5) : 김은석위원장, 김지숙부위원장, 김양욱, 권주상, 박순자의원  
(\*이교선의원 불참)
  - 범대위(4): 범시민대책위 대표 최승민, 김정애  
집행위원장 오동철, 간사 최은예
  - 집행부(3) : 환경정책과장, 녹지공원과장, 공공시설과장
- 주요내용 : 범시민대책위 의견 청취 및 향후 운영방안 논의



## ④ 성명서 및 결의문 채택 현황

구분	일 자	제 목
성명서	'20. 10. 28.(수)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본조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의견서	'20. 11. 6.(금)	캠핑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운영규정(안) 국방부 검토안에 대한 의견
결의문	'21. 7. 23.(금)	국방부의 캠핑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비용 전액부담 촉구 결의

## □ 성명서 전문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기본조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27일 옛 캠프페이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약 20ℓ 짜리 유류통 30여 개가 발견되었다. 우리가 제기한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추가적인 유류통이 매립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국방부와 환경부는 합동으로 미군측이 조치하기로한 8개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미군측이 조치하기로한 항목은 지하유류저장탱크, 불발탄처리 등 지극히 기본적인 조치들이다. 이 번에 발견된 유류통은 주한미군이 기본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고 이에 대한 기본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정화구역에서 배제되었던 곳이다. 이미 우리가 제기했던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범위가 촘촘하지 못했고 정화과정이 허술했다는 증거이다.

상황이 이러하네 누구하나 춘천시민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기본적인 조치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서 환경조사와 정화과정이 제대로 되었을 리 없다. 국방부는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재조사와 재정화에 나서는 것만이 춘천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하는 것이다.

캠프페이지 부실정화로 춘천시민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가 크다. 50년 만에 반환받은 땅에 시민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기약없이 유보되었다. 캠프페이지는 춘천의 심장부로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더 이상 하루라도 방치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본조치조차 확인하지 않은 국방부를 신뢰할 수 없다. 토양 심층부와 지하수의 오염까지 의심해야하는 상황이다. 또한 당시 조사했던 방사능과 고엽제 의혹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 번 재조사마저 춘천시민들을 기만하고자 한다면 춘천시의회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 앞에 서게 될 것임을 다시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2020. 10. 28.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 □ 의견서 전문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운영규정(안) 국방부 검토안에 대한 의견서

1. 국방부(안)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의 원인규명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이후 오염원” “자연 상태에서의 재오염원” “기존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대한 재검증” 등에 맞춰져 있습니다.
2. 최근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기존 토양오염이 확인되지 않은 지역”에서 약 20ℓ 짜리 유류통 30여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방부의 책임인데도 “기존 토양오염이 확인된 지역”에 국한하려 한 것은 춘천시민들의 정서와 심각히 배치됩니다.
3. 기존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의 근본원인은 부실한 오염조사 때문입니다. 이번 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 1) 캠프페이지 전체에 대한 촘촘한 시료채취
  - 2) 심층부와 지하수에 대한 시료채취
  - 3) 재조사와 재정화 방법은 민간검증단에서 결정하도록 함
4. 그동안 춘천시의회도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안)은 춘천시민들이 결코 납득할 수 없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11. 6.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 □ 결의문 전문

###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비용 전액부담 촉구 결의문

1. 국방부는 2005년부터 3년간 반환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2년간 토양정화작업을 실시한 후 2011년 토양오염정화작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2. 2012년 6월 29일 캠프페이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6월 추가오염이 발견되었고 10월까지 추가오염지역 정화작업을 한 후 토양오염정화작업의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3. 당시 춘천시민들은 부실정화의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국방부는 정화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부지 매매대금을 춘천시로부터 전액수령하였습니다.
4. 그러나 2020년 5월 캠프페이지 유적발굴과정에서 다량의 유류통과 기름성분이 발견되어 토양시료채취 결과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9월 국방부는 범대위와 춘천시, 허영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캠프페이지 오염조사와 완전한 정화를 위한 민간검증단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실시한 1차오염조사결과에 따르면 8,199m<sup>2</sup>의 면적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고, 오염토양은 총 15,972ton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 또한 2021년 6월 4일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현재의 부실정화의혹을 받는 토양들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춘천시의 정화책임이 없고, 국방부에게 정화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류 오염은 경유에 의한 것으로 풍화 정도를 감안했을 때 오염시기가 최소 15년이상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둘째, 오염지역은 점토질 세립토가 불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어 유류 오염이 국부적으로 잔류했을 가능성이 크고, 지하수 흐름이 원활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심도 2-3m에서 확인되는 바, 이격된 위치의 오염원에서 유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오염시기는 해당 부지에 주둔한 미군 부대의 오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에 따라 국방부는 사안의 유류 오염과 관련하여 토양환경

보전법 제10조의 4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판단됨

7. 국방부의 책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춘천시는 1,700억원을 혈세를 들여 캠프페이지 부지를 매입하고서도 반환 후 20여년째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가 완벽한 정화를 했다고 했지만 오염된 토양 위에서 건강권을 위협받으며 아이들과 가족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춘천시민들은 배상요구 등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8. 국방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우선 춘천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사과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오염조사비용을 춘천시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국방부는 약속대로 오염조사비용을 포함한 완벽한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방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를 통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7. 23.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 □ 민간검증단 활동 결과

차수	일 시	참석인원	비 고
1차	‘20.11.30.(월) 13:20 ~ 17:00	8명	
2차	‘20.12.23.(수) 10:00 ~ 15:00	8명	
3차	‘20.12.30.(수)	9명	
4차	‘21.01.14.(목)	5명	
5차	‘21.01.28.(목)	5명	
6차	‘21. 2.18.(목) 10:00 ~ 12:00	8명	
7차	‘21. 2.26.(금) 10:00 ~ 12:00	5명	
8차	‘21. 3. 5.(금) 10:00 ~ 11:30	6명	
9차	‘21. 4. 1.(목) 09:30 ~ 11:50	8명	
10차	‘21. 6. 1.(목) 09:30 ~ 14:30	8명	
11차	‘21. 6.28.(월) 09:30 ~ 12:00	8명	
12차	‘21. 7.20.(화) 09:30 ~ 12:00	8명	
13차	‘21. 8.13.(금) 09:30 ~ 12:00	9명	
14차	‘21.10. 8.(금) 09:00 ~ 12:00	9명	
15차	‘21.10.25.(월) 12:00 ~ 15:00	7명	

## < 제1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 '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 '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 '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5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3명) 찬성 의결

#### □ 회의개요

- 일시 : '20.11.30.(월) 13:20 ~ 17:00
- 장소 : 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캠페이지 확인 병행
-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 1/강원대 이진용 교수)

#### □ 회의결과

##### 1. 의결사항

가. 단장 선출: 한양대학교 박재우 교수(의원실 추천위원)

나. 토양오염조사 범위 설정을 위한 유관기관 참석 PPT 설명 요청

- 토양오염 최초조사(⇒한국환경공단)
- 토양오염 추가조사 및 정화(⇒한국농어촌공사)
- 문화재 시굴 조사 및 정밀조사(⇒공공시설과)

다. 검증단 운영규정 제2조의 검증단 활동 내용 변경 요청

- (사유) 검증단의 6개월(최장 9개월) 짧은 활동기간 내 토양정밀조사  
용역 완료 불가⇒기간 내 검증단 활동 가능한 내용으로 변경
- (변경) 기존 정화 실태조사 및 토양오염조사 범위 제시로 한정

라. 2차 회의 의결해야 할 사항 결정

- 정밀조사 범위 및 밀도, 실태조사 발주처 결정, 검증단에서 실태조사업체  
의뢰 가능 여부

##### 2. 의결사항 후속 조치

- 의결사항 협조 공문 발송 : 2020.12.7.



의결사항	협조사항	수신처
1) 검증단 운영규정 일부 개정	개정안 검토 회신	국방부, 시의회 법대위
2) 토영오염조사 및 정화, 문화재 시굴조사 관련자 2차회의 참석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춘천시 공공시설과 관련자 2차회의 참석 요청	국방부, 공공시설과
3) 검증단 실태조사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검증단에서 실태조사 업체 의뢰 가능 여부 - 춘천시 실태조사 선 진행 후 국방부 비용부담 가능 여부	국방부

### 〈의결사항 협조 결과〉

1) 검증단 운영 규정 일부 개정 ⇒ 국방부, 시의회, 법대위 동의

2) 토영오염조사 및 정화, 문화재 시굴 조사 관련 회의 참석 요청

- 참석 확정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 참석 미정 : 공공시설과(협의 중)

3) 검증단 실태조사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예산이 이미 확보된 국방부 추진이 시일단축에 더 유리하며 검증단에서 실태조사 업체 의뢰는 불가(수의계약 이상 금액 소요 예상)

### □ 행정사항

○ 1차 회의 자료 관리 철저 : 영상녹화자료,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 등

○ 2차 회의 : 12.23(수) 10:00 ~

- 회의장 예약 완료: 4층 소회의실(1차 회의 장소와 동일)

### 〈 관련 사진 〉



4층 소회의실 회의 전경



캠핑페이지 현장 확인 전경

## < 제2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0.12.23.(수) 10:00 ~ 15:00 (본관 4층 소회의실)
2.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2(신경희 박사, 서용찬 교수)
  - 초빙 : 6명(한국환경공단 2, 농어촌공사 3, 공공시설과 1)

#### □ 회의결과

##### 1. 진행순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 ~ 11:45( 45')	• 초빙기관 현황 발표	공단, 농어촌공사, 공공시설과
11:45 ~ 11:30( 45')	• 중식 및 휴식	회의실(샌드위치), 코로나 감안
11:30 ~ 15:00(210')	• 검증단 회의(비공개)	조사범위 및 밀도 의결

##### 2. 의결사항

안건	주요내용	비고
정밀조사 (굴착, 시추)	1. 5,000mg/kg-soil이상 중점오염 지역을 묶어서 5군데를 선정하고 이 지역 외곽 5~10미터를 확대, 사각 박스 형태의 Hot-spot구역으로 설정하여 2. Hot-spot 면적에 따라 1-2개의 트렌치를 지하수 흐름 수직 방향으로 굴착함과 아울러, 3. 굴착 불가 부분은 밀도(50㎡당 1개의 정밀조사 시료채취) 및 심도(과거 해당 지역의 오염 깊이 이상)의 시추조사 실시	전원 찬성
개황조사 (시추)	1. 대상: Hot-spot 및 문화재 Open cut 구역을 제외한 전부지 2. 조사: 밀도(300㎡당 1개의 시료 채취), 심도(지표로부터~지하수까지)	"
기타조사 (시추)	1. 대상: 기존 신규 오염토 발생지점, 문화재 발굴 조사지점(개연성 부분), 신문 보도지점, 유류통 발견지점 2. 조사: 밀도(50㎡당 1개의 시료 채취), 심도(지표로부터~지하수까지)	"
지 하 수 영향조사	■ 금회 신규 오염토 발생지역 및 모니터링 지하수 관정 설치	"
향후계획	■ 제3회 회의 논의 대상 의결 - 대상: 지하매설물 탐사, 방사능 조사, 고엽제 조사	"

## □ 행정사항

- 2차회의 의결사항 세부논의 임시회의 개최 : '20.12.30.(수)
- 정밀조사(굴착, 시추) 및 개황조사(시추) 계획에 따른 문화재 관련법 검토 요청:  
공공시설과, 녹지공원과
- 국비 반납이 없도록 공사 시급 부분 우선 조사: 필요시 분리발주

## < 관련 사진 >



한국환경공단 토양오염조사 사례 발표



농어촌공사 토양정화 사례 발표



공공시설과 문화재조사 사례 발표



각 분야 사례 발표 후 검증단 회의

## < 제3~5차 회의 >

### 임시회의(3~5차)

( 3차 ) 민간검증단 2차 정기회의 의결사항 세부논의 : 市 자체

(4~5차) 민간검증단 3차 임시회의 세부사항 부처협의 : 국방부, 문화재청

#### □ 회의개요

임시회의	주요내용	비고
- 3차 - (‘2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조사 : 개략조사 및 정밀조사 위치, 밀도, 방법 결정</li> <li>■ 지하수조사 : 모니터링 관정(100개소) 설치</li> <li>■ 기타 : 매장문화재법 별도협의 필요 의견(문화콘텐츠과)</li> </ul> <p>※ &lt; 참석자 : 9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서 : 신영진 · 박소라, 김태홍, 박승기 · 김수영, 조은빈</li> <li>- 검증단(위원) : 김용현 원장, 이진용 교수, 김휘중 소장</li> </ul>	市 자체 (부서합동)
- 4차 - (‘21.0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 지하수, 중금속조사 : 이견 없음</li> <li>■ 지하 매설물 조사 : 실효성 없음, 발생 때마다 책임처리</li> <li>■ 고엽제(다이옥신, 페놀) : 3차 정기회의 재논의(과거 11년 조사 결과 우선 검토 요청)</li> </ul> <p>※ &lt; 참석자 : 5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천시 : 신영진, 박소라</li> <li>- 국방부 : 손상혁 중령 / 농어촌공사임회 : 고민석 과장</li> <li>- 검증단(위원) : 김용현 원장</li> </ul>	국방부 (부처협의)
- 5차 - (‘21.0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추개수</li> <li>■ 시추공의 위치는 최대산 기준 시굴조사 Tr.를 이용</li> <li>■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li> </ul> <p>※ &lt; 참석자 : 5명 &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천시 : 신영진, 이정예 · 김수영</li> <li>- 문화재청 : 박윤정 과장, 김혜정 학예연구사</li> <li>- 검증단(위원) : 김용현 원장</li> </ul>	문화재청 (부처협의)

□ 행정사항

1. [국방부], [문화재청] 협의 사항을 제3차 민간검증단 회의(예정) 안건 상정

- 국방부 : 다이옥신, 페놀, 지하매설물, 방사능 조사 필요성
  - 필요시 국방부(농어촌공사) 참석 설명, 춘천시 자료 준비(방사능)
- 문화재청 : 미세먼지 차단 숲 부지 토양조사 계획 조정사항 동의
  - 필요시 문화재 전문기관 자문 결과 설명(녹지공원과)

## < 제6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2.18.(목) 10:00 ~ 12:00
2. 장소 : 본관 4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1(이진용 교수)
  - 초빙 : 2명(한국농어촌공사 이상화 차장 외 1명)
  - 과거 정화 사례 발표; 방사능, 고엽제, 다이옥신

#### □ 회의결과

의결	의결사유(농어촌공사 및 춘천시 설명내용 참조)	비고
1. 방사능, 고엽제, 다이옥신 조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5.5.24.~205.5.27. 한국환경공단 조사결과 인위적인 방사성 핵종에 의한 오염은 없으며 오염도는 원자력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미만</li> <li>○ 과거(2011.7.3.~2011.10.18.)춘천캠프페이지 민·관·군 공동조사단 조사 결과, 고엽제 의심물질 매물·살포 및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기초 및 개황 조사결과 캠프페이지 내에서 인위적인 고엽제성분 및 방사능오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 조사 불필요 판단으로 조사단 활동 종결</li> </ul>	농어촌공사 설명
2. 지하매설물 조사 방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시굴 조사로 많은 부분이 확인되었고 이미 발생된 일부 폐기물을 포함하여 향후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을 국방부에서 전적으로 처리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므로 향후 굴착계획이 없는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지구중 핫스팟 지역을 중심으로 정밀도가 낮은 GPR방식을 대신하여 굴착(트렌치) 방식으로 조사.</li> <li>- 단, 트렌치 조사구역 확대될 수 있음(농어촌공사 제공자료 분석 후 결정)</li> </ul>	춘천시 설명
3.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초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부지 토양조사 착수보고 전체회의 전까지 트렌치 위치 확정을 위한 검증단 임시회의를 2월중 개최</li> </ul>	위원전원 동의

## < 제7차 회의 >

### 임시회 목적

2021.2.18. 민간검증단 제6차(정기)회의 회의록 제5호에 근거하여 미세먼지 차단 숲 공사구간 트렌치 구역 확정 등 세부사항 논의

#### □ 회의개요

1. 일시 : '21.2.26.(금) 10:00 ~ 12:00
2. 장소 : 본관 5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5명(위원3, 간사1, 경영지원과 지하수 담당 1)

#### □ 회의결과

의결	주요내용	비고
1. 모니터링용 지하수관정 설치	○ 강원대학교 이진용 교수의 사후 모니터링 지하수 관정 설치 필요 의견에 따라 관련부서(경영지원과) 담당(김진현)과 협의하여 수질측정망 용도로 5개소 전후 설치하기로 함.(금회 지하수 조사에 세부위치 추후 확정)	경영지원과 소관사항
2. 트렌치 설치위치 확정	○ 과거 정화구역 굴착 경계면을 따라 트렌치를 설치하여 시료채취 및 지하매설물을 확인하기로 함.	붙임3 도면참조
3. 시료채취 불가지역 확인설명	○ 미세먼지 차단 숲(문화재 발굴 유예구간)에 대한 문화재 청 협의 결과, 시료채취 불가지역에 대하여 시료채취 제외하기로 함. - 단, 향후 해당지역에서 오염물질이 발견되는 즉시 해당 부서로 알려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문을 사업부서에 시행하도록 함.	붙임3 도면참조

#### □ 행정사항

##### ○ 의결사항 후속 조치 문서 시행

- 모니터링 지하수 설치 관련 안내: 경영지원과
- 문화재 발굴유예구역 문화재 조사 또는 개발시 오염물질 발견되면 즉시 필요 조치 안내: 문화콘텐츠과, 공공시설과, 녹지공원과

## < 제8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 '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3.5.(금) 10:00 ~ 11:30
  2. 장소 : 본관 5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6명(위원5, 간사1), 불참1(이진용 교수)
- ※ 토양조사용역(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착수보고 병행
- 보고자 : 현장대리인 이상필 박사

#### □ 회의결과

##### 1. 의결사항

####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착수보고 조치사항을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

##### [※ 회람결과 소수의견 별첨]

- 4개의 다수업체 참여에 따른 분석오차 해소를 위해 업체1(시료채취), 업체2(시료 기록 및 분취), 업체3,4(시료분석) 업무 구분 시행
- 분석오차 및 QA/QC 차이 해소를 위해 오염물질 종류별 강원대(TPH), 상지대(BTEX) 구분하여 실험
- TCE, PCE의 특성(무거움)을 고려하여 암반 혹은 그와 상응하는 깊이로 지하수 관정을 착정하고 현장판단 깊이 조절
- 현장조사 공개참관(시의회, 민간단체, 언론, 국방부 등)에 강원대학교 협조
- 지하수 시료채취 시 현장 수질(pH, EC, ORP, DO) 측정 주문
- 민간검증단 위원 현장방문 협조(춘천시 접수 → 강원대 전달)
- 시료채취 불가지역(문화재 등) 사전측량 실시로 불미스러운일 방지 주문



- 시료분석 결과 기준의 토양 40%, 중금속 70% 이상은 도보건환경연구원 교차검증
- 각종 분석 원자료를 검증단에 제출
- 수리전도도(k), 지하수위 등 측정하여 지하수 흐름방향 속도 등 산출
- 시료채취 우선순위는 춘천시와 협의하여 결정
- 지하수 관련 사항은 강원대 이진용 고수의 자문을 받아 시행
- 폐놀 7점과 다이옥신 3점은 제외
- 중금속 시료채취는 핸드오거가 아닌 항타기를 사용
- 시료채취 자료(사진, 동영상 시척록부 등) 남기고 보고서에 적시

## 2. 차기 회의 안건 상정

- 문화재청 협의 결과 토양조사 제외지역에 대한 조사방안 재논의
- 2020.5.6.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
- 지난 7차 회의 결정 사항 중 추가 오염물질 조사 여부 및 물량 재논의
- 의결사항 이행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행 소관사항 공문 시행 : 기 완료
  - 시민단체 등 조사 현장 참관 공문 시행 : 3월중
  - 회의결과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 제9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4.1.(목) 09:30 ~ 11:50
  2. 장소 : 본관 5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1(한국과학기술연구원 최재영 박사)
- ※ 현장 확인 병행 ⇒ 한림대학교 김헌기 교수 미참석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1. 고엽제, 방사능, 다이옥신 조사방안 재논의
  - 문화재조사(OPEN CUT), 토양 트랜치조사 중 매립폐기물 성분조사시 다이옥신 고엽제 포함조사
  - TCE, PCE는 지하수에서 기준초과 시 해당지역 시료채취범위 확대 토양과 지하수를 포함 조사
2. 2020.5.6. 문화재발굴과정 새로운 오염물질 발견에 따른 원인 규명
  - 당초 분석한 세부자료를 민간검증단에 미리 배포하여 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논의
3. 1단계 조사 문화재구역 정밀조사 및 시추봉 발견 폐기물조사
  - 문화재 정밀조사로 토양정밀조사 같음, 굴삭기 동원 폐기물 조사
4. 문화재 보호구역 시료채취 불가지역 내 29개의 새로채취 가능 협의
  - 문화재청 승인구역 내 토양조사 추가 실시 타당
5. 문화재 정밀조사구역(OPEN CUT) 확대에 따른 조사축소 해결방안
  - 문화재정밀조사 시 취기 또는 폐기물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확인(샘플 채취) 및 조치하는 것으로 같음

## 6. 국방부 요청사항 위원 설명

- 소회의 결정 사항은 반드시 전체 회의에서 승인

## 7. 현장확인

- 1단계 조사 초과지역 및 폐기물 발생지역 확인, 시료채취 확인

## □ 행정사항

### ○ 의결사항 후속조치

- 다이옥신, 고엽제 조사 의결사항 국방부 공문 시행

### ○ 10차회의 안건 상정

- 9차회의 회의록 회람 결과 소수의견(김휘중 박사) : 문화재 정밀조사 외 지역에 대하여 open cut 실시
- 오염 초과지역 정밀조사 밀도 결정 : 범정사항 검토
- 2차부지 착수보고(예정)에 따른 조사방향 주문

###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 제10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6.1.(목) 09:30 ~ 14:30
2. 장소 : 본관 3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1(서울시립대학교 이재영 교수)  
※ 1차 조사 결과 언론브리핑 병행 : 발표(단장), 배석(일부위원)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1. 1차 부지 토양조사 용역결과 검증단 조치사항
  - 정밀조사 분석완료 후 오염물량 및 지도 만들어 검증단 보고
  - 토양조사 표고 차이를 타기관 조사자료와 비교 통일하여 표기 보고
  - 시료 교차검증 이행 및 결과 보고
2. 1차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농어촌공사 의견 발표 조치
  - 발표내용에 대하여 차기(11차) 검증단 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함.
3. 1차 용역의 토양조사 시 민간검증단 위원(김휘중 박사) 참관기 발표
  - 정화구역 내, 외 오염물질 발생 현황
4. 2차 부지 용역의 착수 보고 조치사항
  - 트랜치 일부제외 및 조정(시료채취 및 지하수 관정설치 대체)
  - T/S부지중 일부 시료채취 불가지역 제외
  - 시료 교란 없도록 일부지역 배수 실시
  - 문화재 편입구간 조사 제외
  - 시료 교차검증 10% 실시
5. 춘천시 요청사항
  - 물놀이장 부근 잔디마당 중금속 조사 승인

□ 행정사항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관련 사진 >



개회(단장 : 박재우 교수)



강원대 1차 용역 결과발표



1차 용역 농어촌공사 의견 발표



1차 용역 김희중 교수 참관기 발표



2차 용역 상지대학교 착수보고



1차 용역 결과 민간검증단 언론 발표

## < 제11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6.28.(월) 09:30 ~ 12:00
2. 장소 : 본관 5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1(상지대학교 서용찬 객원교수)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1. 제10차 검증단 회의 강원대학교 요청사항 발표
  - 정밀조사 진행 중이므로 최종 용역보고서 발표 : 제12차 회의(7월)
  - 토양조사 표고 차이 등도 제12차 회의시 정리 발표
2. 제10차 민간검증단 회의 농어촌공사 발표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
  - 발표자 : 검증위원 김휘중 박사
  - 의결사항 : 오염발견 위치에 대한 의견 및 제도개선 권고
3. 과거 정화 완료 후 '20년 새로운 오염 토양 발견에 관한 검증단 의견서
  - 과거 제도 내에서 조사가 된 것은 인정이 되나 넓은 부지를 단시간에 조사해야 하는 시간적 한계로 인하여 보다 충분한 조사의 아쉬움이 있음.
  - 다만, 캠프페이지 오염은 폐기물 드럼통 발견 및 제1차 토양조사 용역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미군에 의한 오염으로 판단되는바 국방부 책임으로 정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 행정사항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차기 제12차 정기회의(7.20.) 안건
  - 강원대학교 용역 최종보고 : 오염지도, 기관별 표고차이 정리 등
  - 상지대 용역 중간보고 : 용역진행 사항 보고 및 검증단 의견 수렴

## < 관련 사진 >



강원대학교 발표



강원대학교 발표 질의 답변



김휘중 박사 발표



새로운 오염토에 대한 의견서 작성

## < 제12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7.20.(화) 09:30 ~ 12:00
2. 장소 : 본관 3층 중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8명(위원7, 간사1), 불참1(상지대학교 서용찬 객원교수)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1. 1차 부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최종 보고
  - 열탈착 물량은 TPH 23,540mg/kg의 구역만 재산성
  - 토양경작 반출정화 규정 명기(도시지역안의 건설공사 시 가능)
  - 세척물량 보고서에서 제외
  - 교차분석에 관한 사항: 20% 초과, 재분석(20% 이내, 높은 농도 선정)
2. 2차 부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중간 보고
  - 1차부지 지하수 전기전도도(EC) 높은 이유 이진용 위원 해석
  - 교차분석에 대한 자료 재정리 : 1차 용역 사례 참조
  - 1차조사 구역 추가조사 등 비용추계(1천 3백만원) 발표
    - \* 지하수 재검사 : 시료채취 및 실험(3백만원) + 항목추가(5백만원)
    - \* 1, 2차 조사 지역 좌표 통일 측량비 : 5백만원
  - 트렌치 조사는 오염지역 정밀조사 이후 실시: 시료 교란 예방
3. 2차 부지 조상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 발표(김휘중 위원)
  - 핫스팟 지역 문화재 정밀조사 전환 해제 필요
  - 어린이 물놀이장 인근 토양조사 추가
4. 기타의견
  - 토양조사 및 정화방향, 표고차이 정리, 조사의 미비한 점은 향후 사면조사 등 보완하도록 보고서 명기, 교차분석에 관한 사항, 회의자료 사전 배포 등



## □ 행정사항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의결사항 후속 조치 공문발송 완료
  - 디자인과: 어린이물놀이장 토양조사 추가 검토 요청
  - 공공시설과: 중점오염지역 문화재 정밀조사구역 전환 해제 검토 요청

## < 관련 사진 >

	
강원대학교 용역 발표	강원대학교 용역 발표 토의
	
상지대 용역 중간 발표	김휘중 박사 추가조사, 문화재 해제 발표
	
이진용 교수 지하수 EC 높은 원인설명	위원 상호 마무리 토의

## < 제13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8.13.(금) 09:30 ~ 12:00
2. 장소 : 본관 3층 중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9명(위원8, 간사1), 불참 없음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1. 2차 부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중간보고(2차)
  - 문화재구역 및 교란지역에 대하여 개략조사만 실시하고 종결
  - ※ 조사내용대로 오염지도 확정 및 오염이 확인되는 경우 문화재 구역은 향후 문화재 정밀조사와 연계하여 정화
2. 1차 부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최종 보고서 검토
  - 8월 말까지 모든 분석자료는 보고서에 명기하고 정리 마무리
  - 문화재 유존지역(3개소) 정화공사 물량에서 제외 표기
  - 보고서 작성시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을 포함할 것
  - 보고서의 정화비용은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삭제
  - 표지 내용 등 전반적인 수정 주문
3. 민간검증단 운영기간 연장요청(국방부) 검토결과
  - 2차 조사 최종보고서 완료시 까지 연장 의견
  - 단, 2차조사 종료시점에 전체부지의 검증단 검토의견서 작성

#### 4. 기타의견

- 회의 안전에 대하여는 사전공지 이행, 조사는 불가피한 사안을 제외하고 당초(안) 대로 진행 타당, 차기 회의(9.9) 강원대 최종보고서 검토 및 상지대 초안 보고서 검토(\* 14차 회의 일주일 전 관련 보고서를 메일과 종이 문서로 위원들에게 발송), 강원대 최종보고서 검토를 위한 세부적 검토자 선정 등

#### □ 행정사항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민간검증단 연장 운영 의결사항 국방부 공문발송
  - 2차 조사부지 용역 준공시 까지 연장

#### < 관련 사진 >

	
춘천시 검증단 연장 국방부 요청 설명	강원대학교 용역 발표
	
강원대학교 용역보고서 검토 수정	상지대 용역 수행 중간 보고
	
문화재 구간 조사 방법 재논의	이진용 교수 지하수 망간 높은 원인설명

## < 제14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10.8.(금) 09:00 ~ 12:00
2. 장소 : 본관 5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9명(위원8, 간사1), 불참 없음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 1. 2차 부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중간 보고(3차)

- 봄내체육관과 꿈자람물정원 등 일부지역의 오염지도는 오염위치 및 농도만 표기하고 향후 실시설계를 통하여 정화공사 실시
- ※ 높은 오염농도 대비 시료 채취 수 부족으로 오염면적 과다 표기 되어  
오염량 과다 산출 방지 차원
- 문화재 발굴지역 등 시료채취 불가지역은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서에 명기할 것.

##### 2. 1차 부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 일부 오탈자 추가 수정, 전문용어 한글로 풀어서 작성, 실험없이 기재된 토양 비중은 보고서에서 제외
- 20,000mg/kg 이상 오염된 토양은 열탈착 공법으로 정화

##### 3. 기타사항

- 최종보고회는 10월 25일 개최
- 2차 부지 민간검증단 의견서는 사전 회람을 거쳐 차기 회의 때 확정
- 1,2차 보고서는 사전에 검증단에 제출하여 차기 회의 때 확정

□ 행정사항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2차 조사부지 용역 완료 후 국방부 정화 및 검증비용 예산 협의

< 관련 사진 >

	
민간검증단 회의 개최	상지대학교 용역 중간발표(3차)
	
상지대학교 발표 토의(김휘중 박사)	상지대학교 발표 토의(써퍼 정리)
	
강원대학교 최종용역 보고 및 토의	춘천시 안내사항 공지

## < 제15차 회의 >

### 《 민간검증단 구성·운영 개요 》

-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2차 부지 토양조사 용역 준공 시까지 기간 연장(국방부 요청)
-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사퇴

#### □ 회의개요

1. 일시 : '21.10.25.(월) 12:00 ~ 15:00
2. 장소 : 본관 5층 소회의실(비공개 회의)
3. 참석 : 7명(위원6, 간사1), 불참2(김용현 원장, 이진용 교수)

※ 2차 조사 결과 검증단 언론브리핑 병행

#### □ 회의결과

#### << 의결사항 >>

##### 1. 2차 부지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최종 보고

- 봄내체육관과 꿈자람물정원 및 문화재 구간 오염지도는 실제 샘플링하여 조사된 지역만 표기하고 그 외 조사가 안 된 지역으로 그려진 오염지도는 삭제 처리하되 추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하도록 함
- 단, 문화재 발굴구역 등 시료채취 불가 지역은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서에 명기하도록 함.
- 기타 상지대 보고서 리뷰에 관한 사항에 사후 조치를 주문 함.

##### 2. 2차 부지 조사결과 민간검증단 의견서 확정 함.

- 사전에 검증위원별 메일 발송 의견수렴(기술검토) 완료 함

##### 3. 2차 부지 민간검증단 언론브리핑 자료 작성 함.

- 사전에 검증위원별 메일 발송 의견수렴(내용검토) 완료 함

※ 2차 조사 결과 언론 브리핑 및 기자단 질의 응답

- 발표(박재우 단장), 배석(일부 위원)



## □ 회의결과

- 회의록 공표 : 시민단체, 시의회, 국방부, 언론 등
- 2차 조사부지 용역 완료에 따른 국방부 예산 협의: 연내

## < 관련 사진 >



상지대학교 용역 최종발표



상지대학교 용역발표 토론



2차 부지 검증단 의견서 논의



2차 부지 검증단 의견서 확정



검증단 언론 발표문 확정



검증단 언론 발표

## 5 부서별 추진성과

### □ 환경정책과

#### 1. 민간검증단 운영개요

- (구성) 일자('20.11.30. 월), 인원(10명 / 위원9, 간사1)
- (운영) 6개월('21.5.29. 토) + 3개월(1회한 연장가능:'21.8.29. 일)
- (회의) 정기회(월 1회). 임시회(협의 또는 검증이 필요한 경우)
- (의결) 재적 과반수(4명) 출석 개의 ⇨ 출석 과반수(2명) 찬성 의결  
⇒ 환경부 추천위원 중 1명(KEI 신경희 박사) 개인 사정 자진 탈퇴

#### 2. 운영상황

회의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0. 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장선출, 운영규정변경요청(재검증 불가, 기존조사 실패조사 한정), 당초 토양조사, 정화업체(환경공단, 농어촌공사) 및 공공시설과(문화재) 2차회의 초빙 결정, 페이지 현장 확인(위원 9명 전체)</li> </ul>	1차 (정기)
2020. 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밀조사(굴착, 시추), 개황조사(시추), 지하수조사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초빙 조사 및 정화사례 우선 청취</li> <li>- 세부 조사범위 및 방법 임시회 별도소집 의결 위임</li> </ul> </li> <li>■ 차기 전체 회의 논의안건 : 지하매설물, 방사능, 고엽제</li> </ul>	2차 (정기)
2020. 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조사 : 개략조사 및 정밀조사 위치, 밀도, 방법 결정</li> <li>■ 지하수조사 : 모니터링 관정(100개소) 설치</li> </ul>	3차 (임시)
2021. 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의결사항에 대한 “국방부”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 지하수, 중금속조사 : 이견 없음</li> <li>- 지하 매설물 조사 : 실효성 없음, 발생 때마다 책임처리</li> <li>- 고엽제, 다이옥신 과거 조사 결과 우선 검토 요청</li> </ul> </li> </ul>	4차 (임시)
2021. 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차 의결사항에 대한 “문화재청”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양오염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추 개수</li> <li>- 시추공의 위치는 최대한 기존 시굴조사 Tr.를 이용</li> <li>-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추진</li> </ul> </li> </ul>	5차 (임시)



회의일자	주요내용	비고
2021. 2.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어촌공사 초빙 기존 조사사례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능, 고엽제, 다이옥신 조사 제외</li> </ul> </li> <li>■ 지하매설물 조사방법 변경 : GBR(정밀도 낮음)→트렌치</li> </ul> ※ 트렌치 구역 확정은 임시회 소집 의결 위임	6차 (정기)
2021.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트렌치 구역 확정을 위한 임시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니터링용 지하수관정 설치: 경영지원과 참석 설명</li> <li>- 트렌치 설치위치 확정 : 과거 중점오염지역(약 300m)</li> <li>- 시료채취 불가지역(문화재관리청 협의결과) 확인</li> </ul> </li> </ul>	7차 (임시)
2021.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토양조사 착수보고 및 의견 전달</li> <li>■ 차기 회의 안건 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엽제, 다이옥신 조사여부 재논의(발표: 김휘중 박사)</li> <li>- 2020.5.6.신규 오염토 발견 정화책임자 규명</li> </ul> </li> </ul>	8차 (정기)

### 3. 오염재조사 및 향후과제(\*기존방식과 비교)

- 기존 조사근거 : 환경부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

⇒ 조사기준 : 개황조사 1개소/1,000m<sup>2</sup>, 세부조사 1개소/500m<sup>2</sup>

- 재조사 근거 : 민건검증단 회의결과 반영

⇒ 조사실시 : 개황조사 1개소/300m<sup>2</sup>, 세부조사 1개소/50m<sup>2</sup>

※ 조사밀도 당초 보다 7배 강화 재조사 : (① + ②) / 2 = 6.65배

① 개황조사(기존/재조사) :  $1,000\text{m}^2/300\text{m}^2 = 3.3\text{배}$

② 세부조사(기존/재조사) :  $500\text{m}^2/50\text{m}^2 = 10\text{배}$

## □ 녹지공원과

### 1.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개요

구 분	미세먼지 차단숲(1차)	미세먼지 차단숲(2차)
사업위치	근화동 127-1번지 일원	근화동 206-2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9년 ~ 2021년	2020년 ~ 2022년
사 업 비	150억원(국75, 도22.5, 시52.5)	120억원(국60, 도18, 시42)
사 업 량	15ha	12ha
사업선정	2018.10.26.	2019.9.10.

### 2. 예산현황

- 예산액 : 100억원(1차/2년차/90억원, 2차/1년차/10억원)
- 집행액 : 13억원

### 【집행내역】

(단위: ha, 억원)

사 업 명	교부년도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고
소 계		10	100	13	87	
미세먼지차단숲 [(구)캠페이지]	2019	3	30	13 (이월, 선금지급)		1차/3년 (15ha, 150억원)
	2020	6	60	-		
	2020	1	10	-		2차/3년 (12ha, 120억원)

※ '19.10.0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선금 : 2억원

'20.03.27. 1차(1구역) 조성사업 선금 : 10억원

'20.06.22. 1차 구역 울타리 및 분진망 설치비 : 1억원

### 3. 추진상황

- 2019.1.18.~2020.2.7. : 문화재 발굴유예 8차 협의(문화재청)
- 2019.8.2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5ha) 착수

※용역사: 한국종합기술/금389백만원, 용역기간: 2019.8.21.~2020.1.17., 중지일: 2019.12.30.

- 2019.12.3. : 미세먼지 차단숲 1차(1구역/3ha) 실시설계 완료
- 2020.1.6. : 미세먼지 차단숲 1차(1구역/3ha) 착공
- 2020.1.8. : 문화재 발굴유예 협의에 따른 공사 중지
- 2020.2.21. :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유예 승인
- 2020.3.19. : 공사중지 해제 및 추진
- 2020.4.20.~6.22. : 미세먼지차단숲 구역 울타리 및 분진망 설치
- 2020.5.6. : 구)캠프페이지 오염 언론보도 게재(강원일보)
- 2020.5.8. : 구)캠프페이지 시민복합공원 공원세부조성계획결정고시
- 2020.7.22. : 미세먼지 차단숲 1차(1구역/3ha) 공사 중지
- 2020.10.28 : 미세먼지 차단숲 2차 대상지 내 폐기름통 발견
- 2021.3.15. : 미세먼지차단숲 토양오염원 시추

#### 4. 행정이행

- 2020.4.21. : 기반 조성을 위한 공원 점용허가(12.5ha)
- 2021.2.5. : 실시설계 경제성(VE)검토 용역 준공(100억원이상)
  - ☞ 강원도건설기술심의 '21.4.~5. 상정 예정
- 2021.2.26.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평가 제출
- 2021.3.16.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원안 동의

#### 5. 향후계획

- 2021. 4월 : 토양오염 분석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

## □ 공공시설과

### 1.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추진현황

#### ■ 추진상황 <오염원 발견 이후>

- 2020.05.05. : 시굴조사구역 트렌치에서 기름띠 발견
- 2020.05.31. : 시굴조사구역 트렌치에서 아스콘포장층 발견
- 2020.10.26. : 정밀발굴조사 2구역에서 폐유류통 27개 발견
- 2020.10.27. :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현장 오염원 발생보고
  - 현장상황 : 2020년 10월 26일 캠프페이지 문화재발굴 2구역에서 미군부대가 사용하던 기름통 30여개 발견(당초 기름띠 발견장소에서 50m 지점)
  - 조치사항 : 현장 보존조치 및 기름통 보관, 환경정책과 업무협의 요청,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장조사(조사반구성 : 공공시설과,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한국농어촌공사)
- 2020.10.29.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지(문화재청→시)
  - 유해물질 조사 및 조사원 안전대책 검토
- 2020.12.11. : 정밀발굴조사용역(2차분) 용역 중지(공공시설과→용역사)
- 2021.01.21. : 국방부, 문화재청, 춘천시 합동회의(국방부)
  -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재개를 위한 기관 협의
  - ※ 문화재청 의견 : 문화재 조사원 안전성 확보 및 안전조치 선행할 것
- 2021.01.30. : 국방부, 문화재청, 춘천시 협의에 따른 자료 작성
  - 협의지역(폐유류통 발견된 2구역 및 3구역 일부) 시추 및 시료분석
  - 전문가 의견서 자료수집
- 2021.02.10. : 시료채취 및 분석(상지대학교 의뢰)
  - 분석결과 : 2구역 굴착지역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토양오염우려기준치(500mg/kg) 이하인 275mg/kg 검출(1개 시료)
  - 나머지 오염원은 불검출
- 2021.02.15.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지 해제 요청(시→문화재청)
  - 토양시료 분석 결과 및 안전조치 계획 제출
  - 국방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오염정화 완료한 보고서 사본 첨부
- 2021.02.25.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지 해제 보완(문화재청→시)
  - 토양시료 분석결과 안전성 및 발굴조사자 안전성 여부 확인

- 2021.03.19.: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지 해제 재요청(시→문화재청)
  - 토양환경보전법 상 안전성 법적근거 및 시료분석 결과 제출
- 2021.03.25.: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중지 해제(문화재청→시)
- 2021.04.07.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3구역 2차분) 재착수
- 2021.04.21.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1·2구역 및 3구역 1차분) 재착수
- 2021.04.21.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1·2·3구역) 설계변경
  - 차수간 과업내용 및 과업량, 과업기간 등 조정(문화재청 발굴허가조건 반영)
- 2021.05.14.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1·2구역 및 3구역 2차분) 중지
  - 중지사유 : 문화재청 발굴허가조건(동일시대유구 동시 조사) 반영을 위하여 3구역 1차분을 제외한 전구역 용역중지 후 순차적 용역재개 예정
- 2021.05.27.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3구역 1차분) 중지
  - 중지사유 :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 완료 시까지 용역중지
- 2021.06.02. : 문화재청 현지조사
  - 조사내용 : 민원제기 내용 확인 및 유적관리, 보호방안 검토 등
  - 조치사항 : 향후 장마철의 배수처리, 유구의 안전관리, 임시 적치된 유물의 방호, 발굴조사 현장 출입자 관리 등 유적 보존 방안 대책 필요
- ⇒ 유적 보존방안 제출 완료(2021.06.10.)
- 2021.06.14.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1·2·3구역 1차분) 재착수
  - 목적 : 전문가 검토회의 사전 준비
- 2021.06.15.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구역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사업내용 : 가설재울타리(웬스+방진망) 설치 L=3.34km
  - 목     적 : 유적 보호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 설치위치 : 이용중인 시설(봄내체육관, 꿈자람물정원, 춘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춘천장애인스포츠센터)을 제외한 모든 구간
- 2021.06.30. : 문화재청 현지조사(발굴조사 결과 및 유적 보존방안 등 검토)
  - 제토된 유구들에 대하여 마무리 조사 후 원형보존에 준하는 형태로 복토
  - 복토방법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검토를 받을 것
- 2021.07.21.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
  - 현재 조사된 문화재에 대하여 현지 원형보존(임시복토) 결정
- 2021.08.03. : 안전시설물(가설재울타리) 구입
  - 설치규격 및 수량 : 웬스+방진망(W2000×H4000) L=2.49km

- 2021.08.27. : 정밀발굴조사(1,2,3구역 1차분) 용역기간 연장
  - 토양조사 및 정화 완료 후 조사용역 가능시기까지 연장
- 2021.09.03. : 안전시설물(가설재울타리) 변경 구입
  - 설치규격 및 수량 : 웬스+방진망(W2000×H4000) L=2.35km
- < 2021.09.07. 6차 진상규명 및 대책 특위 이후 >
- 2021.10.01.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구간 정밀발굴조사용역 일상감사
- 2021.10.06. : 정밀발굴조사 용역(1·2·3구역) 설계변경
  - 안전관리 및 임시복토 관련 실정보고 승인사항 반영
- 2021.10.13.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구간 정밀발굴조사용역 시행
  - 위     치 : 근화동 482번지 일원
  - 과   업   량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A=300m<sup>2</sup>
  - 용   역   비 : 금145,728,000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간
- 2021.10.15. : 유적 보호조치(복토) 결과 보고
- 2021.10.29. : 안전시설물(가설재울타리, 출입문) 설치 완료
  - 웬스+방진망(W2000×H4000) L=2,350m, 출입문(W8000×H6000) A=448m<sup>2</sup>

## ■ 향후계획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1,2,3구역) 재착수 : 2021. 04.
  - 발굴준비 등 40일 소요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시 환경오염조사 병행 확인(환경정책과 협의)
- 토양오염조사 및 토양정화 완료 후 조사용역 재개
-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전체) 완료 예정 : 2023. 12.

## 6 의원 주요발언: 생략

※ 의원 주요발언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7 재발방지대책

민간검증단에서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 결과 오염의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결론과 함께 정화 부실은 현대 과학으로 검증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됨.

### 1. 토양환경조사지침 정비의 필요

- 1차 환경오염조사 당시 미군 주둔지역이므로 토양환경평가지침(2002. 1 ~ 2009. 8)의 적용으로 오염면적에 따른 시료 채취지점 수와 채취 심도는 표토, 표토 아래 0.5m, 1m, 2m, 3m, 4m, 5m의 7심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충분한 차수 기능을 갖는 기반암 등 불투수층이 나타나면 불투수층 상단까지 시료 채취하라는 규정이 있음. 당시 이 규정으로는 조사의 방법과 밀도 그리고 불투수층 아래의 오염 토양 등 오염물질의 발견은 어려웠을 것임.
- 따라서 앞으로도 조사, 정화, 검증과정에서 완전히 오염 토양을 발견하기는 과학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용인/허용할 수 있는 오차율에 대한 통계학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성실한 조사와 신뢰받는 정화를 위해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조사와 검증의 밀도를 높이고 이에 대한 기술적인 규정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2. 재발방지 대책

- 과거 조사 대비 약 7배 강화하여 촘촘한 조사를 완료한 만큼 잔여토가 남지 않도록 정화공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를 투입 등 사업관리 방안 강구가 요구됨.
- 향후 오염정화 구역 외의 지역에서 오염토가 또다시 발견되는 경우 완전한 오염 정화가 될 때 까지 국방부의 책임지도록 문서화 필요.

## 8 총평

### ○ 사건개요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 5만 6,000㎡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벌였으며 춘천시는 2012년 국방부로부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 완료 검증 및 준공 보고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캠프페이지 내에서 문화재발굴조사 중 깊이 3~4M가량의 발굴터 15곳에서 지표층 아래 2~4m 사이에 검은색 기름층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부실정화 의혹이 불거졌다.

시료분석결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이상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고 캠프페이지 내 봄내체육관(옛 격납고) 인근 깊이 2m 지점 시료의 TPH 수치는 kg당 2,618mg으로 기준치(500mg/kg)를 5배 이상 초과했다.

또한 옛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을 위해 문화재를 발굴하던 현장에서 지난 10월 27일 약 20ℓ 들이 기름통 30여개가 발견되었다. 기름통이 발견된 곳은 환경관리공단이 수탁한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어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었다.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정화에 따른 오염이 명백한데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민·관·의회가 하나 된 긴급행동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국방부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재조사·재정화·재검증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춘천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며, 시민복합공원의 정상적인 추진을 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하게 되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6월 19일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56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56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했다.



## ○ 활동성과

### 1) 민간검증단 구성

부실정화 의혹 발생이후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가 발족하였다. 2020년 6월 13일에는 허영국회의원과 시민범대위, 춘천시의회 특위 합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국방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동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공동대응 결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규명과 온전한 정화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

민간검증단은 여러 논의 끝에 국방부, 춘천시, 범대위, 허영 국회의원실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민간검증단은 총15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토양오염 재조사 방법과 과정에 대한 검증에 최선을 다했다.

민간검증단 활동과 성과는 전국 반환미군기지 토양오염 규명과 재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춘천의 민간검증단 활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었다.

### 2) 철저한 재조사

캠프페이지에 대한 토양 조사는 과거 기준에 비하여 약 7배\* 정도 강화하여 촘촘하게 실시한 결과 상당한 오염을 찾아냈다.

\* 조사밀도강화 :  $(① + ②) / 2 = 6.65\text{배}$

(과거 대비 약 7배 강화 시행)

① 개황조사(기존/재조사) :  $1,000\text{m}^2/300\text{m}^2 = 3.3\text{배}$

② 세부조사(기존/재조사) :  $500\text{m}^2/50\text{m}^2 = 10\text{배}$

\* 정화제외구역 기름통 20ℓ 짜리 30개 발견

### 3) 국방부 책임인정

이와 같은 토양오염 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온적인 국방부를 상대로 특위는 재조사·재정화 비용 일체 부담과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특위 결의문을 채택하여 발송하였다.

그 결과 국방부는 1,2차 조사결과에 대하여 수용하고 재조사와 재정화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의 부담을 약속했다.

#### 4) 춘천시 행정의 문제점

본 특위는 행정조사를 통해 캠프페이지 반환 이후 춘천시가 그 어떠한 재조사나 검증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행정의 문제점도 조사하였다. 당시 오염조사와 정화과정에서 춘천시의 소극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시민들과 춘천시의회에서 문제 된 바 있었다. 특히 본 특위의 조사결과 국방부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각한 부실 정화 의혹과 춘천시 자체검증이 필요하다는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주장이 있었고, 예산까지 수립했지만 끝내 불용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2010년 말 춘천시의회에서 자체검증예산 6,500만원이 본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성립되었다. 그러나 2011년 3회 추경에 당초예산에서 당시 집행부에 의하여 삭감안이 올라왔다.

2011년 8월 7일 춘천시장에게 보고한 ‘보고전’에는 검증유보 사유로 ‘국가가 인증한 기관에서 검증한 자료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재검증은 바람직하지 않고, 예산낭비’라고 보고되었다.

#### ○ 조사한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부실정화의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해 1년 6개월간 활동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현재 강화된 재조사까지 완료하였지만, 재정화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활동시한 종료로 재정화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이번 재정화의 방식은 토양을 완전히 새로운 토양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재정화 활동은 해당 상임위원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 본 특위 위원들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캠프페이지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 ○ 향후과제

구 캠프페이지는 1958년도부터 미군이 주둔했었고 2007년 5월 기지반환이 완료될 때 까지 약 49년간 사용되다가 국방부와 춘천시 간의 매매계약에 의해 2012.6.29.부터 춘천시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구) 캠프페이지에 대한 기지반환에 앞서 최초 오염조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2005년도에 실시하였으며 이때 조사 근거(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지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에 따라 총 105일에 걸쳐, 1단계(30일 : 기초 환경정보 수령~ 조사의 필요성 결정), 2단계(60일: 공동현장방문조사 ~ 시료 채취분석완료), 3단계(15일: 보고서 작성 ~ 보고서 교환.협약) 등 비교적 짧은 기간에 모든 조사를 끝냈으므로 약 50년이라는 오랜 기간 미군이 주둔하여 60여만 제곱미터의 넓은 면적을 사용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재 내 오염물질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후 구)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를 위한 2차 조사는 2008년 8월부터 10월 까지 2개월에 걸쳐 국방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가로 조사하였으나 이 또한 2005년도 당초 조사를 근거로 하였으므로 조사범위 확대 등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국 반환 당시 제안된 당초 조사의 미흡 및 추가 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과거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합리적이 추론이 가능하며 조사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완전한 정화를 기대하기에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다.

민간검증단 회의록을 살펴보면 제11차 및 제15차 등 2번에 걸친 검증 의견서에서 과거 조사의 미흡한 점을 꼬집으면서도 정화에 대한 부실 여부는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민간검증단에서 당시 모든 사항을 과학적/기술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당시의 규정대로 환경오염조사 및 오염 토양 정화관리를 하였다고 검토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특위에서는 그동안 민간검증단 회의를 15차례나 거듭하면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추가 오염을 상당 부분 찾아낸 것에 대한 고마움은 있으나 토양 오염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오염면적(19,840㎡)의 절반 이상이 기존 정화구역 내 오염이 확인된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검증단의 검증의견을 존중

하지만 정화의 부실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캠프페이지에 대한 토양 조사는 과거 기준에 비하여 약 7배\*<sup>1)</sup> 정도 강화하여 촘촘하게 실시하여 상당한 오염을 찾아냈다. 이로써 과거와 같은 오염이 재발 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계획된 정화공사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별도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 조사밀도강화 :  $(\textcircled{1} + \textcircled{2}) / 2 = 6.65\text{배}$ (과거 대비 약 7배 강화 시행)

① 개황조사(기존/재조사) :  $1,000\text{m}^2/300\text{m}^2 = 3.3\text{배}$

② 세부조사(기존/재조사) :  $500\text{m}^2/50\text{m}^2 = 10\text{배}$

끝으로 향후 오염정화 구역 외의 지역에서 개발과 문화재 조사 등의 과정에서 오염토가 또다시 발견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캠프페이지 오염정화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춘천시에서 정화작업을 한 구역 밖에서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이 발견될 개연성이 있기에 춘천시는 국방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공식적인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춘천시는 향후 미세먼지 차단 숲을 비롯한 시민복합공원을 조성할 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정화방식이 오염된 토양을 새 토양으로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서 과거의 오염 토양을 정화 후 다시 되메우기 방식보다는 진전된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100% 완전히 정화되었다는 맹신은 금물이다.

캠프페이지에 조성되는 시민복합공원이 시민들의 휴식공간임을 감안한다면 춘천시 행정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후 흙의 복토를 통하여 기존토양층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하고, 나무식재의 경우 토양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종류의 나무로 식재를 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캠프페이지에 대해 향후 정책적으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양의 상태와 지하수 오염 검사 등 환경적 유해성 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성 확보에 춘천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춘천시 내에는 많은 군부대가 있다. 도시의 확장과 함께 군부대 이전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오랜 기간 상주했던 신북 항공부대를 비롯한 군부대의 경우 토양오염이 의심된다면 이번 캠페이지 부실정화 의혹 과정과 특위의 성과, 그리고 검증 활동의 한계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춘천시 행정도 국가기관이 수행한 조사와 오염 토양 정화작업이라고 할지라도 춘천시민을 위한 행정기구로써 책임감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자체검증과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부지 활용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이번 사건과 해결 과정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본 특위는 2021년 12월 21일 본회의를 끝으로 활동시한 종료로 해산하지만 향후 남은 과정에서 특위의 행정조사 활동으로 지적한 남은 과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춘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한다.

춘천시의회 특위 활동에 함께 참여해준 위원들과 의회 사무국, 그리고 춘천시 관련 부서 모든 직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총평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 9 언론보도 모음

### □ 신문 (2020년도)

일자	제 목	비 고
5월 6일	10년전에 오염 정화 다 됐다더니 땅 파자 시커먼 기름때 악취 진동	강원일보
5월 6일	국방부 도맡아 추진. 정화작업 내내 철저히 비공개	강원일보
5월 6일	기름이 뚝뚝(환경오염 정화사업 구역내 기름층 드러남)	강원일보
5월 7일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전면 재조사하라	강원일보
5월 7일	캠프페이지 전면 재조사	강원일보
5월 7일	시민·전문가 접근 막을때부터 예견될 일. 철저한 검증 시급	강원일보
5월 7일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 실태 전면 재조사해야	강원일보
5월 7일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기름띠	한국일보
5월 7일	춘천 옛 미군부대에서 기름흙 또 나와	한겨레신문
5월 8일	토양 264곳·지하수 12곳 원주 캠프롱 오염조사 시작	강원일보
5월 13일	가장 넓은 오염구간 중 일부 확인. 정화·검증 누락 의문 제기	강원일보
5월 14일	춘천 문화재 발굴지 토양 분석 신속 진행	강원일보
5월 18일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여부 이르면 오늘 공개	강원일보
5월 19일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기준치 최고 6배 초과	강원일보
5월 19일	"향후 오염 확인땀 국방부가 비용 부담" 8년 전 공문에 명시	강원일보
5월 19일	캠프페이지 기름띠 "부실정화로 보기 어렵다"	도민일보
5월 19일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오염 6배 초과 '부실 정화' 드러나. 공원 개발 차질	경향신문
5월 19일	옛 미군기지에 기준치 6배 토양오염	국민일보
5월 21일	캠프페이지 재정화 비용 국방부가 부담	강원일보

5월 25일	오염지 일방적 반환에 정화비용 떠안기 일쑤	강원일보
5월 28일	춘천 캠프페이지 900억대 복합창작지원센터 건립 차질	강원일보
5월 28일	정화 이전 오염 증명하라는 국방부 황당	강원일보
6월 2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 검증 나선다	강원일보
6월 2일	국방부 정화 마친 전국 17곳 전면 재조사	강원일보
6월 2일	녹색연합 캠프페이지 대책 촉구	도민일보
6월 2일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발견된 페아스콘	전국매일
6월 2일	페아스콘까지 그대로 묻었다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 오염	한겨레
6월 2일	부실정화 의혹 끊이지않는 춘천 캠프페이지	한국일보
6월 3일	춘천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	강원일보
6월 3일	춘천 옛 캠프페이지 토양 부실 정화는 국방부 책임	강원일보
6월 3일	이재수 춘천시장 "국방부 캠프페이지 책임 다해야"	도민일보
6월 3일	춘천시, 옛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관련 재조사·정화 강력 요구	전국매일
6월 3일	춘천 미군기지 오염 조사 지자체·국방부 책임 공방	경향신문
6월 3일	이재수 춘천시장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국일보
6월 3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하라	동아일보
6월 4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검증 범시민대책위 오늘 구성	강원일보
6월 5일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하라	강원일보
6월 5일	캠프페이지부실정화 범시민대책위 구성	도민일보
6월 5일	"춘천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정화·배상 요구	경향신문
6월 8일	토양 뿐 아니라 지하수까지. 전체 부지 반드시 전면 재조사	강원일보
6월 10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 방안은	강원일보

6월 15일	'캠프페이지 정화책임 회피' 국방부 제안 거부	강원일보
6월 15일	허영,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재검증 강조	도민일보
6월 17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명백한 국방부 책임	강원일보
6월 18일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민간검증단 구성 빨라진다	강원일보
6월 18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져라	강원일보
6월 20일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 통해 부실정화 문제 진단	강원일보
6월 22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자문	강원일보
6월 22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춘천시 졸속행정 참사	도민일보
6월 22일	춘천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대응 전문가 간담회	도민일보
6월 23일	캠프페이지 의혹해소특위 구성	강원일보
6월 25일	국내 미군기지 129개 환경오염사례 공동대응해야	강원일보
7월 8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국방부가 재조사 비용 부담	강원일보
7월 8일	반환미군기지 완벽 정화 안전장치 마련	강원일보
7월 8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검증단 구성	도민일보
7월 9일	캠프페이지 재조사 실제 합의각서까지 집중	강원일보
7월 16일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차질 불가피	강원일보
7월 16일	허영 의원 캠프페이지 오염 재발방지 개정법 추진	강원일보
7월 16일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숲 조성 차질	강원일보
7월 17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 회의	강원일보
7월 17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대책 특별위	도민일보
7월 24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특위 회의	도민일보
8월 20일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재검증 합의각서 조율 마무리	강원일보



9월 2일	춘천 캠프페이지 재조사 이르면 내달 착수	강원일보
9월 2일	캠프페이지 오염 재검증 민간검증단 구성	도민일보
9월 2일	시의회 캠프페이지 특위 간담회	도민일보
9월 3일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의혹 이번엔 밝혀질까	한국일보
9월 11일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간담회	강원일보
9월 11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자문단 간담회	도민일보
9월 17일	캠프페이지 오염 재발방지 개정안 상임위 상정	강원일보
9월 25일	캠프페이지 완전정화 위해 심층구조까지 재조사 필요	강원일보
10월 7일	시의회 캠프페이지 특위 현장점검	도민일보
10월 12일	캠프페이지 재정화 미군기지 반환 중요 쟁점 부상	강원일보
10월 20일	환경공단 '캠프페이지 기초조사 미흡' 인정	강원일보
10월 28일	춘천 캠프페이지 땅속 불과 1m. 이번엔 폐기름통 수십개 나와	강원일보
10월 28일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부지서 유류통 수십개 추가 발견	도민일보
10월 28일	춘천 옛 미군기지터서 유류통 무더기 발견	한겨레
10월 29일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지연 불가피	강원일보
10월 29일	폐아스콘 이어 윤탁유통까지. 이러다 방사능도 나올라	강원일보
10월 29일	캠프페이지 유류통 발견 춘천시민들에게 사과해야	강원일보
10월 29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재조사·재정화해야	도민일보
10월 29일	부실정화 책임소재 명백히 밝혀야	도민일보
11월 2일	전국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공동대응	강원일보
11월 3일	춘천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 잠정 중단	강원일보
11월 4일	이 시장 "캠프페이지 정화 시간끌기 그만"	도민일보

11월 9일	춘천캠프페이지 또 오염토 나왔다.이번엔 육아지원센터 옆	강원일보
11월 10일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축소조사 안된다	강원일보
11월 11일	오염물질 쏟아지는데 국방부는 은폐·책임 전가에만 몰두	강원일보
11월 11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조사 소극대처시 투쟁 불사	도민일보
11월 11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전수조사하라	동아일보
11월 11일	땅속 페아스콘·기름통 잇단 발견 "춘천 캠프페이지 전수조사 하라"	경향신문
11월 12일	8년 전 정화작업했는데...춘천 캠프페이지서 또 무더기 기름통	서울신문
11월 13일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민간검증 시작	강원일보
11월 16일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 SOFA 개정 힘 실려	강원일보
11월 19일	미군기지 오염 전국이 공동대응 나섰다	강원일보
11월 24일	춘천 캠프페이지 기름 누출 또 확인	강원일보
12월 1일	춘천 캠프페이지 유류통 수십개 발견된 곳서 첫 현장검증	강원일보
12월 24일	춘천 캠프페이지 전 부지 재검증 결정	강원일보
12월 24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방식·범위 다음주 결정	도민일보
12월 31일	캠프페이지 문화재조사지역부터 우선 검증	강원일보

## □ 신문 (2021년도)

2월 19일	‘부실정화 파문’ 춘천 캠프페이지 내달 재검증 착수	강원일보
2월 22일	‘부실정화’ 춘천 옛 미군기지 새달 재검증 돌입	서울신문
3월 9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 착수	강원일보
3월 11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 연기	강원일보
3월 15일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 지역 방문	도민일보
3월 17일	캠프페이지 유류 오염 의심토양 또 발견	강원일보
3월 17일	오염 의심토양 또 발견	강원일보
3월 18일	지하 2~3m서 기름범벅 토양...부지 활용 차질 우려	강원일보
3월 18일	춘천 캠프페이지, 유류오염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강원일보
3월 19일	춘천 캠프페이지 폐아스콘 매립도 의심	강원일보
3월 30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대책 특위	도민일보
4월 2일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기준치 초과	강원일보
4월 2일	캠프페이지 일부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도민일보
4월 9일	캠프페이지 이번엔 화학물질 매립 의혹	강원일보
4월 12일	캠프페이지 화학물질 매립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강원일보
4월 14일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화 차질	강원일보
4월 14일	옛 캠프페이지 정화 연내 완료. 숲 조성 박차	도민일보
4월 16일	이번엔 폐전봇대. 부실정화 파문 끊이지 않는 춘천 캠프페이지	강원일보
6월 2일	캠프페이지 ‘기준치 47배’ 토양오염	강원일보
6월 2일	캠프페이지 일부 토양오염 기준치 ‘47배’ 초과	도민일보

6월 3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 국방부가 배상하라	강원일보
6월 3일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 형식적이었나	강원일보
6월 3일	캠프페이지 오염정화 부실. 국방부·환경부 책임져야	도민일보
6월 24일	캠프페이지 2023년까지 출입 통제	도민일보
7월 12일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지역 오염조사 필요	강원일보
7월 20일	캠프페이지 발굴 조사 유물 불법투기	강원일보
7월 23일	환경부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국방부 책임”	도민일보
7월 26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비용 전액 부담” 춘천시의회 결의문 채택	강원일보
7월 26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복구비 전액부담해야	도민일보
7월 27일	오염된 토양복원 책임은 국방부다	도민일보
8월 4일	춘천시,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토양정화비용 36억원 요구	도민일보
8월 18일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비용 국방부가 부담	강원일보
8월 18일	캠프페이지 오염부지 정화비용 국방부가 부담한다	도민일보
9월 8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특위 간담회	도민일보
10월 26일	파도 파도 오염. 181곳서 부실정화 추가 확인	강원일보
10월 26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2차조사 결과 290곳 ‘기준 초과’	도민일보
10월 27일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 오염, 기준치 20배나 초과했다	국민일보
11월 2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특위 간담회	도민일보

강원일보 '20. 5. 6(수)

# 10년전에 오염 정화 다 됐다더니 땅 파자 시커먼 기름띠 악취 진동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

유적 발굴지 등 곳곳에 기름층  
시민복합공원 등 개발 계획 차질

춘천시 사실관계 확인·대책 나서

반환 미군기지였던 춘천시 근화동 구 캠프페이지 부지 속 곳곳에서 대규모 기름층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곳은 춘천시가 2011년 국방부로부터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으로, 환경오염 정화작업의 부실 의혹과 함께 캠프페이지 토양의 장기간 오염 논란도 불거져올 전망이다. ▶관련기사 5면

캠프페이지 내에서 선사유적 발굴작업을 진행 중인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 따르면 길이 3~4m가량의 발굴터 50여곳 중 15곳에서 지표층 아래 2~4m 사이에 검은색 기름층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기름층의 발견으로 유적 발굴작업에 차질을 빚게 된 연구원측이 지난 4일 개최된 1차 학술자문 회의에서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실제 5일 강원일보 취재진이 현장에 확인한 결과 해당 발굴터의 지표층 아래에 묵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의 검은색 기름층이 형성돼 있었고 폐기물 냄새 또한 상당히 독하게 났다. 유출된 기름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불이 고여 있는 곳에서는 기름띠가 파다나고 있는 데다 일부 발굴터에서는 검붉은 빛의 기름 찌꺼기까지

발견됐다. 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 5만6,000㎡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받았으며 춘천시는 2012년 국방부로부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 완료 결증 및 준공 보고서를 전달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상당량의 기름층이 발견되면서 춘천시가 계획 중인 캠프페이지 내 시민복합공원 조성사업도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 유모(55·춘천시 근화동)씨는

“환경 정화를 어떻게 했길래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땅에서 기름층이 발견되느냐”며 “더 이상 춘천시 민을 우롱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학술자문회의에서 제기된 기름층 문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2012년 제출받은 정화조치 완료 결증 및 준공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에는 향후 새로운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은석·이무현·권순찬기자

## “국방부 도맡아 추진 ... 정화작업 내내 철저히 비공개”

5월 6일 **춘천** 구 캠프에이지 부지 명목 곳곳에서 기동작업이 벌여지면서 2009~2011년 이뤄진 오염 정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캠프에이지는 2005년 일본 경정국으로부터 기존 오염지역에 대한 무리거부권을 제정받은 곳이다. 특히 토양과 지하수 오염 이외에 방사능 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2006년 캠프에이지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도시까지 16곳에 해당부가 제정된다는 미군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같은 해 8월부터 7월까지 9개월간 이뤄진 캠프에이지

토양·지하수만 전방 - 열탈착방식 등 효율성 의문 제기돼 시민단체 “복원과정 접근 금지 - 오염도 재조사 책임 불어야”

환경 조사에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 이외에 방사능 오염 조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당시 조사에서 토양 오염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의 유해물질로 수치가 매우 높게 확인(최대수치 1771)의 수치가 기준치를 수백배 초과했다는 것이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 한 방 방사능 수치는 모두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국방부는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만 정화작업을 진행했다. 토양 정화방법은 오염 토양에 열탈착과 수분증조와 휘발성유기물질 분리를 하는 ‘토양증발법’과 고농도의 오염 토양 정화를 위해 직접 열을 가하는 ‘열탈착’ 방식 등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오염지역이 워낙 방대하고 군정에 신빙성이 없어 이 같은 정화 방식에 대한 의문

설 논란이 제기됐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오염 토양 발견으로 당시 정화방안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오염 정화에 앞서 정화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방부가 맡았다는 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시 캠프에이지 오염 정화 작업은 **충청남도** 시계정공사(현 **충청남도** 시공사)가 맡는 것으로 검토되기도 했으나 국방부로 최종 결정됐다. 전문성과 문제해결 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볼 때

복원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한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오염 정화작업이 진행될 때 변질이 진지한 문제였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작업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오동현 **춘천** 시민회단추진위원장은 “당시 복원 과정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접근 자체가 금지됐고 문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반적으로 오염 정도를 재조사해 철저한 해방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무환** 기자



강원일보 '20. 5. 6.(수)



기름이 뚝뚝 춘천시 근화동 구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구역내 유적 시굴조사를 위해 땅을 파자 검붉은 기름층이 드러나며 폐기물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김남덕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전면 재조사하라”

속보=반원미군기지인 **춘천시** 근방 동구 캠프페이지의 부실 정화 논란(은 보자)에 발자 15면 보도에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와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들은 당장 인근에 현장 검증 결과를 제공하고 시민단체들은 캠프 페이지 정화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 ▶2면7월5·11면

**춘천시**는 4일 미군부대 환경정화 부실 의혹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장검증을 통한 오염도 측정을 실시, 2주 이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춘천시**는 이날 오전 기류역과 기류촌이 내장된 발굴터의 시료를 임시 채취해 도보건환경 연구소에 채도한 빠른 시간 내에 오

부실정화 논란 확산-**춘천시** 시료 채취해 분석 나서  
환경정화 주체인 국방부·한국농어촌공사 8일 합동감식  
공사측 “주민피해 없도록 할 것”... 시민단체 “강력대응”

염도 측정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의뢰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미군부대 주둔 시절 유류처리장 인근인 데다 일부 발굴터에서 실제 기류역으로 보이는 땅과 같은 토양층이 발견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오염도 측정 결과를 밝힌다”고 밝혔다.

미군부대 환경정화사업 주체인 국방부와 용역을 맡았던 한국농어촌공사도 8일 현장검사를 통한 정밀조사를 맡아기로 했다. 경제 상황에서 오

염도 측정 결과가 기준치를 넘어할 경우 책임은 당시 정화작업을 맡았던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춘천시**의 판단이다. 관련 법·도령환경보전법 10조의 4항에 오염이 이뤄진 당시의 소유자나 점유자, 운영자에게 귀책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춘천시**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새로운 오염 토양이 발견되는 경우 국방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공분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춘천시** 문화도시국장은 “현장검증 확인한 결과 냄새나 기류역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시료 채취를 통한 오염도 측정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측도 후속 조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침부 관계자는 “오염 정화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 지역에서 갑자기 기류촌이 나타나 당혹스럽긴 하지만 추후에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현·권순찬 기자

3면여 계속

## “캠프페이지 전면 재조사”

-1면에서 계속

**춘천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캠프페이지 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2009년부터 실시된 정화작업 당시 국방부와 농어촌공사 측외에 사업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들은 관련기관들의 조사 결과를 본 후 대책이 미흡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춘천시** 캠프페이지는 토양과 지하수, 반사능 오염 문제가 감하게 제기돼 온 곳이다. 반환 직후 조사에서는 정화 대상 36곳에서 TPH와 BTEX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 말까지 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5만6,000㎡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벌였다. 실제 투입된 예산은 195억원이다.



# “시민·전문가 접근 막을때부터 예견된 일... 철저한 검증 시급”

지역사회 충격 심해 분노

【춘천=강원일보】춘천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 파문 확산에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2013년경까지 시에서 공사해 준다는 말을 들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민들은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원도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 파문 확산에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강원도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 파문 확산에 지역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주민들은 캠프페이지 부실 정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전지역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 “국회 개원 전일조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전지역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 “국회 개원 전일조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전지역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 “국회 개원 전일조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전지역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 “국회 개원 전일조사”



이런데도 불구하고 시가 안전지역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 “국회 개원 전일조사”

강원일보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 실태 전면 재조사해야

반환 미군기지인 **춘천시** 근화동 구 캠프페이지 부지 속 곳곳에서 대규모 기름층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곳엔 **춘천시**가 2011년 국방부로부터 환경오염 정화작업이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곳이다. 환경오염 정화작업의 부실 의혹과 함께 캠프페이지 토양의 장기간 오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 정화를 어떻게 했길래 10년 가까이 지난 후에도 땅에서 기름층이 발견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춘천시**민들은 한미더  
로 기름층이 발견되고  
있는 미군기지를 둘러  
받고 해묵은 숙원이 해  
결됐다고 기뻐한 끝에  
되고 말았다. 캠프페이  
지는 2005년 반환 결정

직후부터 각종 오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구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 실태는 전면 공개돼야 한다. 오염 정화에 앞서 정화 주체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국방부가 맡았다는 점도 문제였다.

당시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작업을 **춘천도시개발공사**(현 **춘천도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기도 했으나 국방부로 최종 결정됐다. 전문성과 문화재 발굴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례를 볼 때 복원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해당 자치 단체가 맡았어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그 절차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실시돼야 한다. 미군기지는 치외법권 지대이지만 그 토지는 엄연히 우리의 국토다. 오염되면 개발 계획은 물론 주변지역이 영향을 받는 만큼 사후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환경 문제에 관한 미군 측의 무성의가 사회적 논란이 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환경기준치의 162배를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2017년 4월 뒤늦게 공개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2015년 용산 기지의 환경오염을 조사했으나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환

경부가 한미주둔군지  
위협성(SOFA) 환경조  
항을 근거로 밝히지 않  
은 것이다. 시민단체들  
이 소송을 제기해 이기  
면서 결과가 공개됐다.

주한미군은 2012년

환경관리기준(EGS)을 개정하면서 유류로 오염된 토양처리기준(TPH) 조항을 삭제해 우리 정부에 불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이를 근거로 가지 반환 때 오염 정화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주한 미군에 제대로 협의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근화동 구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실태는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다.

이제는 향후 반환될 지역이 오염됐다면 주한미군에 원상 회복을 촉구해야 한다. 우리가 복구한 뒤 미군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 미군도 체류국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오염 기지를 그대로 반환할 경우 한 국민들에게 미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높일 뿐이다.

부지 곳곳에서 대규모 기름층 발견 '충격'

오염 정화 주체, 국방부가 되어선 안 돼

반환 미군기지 오염 땀 원상회복 요구는 당연



#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기름띠

유적발굴 현장 토양 오염 확인  
국방부 정화 완료 통보 무색  
부실 의혹 전면 재조사 불가피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 자리한 옛 미군 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 내 유적발굴 현장 토양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 이곳은 춘천시가 2012년 국방부로부터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됐다는 통보에 따라 시민공원 등 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시민단체는 환경오염 정화작업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내 발굴터 일부 토양에서 기름띠가 발견됐다고 6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해 12월부터 문화재발굴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이다. 이날 현장에선 발굴터에 고인 물에 형성된 기름띠가 확연히 드러났다. 일부 자점에선 기름 냄새가 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오염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1951년부터 2005년까지 미군이 주둔한 캠프페이지는 토양과 지하수, 방사능 오염문제가 제기되던 곳이다.

반환 직후 조사에서 36개 지역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TPH)와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등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지하수 오염 조사에서도 질산성 질소와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벤젠 등에 의한 오염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5만



춘천시 근화동 옛 캠프페이지 내 유적 발굴조사 현장에서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토양층이 발견됐다.

6,000㎡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환경오염 정화 작업을 벌였다.

구체적으로 오염된 토양에 영양분과 수분을 조절, 미생물을 활성화해 유류성분을 분해하는 방법과 직접 열을 가하는 '열탈착'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동철 춘천시 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기름띠가 나온 현장 모두 오염정화 작업이 이뤄졌던 곳"이라며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시는 이날 기름이 유출된 토양 시료 등을 채취해 상지대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글·사진박은성기자

## 춘천 옛 미군부대에서 기름흙 또 나와

시, 캠프페이지 기름오염 확인  
2005년 반환 뒤 국방부 정화작업  
시민단체 "부실 정화" 재조사 촉구

강원도 춘천시의 옛 미군기지 땅에서 기름  
흙이 발견됐다. 국방부의 토양 정화 작업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춘천시는 옛 캠프페이지에서 토양이 기름  
에 오염돼 있고 물웅덩이에 기름띠가 떠 있으  
며 심한 악취도 관찰돼 상지대에 오염 정도  
등을 조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옛 캠프페  
이지 터가 기름에 오염된 사실은 춘천시가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려고 문화재 발굴 조  
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실제 이날 옛  
캠프페이지 발굴조사 지역에서는 최근 내린  
비가 고여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에 기름띠가  
떠 있었고 파낸 흙에서는 악취가 났다.

옛 캠프페이지 터는 춘천시 근화·소양동

일대 5만6000㎡ 규모로, 미군이 1951년부터  
주둔하다 2005년 철수하면서 반환된 공여  
지다. 당시 국방부는 토양을 조사해 27곳(3  
만2511㎡)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9개  
지역(3988㎡)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에 각  
각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3개 관측점  
지하수도 질산성 질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CE), 벤젠 등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농  
어촌공사에 의뢰해 토양 정화 작업을 한 뒤,  
2012년 춘천시에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정화  
완료 검증 및 준공 보고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옛 캠프페이지 터의 정화  
작업을 국방부가 맡아 복원 과정이 투명하  
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오동철 춘천시민사  
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복원 당시  
접근이 금지됐고 제대로 된 정보도 공개되  
지 않았다"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 토양 264곳·지하수 12곳 원주 캠프롱 오염조사 시작

시민참관단 철저한 조사 촉구  
오늘 춘천 캠프페이지 검증

속보=반환 마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실 오염정화 의혹이 확산(본보 지난 5·6일자 1·5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원주 캠프롱에 대한 토양 오염 조사가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5·11면

국방부는 7일 원주 캠프롱에서 토양 오염 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를 진행했다. 원주시는 시료 채취의 투명성을 위해 시민 10명과 환경단체 회원 등에게 참관 기회를 제공했다. 시료 채취는 오는 20일까지 토양 264개 지점, 지하수 12개 지점에서 진행된다.

이번 원주 캠프롱의 조사에 눈길이 모아지는 이유는 이미 8년 전 정화작업을 마친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최근 기름층 등이 다시 발견되는 등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원주 캠프롱 시료 채취에 참여한 시민참관

단들도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듯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준 원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캠프롱이 전체적으로 오염된 상황으로 보이는 만큼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 복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기름층 등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춘천시가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데 이어 당시 정화 주체였던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도 8일 오전 합동 현장 검증에 나선다. 현행법상에는 캠프페이지 부지의 경우 kg당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 500mg,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농도 80mg 이상이면 다시 정화해야 한다. 김종욱 춘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캠프페이지 부지 전체를 재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김설영·권순찬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여부 이르면 오늘 공개

### 오염 기준치 넘을 땐 재조사·정화 시-국방부 비용 부담 협의 진행

속보=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논란을 겪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본보 지난 6·7·8일자 1면, 13·14일자 4면 보도)의 법정 오염 기준 초과 여부가 빠르면 18일 공개될 전망이다.

오염 의심 토양의 시료를 분석한 도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최근 그 결과를 도출한 후 내부 결재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가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전면적인 오염도 재조사 및 재정화 작업과 그비용 부담 등을 둘러싼 국방부와 춘천시의 협의를 즉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법정 토양오염 우려기준 중에서도 가장 강한 '가' 지역(현 '1'지역)에 해당된다. 전, 담, 공원 등이 들어서는 경우의 기준치다. 2009년 정화 착수 당시 시민복합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높은 정화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이에 이번 분석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500mg/kg,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이 80mg/kg 이상이면 위법한 상황이 된다. 이번 논란은 춘천시가 시민복합공원 조성을 앞두고 의뢰한 문화재 발굴 도중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층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이무한기자

#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춘천〉 기준치 최고 6배 초과

도보건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부실 정화 사실로 드러나  
춘천시 전면 재조사 나서기로

속보=정화작업 완료 8년 만에 기름층이 발견된 춘천 캠프페이지(본보 지난 6·7·8일자 1면, 13·14·18일자 4면 보도)의 부실 정화가 사실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5면

18일 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토양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춘천시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함유량이 정화 기준으로 정한 '가'지역(현 '1'지역)의 수치(kg당 500mg)를 최대 6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다. 경유·등유·병커유 등이 유출된 경우 발생하는 TPH는 식물의 생존을 크게 위협하고 각종 질환과 암을 유발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봄내체육관(구 격납고) 인근 깊이 2m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에서는 2.618mg/kg, 3m 지점에서는 3.083mg/kg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법상 가

장 완화된 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장 과 주유소, 도로 등을 만들 때에 지켜야 하는 기준치('3'지역, 2,000mg/kg)보다도 높은 심각한 오염 수준이다. 반면 휘발유에서 주로 검출되는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은 대부분 기준치(80mg/kg) 이하이거나 불검출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반환미군기지가 이전사업단은 오염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전사업단 관계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 책임은 발생 당시의 점유자나 소유자·점유자 또는 운영자"라며 "정화 이전 상황에 의한 오염인지 아닌지를 살핀 후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토양오염도 전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병철 춘천시 교통환경국장은 "우선 춘천시의 예산을 선 투입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무현기자 trustme@





## 캠프페이지 기름띠 “부실정화로 보기 어렵다”

문화재발굴 조사 과정에서 기름띠가 발견된 **춘천** 캠프페이지 내 일부 구역에 대해 시가 재조사에 나선다. 다만, 시는 해당 구간은 과거 기준치 이내에 속한 점을 들어 부실정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춘천**시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6일 캠프페이지 내에서 채취한 2건의 시료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2m 지점 시료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는 2618mg/kg로, 1지역 기준치(500mg/kg)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상 캠프페이지 부지는 학교나 공원, 사적지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지역에 해당한다.

다만 2m 지점 시료에서 벤젠과 에틸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톨루엔(1.5mg/kg)과 크실렌(0.7mg/kg)은 기준치(20mg/kg·15mg/kg)를 크게 밑돌았다. 3m 지점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의 경우 TPH 수치는 3083mg/kg으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높았다.

시 관계자는 “8년 전 20-30m 간격을 두고 토양오염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시료 채취에서 빠진 부분이 지금 발견된 것으로 과거 기준치 이내에 속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실정화로 보긴 어렵다”며 “빠른 시일내 재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강원 춘천시 근화동 일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전한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의 일부 도랑에서 기준을 초과한 석유계혼탄화수소(TPH)가 검출되면서 시민복합공원을 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춘천시 제공**

##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오염 6배 초과

(캠프페이지)

# '부실 정화' 드러나... 공원 개발 차질

시, 부지 2곳 시료 분석 결과  
문화재 시굴 때 폐기물 발견  
국방부와 협의 전면 재조사  
오염 초과구역 재정화 작업

강원 춘천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땅에서 폐기물에 오염된 토양오염기 준치를 초과한 토양층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대규모 시민복합공원으로 개발하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춘천시는 2005년 반환된 한화호텔 마전 캠프페이지 부지 2곳의 시료를 채취해 강원도보전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유계혼탄화수소(TPH)가 토양오

염우려기준을 5~6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석유계혼탄화수소는 유류로 오염된 시료 가운데 정유·경유·저투유·벤젠·유분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토양오염우려기준은 1~3지역으로 나뉘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1지역인 주거·학교용지,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부지 등의 석유계혼탄화수소 토양오염우려기준은 500mg/kg 이하다. 2~3지역으로 분류되는 학교·종교용지, 감충지, 횡도, 주유소, 주차장 용지 등은 800~2000mg/kg 이하다.

시민복합공원으로 개발하려던 캠프페이지 부지의 경우 1지역에 해당된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보면 2m 깊이의 캠프페

이지 부지에서 채취한 토양에선 석유계혼탄화수소가 기준치(500mg/kg) 이하의 5.2배인 2618mg/kg가 검출됐다. 또 3m 깊이 토양에서도 기준치의 6.2배인 3083mg/kg가 검출됐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기지 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해 춘천시 근화동 일대에 들어선 67만여㎡ 규모의 캠프페이지는 2005년 폐쇄됐다. 이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염 정화작업이 실시됐다.

하지만 정화작업에 마무리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또다시 토양오염 층이 발견됨에 따라 부실정화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공원 개발에 앞서 최 근 문화재 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헤쳐진 흙에서 폐기물이 발견

되면서 불거졌다.

2016년 국방부로부터 캠프페이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춘천시는 지난해 이달대 54만4000㎡를 도시관리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확정 고시했다. 세부조성계획은 결빙되지 않았다.

춘천시는 매년 시일 내에 국방부와 협의해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전면 재조사하고, 오염도 초과구역에 대한 정화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를 문화재 발굴과 병행해 진행할지 여부는 추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며 "공원 개발 시기도 다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원 기자

cs@hkrilkyung.com

## 옛 미군기지에 기준치 6배 토양오염

### 춘천시 "캠프페이지 전면 재조사"

강원도 춘천의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검출됐다. 이곳은 2011년 국방부가 환경오염 정화작업을 마친 뒤 춘천시에 넘긴 곳이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토양층에 대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심도 2m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kg당 2618mg의 TPH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치인 500mg/kg의 5배를 넘는 것이다. TPH는 토양 가운데 등유나 경유, 벙터C유 등 유류로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캠프페이지 부지는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에 해당한다. 특히 심도 3m 지점에선 기준치의 6배가 넘는 3083mg/kg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나왔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도를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 토양오염 조사는 우선 시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고, 국방부에 청구하는 방안을



춘천시가 18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춘천시제공

협약할 계획이다.

이곳의 오염사실은 시당국이 시민공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옛 캠프페이지 부지는 춘천시 근화·소양동 일대 5만6000㎡ 규모다. 미군이 1951년부터 주둔하다 2005년 철수하면서 반환된 공여지다. 당시 국방부는 토양을 조사해 27곳(3만2511㎡)이 TPH, 9개 지역(3988㎡)이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에 각각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 “캠프페이지 재정화 비용 국방부가 부담”

**춘천시** 예산집행 요구 나서  
국방부 “공식 요청 땀 협의”

속보=정화 완료 8년 만에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오염 토양이 발견된 **춘천** 캠프페이지(본보 지난 19일자 1·5면 보도)의 재정화 비용에 대해 **춘천**시가 국방부의 예비비 지출을 요구하기로 했다.

6만여㎡ 부지의 전면적인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춘천**시는 조만간 이뤄질 협의 과정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방부 예산의 집행을 먼저 제안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춘천**시의 예산으로 정화비용 전 부담을 선언하는 것은 자칫 책임이 없는 사업에 시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프페이지의 오염 원인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국방부가 비용 부담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미 시에 편성돼 있는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산으로 신속히 재정화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향후 원인이 규명되는 때에 맞춰 국방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춘천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길종욱 **춘천**시 환경정책과장은 “조사 업체 선정과 재정화 방식 등에 대해서도 시민·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기관의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고, 그 과정도 공개해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강원일보 '20. 5. 25.(월)

## 오염지 일방적 반환에 정화비용 떠안기 일쑤

### 이슈연장 캠프페이지 정화비용 美 청구 가능할까

속보=경과 완료 8년 만에 오염 토양이 발견된 **춘천** 캠프페이지의 정화와 방청(방보 지난 21일자 5면 보도)과 함께 미국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염 책임자는 미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미군기지 반환 과정을 통해 미국의 정화비용 부담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살펴 본다.

■SOFA 환경조항 합의-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책임 논란은 2000년 용산 미군기지의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과 2001년 평주 캠프를 기밀 유출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불거졌다. 국민과 비관 여론이 끓끓자 한국

용산·원주 등에서 오염 책임 논란 한·미 SOFA 환경조항 개설했다. 정화기준 달라 美 일방적 반환법 구속력 없어 조항 개정 필요

과 미국은 2001년 한미자유무역협정(SOFA)에 환경조항을 신설했고 2002년과 2003년 차례로 관련 부속서를 마련했다. 2003년 5월에는 주한 미군의 민관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들이서(부속서 A)에 합의했다.

■일방적 반환 통보 거부 못 한 정부-SOFA 환경조항 신설에 따라

미군 공여지의 오염지역은 미군이 정화하기로 했다. 문제는 한미 간 정화 기준이 달랐다는 점이다.

미국은 '민간 건강에 대한 심각한 과다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정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생활의 생활에 적용되는 보양환경보전법상 오염도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미국은 2006년 7월 14일 제9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정화를 완료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23개 기지의 반환을 통보했다. 당시 우리나라는 이후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지만 거부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남북 대치 상황과 한미동맹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작용된 사례로 보는 시

각도 있다.

■SOFA 환경조항 개정 필요-한재호씨는 이러한 SOFA 환경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에 정화비용을 묻는 것이 쉽지 않다. 조항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어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쟁 중인 참전방위비 현상에 정화비용 책임도 묻어야 한다는 일각도 나오고 있다. 서재환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미국으로부터 수조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받으면서 오염 정화비용조차 받아내지 못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관 계에서 SOFA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2002)

강원일보 '20. 5. 28.(목)

## 춘천 캠프페이지 900억대 복합창작지원센터 건립 차질

### 부실 오염 정화 파문 내년 말 착공 지연 가능성 높아

강원도와 **춘천시**가 공동으로 900억원을 투입해 캠프페이지에 건립하려는 복합창작지원센터가 캠프페이지 부실 오염 정화 파문으로 지연 우려가 높아졌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도비 540억원, 시비 360억원 등 총 900억원을 들여 캠프페이지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커뮤니티센터+창작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올 8~10월에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설계에 착

수할 예정이다. 착공은 내년 말, 준공은 2024년 5월로 잡혀있다.

이 공간에는 강원문화재단, 강원도립극단, 도립예술단, **춘천시립예술단**이 입주한다. 최대 900석의 공연장과 연습공간, 전시관, 스튜디오, 식당, 카페까지 들어서 도내 문화예술의 중추적 역할은 물론 도민문화공간 기능까지 기대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비용 분담과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는 전국 첫 사례라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설계들 코앞에 두고 캠프페이지의 토양 오염이 확인되면서 계획의 지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일대의 오염 전수조사할 실시할 계획이다. 더욱이 추가 오염이 확인되고 재정화가 필요할 경우 착공 지연 및 사업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원도 관계자는 "만약 건립예정지의 오염이 확인된다면 공사계획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오염이 확인된 곳과 건립예정지가 다소 떨어져 있어 오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eer07@kwnews.co.kr



강원일보 '20. 5. 28.(목)

## “정화 이전 오염 증명하라는 국방부 황당”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입증 책임 관련

**춘천시** “재정화 다시 맡아달라” 요청에 답변

시민단체 “입증책임 따넘기기 이해 못 해” 반발

속보=반환여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정화 완료 8년 만에 발견된 오염토양(본보 지난 19일자 1·5면 보도)의 입증 책임을 둘러싸고 **춘천시**와 국방부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지 전체에 대한 재조사 및 재정화 방침을 밝힌 **춘천시**는 27일 국방부를 직접 찾아 “정화 주제였던 국방부에서 재정화를 다시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 측에서는 “오염원인자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정화하기 이전에 발

생한 오염이라는 것을 **춘천시**가 증명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춘천시**는 “이번 방문은 정화비용 등에 대한 사전 의사를 타진한 것이었고 앞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협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오염토양이 캠프페이지 밖에서 발견된다면 **춘천시**에 입증 책임이 있겠지만, 엄연히 정화대상 구역 내에서 발견된 오염 상황에 대한 입증까지 **춘**

**천시**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국방부의 입증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 A씨는 “환경피해 사안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그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책임은 완화된 것”이라며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변할 수 없다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는 **춘천시**가 아닌 국방부 측에서 토양오염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입증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춘천시**는 이 같은 국방부 압장과는 별개로 오염토양 내 유류 성분의 분석을 통해 정화 이전에 존재한 유류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겠다는 방침이다. 이무현기자

강원일보 '20. 6. 2.(화)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 검증 나선다

**춘천시**의회 “市 관련 주제 책임 물어야” 특위 추진  
오염 검증단계·공원화 등 모든 절차 내용 공개 전제

[**춘천**속보=**춘천시**의회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본보 지난 5월9일자 1면 보도)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강지숙 **춘천시**의원은 2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에 대한

의혹을 확인하고 향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책임을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에 따라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 북원문화센터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모두 늦어지게 됐다”며 “**춘천시**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명확히 밝히기 위

해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춘천시**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미군, 국방부, 한국농어촌공사 등 모든 관련 주체에게 부실정화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환경오염 검증단계부터 완료,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하게 모든 절차와 내용 공개를 전제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캠프페이지 환경

정화사업은 기존에도 민간군정개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했으나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못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며 “현재 제기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도 해명받을 가치고 명백하게 밝혀내기 위해 시민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제301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제교류담당관 신일 및 인사과를 행정지원과로 통합하는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을 비롯해 동내면 학곡리 화물공영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안 등의 심의가 진행된다. 또 조례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위영기자



○춘천 캠페이지 부지 내에서 유류·폐아스콘·유기성 폐기물 매립 흔적이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1일 녹색연합 관계자들이 현장살필화를 입고 폐기물로 추정되는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박승선기자

## “국방부 정화 마친 전국 17곳 전면 재조사”

### 춘천 캠페이지 폐기물 매립 흔적·부실정화 의혹 확산

춘천 캠페이지 부지 내에서 유류·폐아스콘·유기성 폐기물 매립 흔적이 발견(은보 1일자 5면 보도)되면서 이미 정화를 마친 다른 비군기지는 부실정화 의혹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화가 이뤄진 전국의 비군기지 17곳 모두 국방부가 정화를 맡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캠페이지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민간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은 1일 춘천 캠페이지에서 현장살필회를 열고 토화재 발굴 도중 발견된 유류, 폐아스콘, 폐건널자재, 유기성 폐기물 매립 흔적과 부실정화

가에 대해 조목조목 살폈다. 현장을 찾은 환경전문가와 **춘천시민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발굴터 한여름에 신명나게 남아 있는 검은색 아스콘 피와 유기성 폐기물 부패 현상 등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살필회에 참여한 김희중(국립KA-GAIA 환경연구소 대표)은 “지금까지 비군기지 환경오염 현상에서 유류 이외에 폐아스콘과 유기성 폐기물 매립 흔적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며 특이점을 설명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확한 정화 과정과 정화 및 검증 단계에서 모두 심각한 구멍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은 다른 기

환경단체 현장살필회에서 촉구  
폐아스콘·폐기물 부패 확인  
“업체 선정부터 정화·검증  
모든 단계서 심각한 구멍”  
국방부 “원인 규명 협조”

지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됐을 수 있다”며 “비군기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공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환경평가’(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정화를 맡은 기지는 캠페이지를 비롯해 캠퍼하우스(가위 캠퍼스(여의도(부산)) 등 총 17곳이다. 이들 기지는 경기도 과천시 의

정부시 동두천시 하남시 화성시, 서울 용마구와 용산구에 위치해 있다. 춘천 캠페이지와 동두천 캠퍼스(송미, 민원 부흥 캠퍼스)는 현재 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녹색연합과 **춘천시민단체**는 비군기지 소유 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동철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광역 자치단체 및 지자체의 역할을 모아 야한 환경자민 국방부와 미국을 상대로 정화비용을 제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해당 책임 원인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이후한기자

## “정화작업 이후 개발행위 없어…재정화 책임 국방부에 있다”

###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범시민대책위’ 구성 제안

춘천 캠페이지 부지 정화 현장 살필회가 열린 1일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국방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환경전문가 등 12개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는 “2009년 정화작업이 시작

한 이후 10여년간 캠페이지 부지에서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다른 오염원이 유입될 수 없다”며 정화 이전 발생한 기존 유출의 재정화 책임을 국방부에 다시 물었다.

이에 “오염 정화작업이 이뤄진 곳은 전체 부지의 8% 정도로, 50년

을 사용한 부지의 오염 정화 기간이 2년 안팎으로 짧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도 힘들다”며 관련 책임 부실 정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와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는 지역이 모든 단체와 시민, **춘천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기존 오염과 폐아스콘, 유기성 폐기물 매립 등의 의혹이 연이어 터

지는 만큼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오염원이 없는지 변별할 필요하다는 의도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범시민대책위를 통한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오염 제거작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책임을 주한미군을 포함한 관련 주체들에게 물었다”고 밝혔다.

이후한기자@newsinnews.co.kr



## 녹색연합 캠프페이지 대책 촉구

옛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과 관련해 녹색연합이 “캠프페이지 부지 정화 사업이 부실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1일 옛 캠프페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부지내 깊이 1m도 되지 않은 땅 속에서 방치된 페아스콘층이 확인됐다”며 “아스콘층이 발견됐다는 것은 부지 반환 당시 정화와 복원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진행한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방부가 땅 속 상황이라는 점을 악용해 부실 정화를 한 점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독일·일본 등 해외의 선례를 참고해 앞으로 미군 반환 기지에 대한 정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국방부를 방문, 재조사와 정화비용 부담을 요구했으나 국방부 측은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이 과거에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적절차에 따라서 국방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 양측 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민정

전국매일 '20. 6. 2.(화)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발견된 페이스콘

1일 강원 춘천시 옛 마군가자터인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페이스콘이 발견돼 녹색연합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삼학기자



1일 강원 춘천시 옛 미군기지 타인 캠프페이지에서 폐아스콘이 발견돼 춘천시와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 폐아스콘까지 그대로 묻었다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 오염

기준치의 최대 6배가 넘는 오염이 확인된 옛 미군기지에서도 이번엔 폐아스콘이 부더기로 발견됐다.

녹색연합은 1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환 미군기지 정화 작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며 현장을 공개했다.

현장을 보면 문화재 현장조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 아래 1m 지점에 5cm 정도 두께의 아스콘 층이 모습을 드러낸다. 인근 땅 위에는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걷어낸 폐아스콘이 부더기로 쌓여 있었다. 땅 속에선 폐아스콘뿐 아니라 모래주머니와 케이블선 등의 폐기물도 확인됐다.

캠프페이지는 과거 미군이 비행장으로 사용했다. 대부분의 터가 아스콘으로 포장된 활주로였다. 토양오염 복원 전문가인 김휘중 박사는 "토양 복원을 위해선 반드시 아스콘을 제거해야 한다. 아스콘은 불투수층으로 식물들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화 작업을 마친 캠프페이지 땅속 3m 지점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수치가 3083mg/kg이나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기준치의 최대 6배가 넘는 오염이 확인된 것이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국방부는 철저히 전상을 규명해 시민에게 모든 과정을 낱알이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 부실정화 의혹 끊이지않는 춘천 캠프페이지

기준치 5배 초과 TPH 검출 이어  
별기 계류장 타에 패아스본 더미  
케이블선 등 폐기물 폐립도 확인

녹색연합 "기저 정보 전면 재검증"  
국립부여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도강에서 거둔 2019년 5월 15일 채취한 토양  
분석결과 TPH가 기준치 5배 초과  
크레타지층 인근 기저에서 패아스본  
더미 폐기물 확인과 부실정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은 지난 5월 15일 원오현동 권역  
환경개선사업에 준거지인 기저에서  
토양에서 발견된 패아스본 더미  
발견을 보도한 뒤, 패아스본 더미가  
전면 조사된 곳과 별기 계류장 등으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초  
자료 등을 찾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녹색연합과 현장에 동행한 전문가는 "패  
아스본은 불투수층으로 세척기 배수로 직접  
수출되는 반면 모래사장을 통해 만드신 계류  
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 보  
라지거나, 케이블선 등 폐기물도 발견된  
것을 확인했다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캠프페이지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국방부가 발주한 정비작업을 한 곳은  
매년 공사가 진행됐다. 당시에도 주변 경화  
에 대한 관리감독은 집중이 됐다고 지적하  
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바와



지난 2019년 미국군 춘천 캠프페이지 국영 정화사업 중 폐기물 처리장 별기 계류장용 패아스본정화작가 최근 분석해 발견된 15m 깊이의 입전과 부실  
정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에서도 캠프페이지에 방내해육관 인  
근 깊어 2m 지점 시점의 TPH 수치가 500  
2.0mg/kg으로 기준치(100mg/kg)를 5배 이상  
초과했다.

TPH는 토양 가운데 휘발성 유기물 성분  
을 총 유기물로 표현된 정도를 나타낸다. 석

유의 성분을 방해하는 것은 휘발 각종 질  
량과 실험 결과 양에 차이유발하는 성분이다.  
녹색연합은 이날 "이곳에서 오염원과 폐  
기를 찾아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세입자  
도 정화한 땅에 부실하게 처리했다는 것  
은 국민들의 공분을 살 일"이라고 지적했

다. 이어 "춘천 캠프페이지와 비슷한 시기에  
반영된 기저정화 사업이 제대로 이뤄졌는  
지 전면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며 "국방  
부는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시민에게  
모든 과정을 낱알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 신현욱 기자







# 춘천 미군기지 오염 조사 지자체·국방부 책임 공방

강원 춘천시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폐기물에 오염된 토양층(경향신문 5월19일자 12면 보도)이 발견되자 지자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이 국방부 측에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정화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며 "전면 재조사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군기지가 있었던 지자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기지 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해 춘천시 근화동 일대에 들어선 67만여㎡ 규모의 캠프페이지는 2005년 폐쇄됐다. 국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195여원을 들여 캠프페이지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했다.

2016년 국방부로부터 캠프페이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춘천시는 지난해 이 일대 54만4000㎡를 도시관리계획상 문화공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공원 개발에 앞서 최근 문화재 시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파헤쳐진 흙에서 폐기물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춘천시가 캠프페이지 부지 2곳의

캠프페이지 부지 폐기를

시·환경단체 "전면 재조사"

국방부 "타당한 근거 제시를"

시료를 채취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한 결과, 석유계종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우려기준(500mg/kg 이하)을 5.2~6.2배가량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유계종탄화수소는 유류로 오염된 시료 가운데 등유·경유·제트유·방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나타내는 항목이다.

춘천시와 시민단체들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이 부실하게 이뤄져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춘천시는 "지난주 문제점을 제기하자 국방부 측이 '원 토지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 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구상권 청구)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시장은 "가해자 측에서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환경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라며 "토양오염 원

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8~11년 전 실시된 캠프페이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의 부실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시장은 "당시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주변에서 20~30m 간격을 두고 시료를 채취해 조사함에 따라 누락 구간에서 이번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된 것"이라며 "향후 재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오염 토양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곳은 과거 정화작업 검증 지점에서 불과 4~5m 거리에 있어 부실 검증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춘천경찰서, 춘천 YMCA 등 지역의 12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오염 제거작업에서 발현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시민복합공원 조성이 늦어지 발생하는 유·무형의 손해까지 추한 미군을 포함한 모든 관련 주체들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정화과정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며 "오염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nu@kyunghyang.com



한국일보 '20. 6. 3.(수)

## 이재수 춘천시장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국방부가 책임져야”



춘천, 시민이 주인입니

이재수 춘천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하게 정화가 이뤄진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나 정부의 역할도 배도, 심지어는 토양오염 원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춘천시 근방동, 소양로 일대

토양 오염 전면 재조사 불가피  
조사 비용 춘천시 전가 이불성실  
타 자치단체와 연대 맞대응 시사

캠프페이지가 캠프페이지(대군기지) 토양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국방부에 촉구했다. 최근 석유계 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최대 5배 이상 초과한 점근들은, 왜냐하면 해당 지역까지 불거진 때문이다.

이재수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하게 정화가 이뤄진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나 정부의 역할도 배도, 심지어는 토양오염 원인 규명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7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춘천시 근방동, 소양로 일대

캠프페이지는 국방부가 2009년부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토양 12의 정화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불대해져 인근에 이 불출이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결과 TPH 수치가 kg당 2513mg으로 기준치(500mg/kg)를 5배 이상 초과했다. TPH는 토양 가운데 휘발유나 경유, 밀크유 등 유류로 오염된 정도를 나타낸다. 석유계 불출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 각종 불순물과 실험 결과 양까지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지난달 31일 과거 활기게 한을 인근 주주해한 해스본 다리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011년 바우더군 조사에서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역 주변에 20~30m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 일부 오염 재해의 누락될까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염확산을 최소화할 조치가 이뤄졌고,

정화과정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캠프페이지 환경오염 재조사 비용부담을 놓고 춘천시와 국방부가 갈등도 해마다 있다.

이 시장은 “지난주 국방부로부터 현재 토지 소유자면 춘천시에서 오염원인과 부실정화를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재차하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는 국방부가 책임을 춘천시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춘천시 역시 “가내와 가까이 민과 환경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립된 관례를 들어 국방부가 책임을 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춘천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국 미군기지가 있었던 자치단체와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성기자

동아일보 '20. 6. 3.(수)

## “국방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전면 재조사하라”

이재수 춘천시장 촉구

토양 오염이 확인된 강원 춘천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 대해 춘천시가 국방부에 전면 재조사와 정화를 촉구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현 소유자인 춘천시가 오염 원인과 부실 정화를 증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명백히 국방부가 적극 나서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는 2005년 미군이 반환한 뒤 국방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09~2012년 195억 원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마쳤다. 그러

나 최근 문화재 발굴 조사 중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일부 지점의 토양에서 등유나 경유 등 유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kg당 3083mg으로 기준치(kg당 500mg)의 6배 이상 초과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명백한 부실 정화라며 국방부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오염 원인과 부실 정화 증명에 대한 책임을 춘천시에 돌렸다. 또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 제시 후 법적 절차에 따라 재조사 및 정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검증 범시민대책위 오늘 구성

【춘천】속보=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구성(본보 3일자 4면, 지난 2일자 5·10면 보도)된다.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제정의 실천민주연합 등 지역 12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4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 검증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한다.

네트워크는 앞으로 모든 관련 주체에게 토양오염 재조사 및 추가 정화비용은 물론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유·무형 손실의 책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하위윤기자

강원일보 '20. 6. 5.(금)

##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하라”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발표  
대책위 “국방부 오염조사 비용 지불해야” 강조

【춘천】속보=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을 증증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4일 오전 보도가구 밝혔다.

대안노조와 춘천시지회, 춘천시이동장면교회, 춘천사우회자치위원회, 춘천시어삼단계합회, 춘천시농민단체협의회,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등은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위는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를 책임지고 시

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농어촌공사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에 대한 분명한 시정과 완전한 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 지출을 약속해야 한다”며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그만두고 책보를 전행한 책임지도 규명해 반영하고 단호하게 문제해결”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춘천시민의 피해와 오염행위에 대해 주한미군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과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토양오염 부실정화 사태에 대한 춘천시청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는 4일 춘천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했다. (춘천=김남경기자)

작 검증과 국회에 국정조사 건원도 주장했다. 대책위는 “춘천시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완전한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비용, 공화비용, 부지사용 허가 등에 따른 손해 배상

국방부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최종적으로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이든 토양오염 제거에 사용되면 시도 차원의 대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본주의 캠프를 비롯한 전국에 분포 미군기지 토양오염 제조지오 오염 제사작업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문기자)

도민일보 '20. 6. 5.(금)

## 캠프페이지부실정화 범시민대책위 구성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과 관련해 춘천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국방부의 책임있는 답변과 사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는 4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와 농어촌공사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완전한 오염제거를 위한 비용 지출을 약속하라”며 “국방부는 6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춘천시민들의 피해와 오염행위에 대해 주한미군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오세현



## “**춘천** 미군기지 토양오염 문제 해결” 범시민대책위원회, 정화·배상 요구

### “국방부, 부실정화 책임을”

강원 **춘천**시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춘천**지역 100여개 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오염된 토양 정화와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에서 1750억원이란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하고 매입한 캠프페이지 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부지를 온전한 상태로 넘겨주지 못한 국방부가 부실 정화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에는 **춘천**경실련, **춘천**YMCA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를 비롯해 **춘천**시이통장협의회연합회, 대한노인회**춘천**시연

합분회, **춘천**시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 **춘천**시농민단체협의회,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토양오염 재조사와 오염정화가 완료된 부지에 대한 검증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완전한 오염 제거를 위한 비용지불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같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청와대와 국방부를 찾아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한 후 비용을 국방부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송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은 보병부대, 항공, 기갑 및 해군, 해병 및 전투비행단, 특수작전대 등으로 편성돼 있다. 그보다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2004년 연

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 및 동산기지이전협정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위치했던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반환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반환기지 중 하나가 우리 지역에 1951년부터 미군이 주둔했던 **춘천** 캠프페이지다. 대부분의 기지 사남들은 오랜 기간 노후 과정이 진행되면서 주둔지의 유류저장고, 장비 정비

장, 격납고, 숙소 난방시설 등과 비전문가에 의한 유류시설 운영 문제

등에 의해 오염물질들이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반환기지는 2003년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SOFA) 협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명시된 제반조항과 절차에 따라 환경오염조사가 실시됐다.

캠프페이지는 조사 결과 석유계 탄화수소(TPH) 농도 5만502mg/kg과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농도 1,951mg/kg으로 나타나 2005년 당시 조사된 기지 중에서도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지하수 및 지표수에서 TPH가 708mg/l이어서

## 강원포럼

김휘중 (취미이것이)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장



조사대상 기지 내 농도에 비해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 후 **춘천**기지의 경우 유류오염 문제뿐만 아니라 고열제와 부산물인 다이옥신, 방사능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전투장비 및 시설 유지를 위해 경유를 주로 사용해 오던 미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효과적인 전투 지원을 위해 유류를 혼합해 등유 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 JP-8로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해결 방안은

바꿔 사용해 왔다. 그 결과 기존의 유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조사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춘천**시 조사에서 TPH는 높은 반면 BTEX가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것은 휘발성이 높은 특성 결과로 예측된다.

2005년 조사했던 캠프페이지의 오염 분포 결과도와 **춘천**시 조사에서 나타난 지역과 비교해 보면 그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오염이 나타나는 지역이 과거 조사 시 다른 지역보다 오염도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

야 할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오염원에 대한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빠른 판단에 의한 간결한 복원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오염 지역 특성과 오염원 주요인자, 오염물질 노출량, 오염원 이력, 오염원 관리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이 진행된 현 상황은 정화 능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미군기지 내 유류 및 독성물질 유출 사례와 합리적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의한 정보 획득이 우선돼야 한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히 정보를 분석하고, 기지 내 오염 유입인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한 지하수계를 통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정화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토양오염 역시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대책 기준을 훨씬 넘어선 상태임을 명심하고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복원에 필요한 비용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군이 주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비용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깊게 고민해야 할 때다.

강원일보 '20. 6. 15.(월)

## ‘캠프페이지 정화책임 회피’ 국방부 제안 거부

【춘천=속보=춘천] 캠프페이지 정화의 책임 범위 등을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가 조사결과에 따르자고 한 국방부대 요청(본보 지난 10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춘천시가 거부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최근 허영(춘천갑) 국회의원과 및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와의 의견을 수렴해 아같이 결정하고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춘천시는 국방부의 제안을 거부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자관위 구성원 문제가 있는 경우 제척·가피·회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및 의무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이같은 의무의 불이행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규정 역시 전무해 자칫 어느 한 쪽의 의

춘천시, 허영 의원·범대위 의견 반영 국방부에 통보  
시 재조사 요구·선제적 재정화 후 구상권 형구 모색



○허영(춘천갑)·사진 오른쪽에서 3번째 국회의원과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간 간담회가 지난 13일 춘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열렸다.

견을 대표해도 이를 사전에 막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신 춘천시는 국방부측의 재조사 및 재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선제적인

재정화 후 국방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책임이 불분명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오염상태가 악화되고, 현재 길이 파여있는 발굴터에서의 안전사고도 우

려되기 때문이다.

국회차원에서와 대안도 모색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변환이군 거지의 재검증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민간검증단 구성에 관한 임원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범대위측은 이번 주 중 규탄 현수막 게시를 시작하고 향후 시민불가침과 국방부 합의 방면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오동환 춘천시만사회단체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여차저 춘천시가 고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국방부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춘천시민 전체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윤성명기자

도민일보 '20. 6. 15.(월)

## 허영,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재검증 강조

지역시민사회계 간담회에서 대응 강구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원은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태와 관련해 지난 13일 춘천시민연대 사무실에서 지역시민사회계와 간담회를 갖고, 부실정화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 및 온전한 복원을 위한 민·관·청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허 의원은 "2011년에 정화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최근 기준치의 최대 6배에 달하는 오염물질과 다량의 폐아스콘까지 발견돼

부실정화 의혹이 불거졌다"며 "환경부와 국방부의 부실한 조사 및 정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재검증과 온전한 복원을 위한 임법 등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국방부가 최근 정화 책임을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의뢰해 규명하자고 춘천시에 제안한 사실에 대해, "이번 사태의 이해당사자들인 국방부, 환경부, 환경공단과 수탁업체들이 당연직 등으로 언제든 참여가 가능한 정화자문위를 산화하기 어렵다"며 "철저한 오염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공인된 민간검증단을 구성, 민간 검증단에는 해당 지역 주민·시민사회 전문가 등 기존 제도권 검증은 견제·보완할 수 있는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훈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명백한 국방부 책임”

이재수 시장 기자간담회  
재조사 요청 등 묵살 지적  
법시민대책위 구성 계획

【춘천】이재수 춘천시장이 캠프페이지 부지 토양오염 부실정화에 대한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 시장은 16일 시청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지역 불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부실정화 논란에 대해 “국방부에 토양오염 전문 재조사와 정화율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환경부 토양정화지원위원회와 조사결과에 따르는 계단을 했더니 “당연한 책임이 있는 국방부의 일관 태도와 잘못된 자세가 큰 장애 요인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주 안에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협약체결을 구상할 계획”이라면서 “재간담회가 가열하면 정치권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전국의 유사한 사례가 있는 지자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다음 달부터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사기간은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춘천대학교 서면연장과 강원도와의 인사 교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춘천대학교 서면 연장에 대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토 개발호선 대체

도로에 대해 협의 중으로 연말까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춘천시 부시장 자책 승진과 인사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전제하며 “두 기관의 상생 발전과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협의하는 단계로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민간검증단 구성 빨라진다



○17일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체육관 인근 3m 깊이 문화재발굴터 속에서 유출된 기름과 섞인 물 위에 누군가 밟아뜨린 것으로 보이는 신문이 떠있다.

허영 의원 국방부와 협의 마쳐  
시 내달부터 자체 재조사 물입

【춘천=강원일보】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율 둘러싼 국방부와 춘천시의 갈등(본보 지난 15·16일자 10면 보도)에 이어지는 가운데 허영(춘천·강·사전) 국회의원이 민간검증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허 의원은 최근 국방부 문화유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환경부 산하 토양정화지원위원회가 아닌 민간검증단에서 캠프페이지 재정화 책임 및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페이지 사례와 같이 정부(국방부)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같은 정부



(환경부) 산하 자원기구의 재관리를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민간검증단에는 토양정화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 및 지역사회의 인사가 포함되고, 각종 화학물질 검출보고서의 제출 의무를 갖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운영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국방부와 춘천시 사이의 합의에 의해 선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엄밀한 절차를 통한 법적제도 동사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법률 제정에 의존한다면 자칫 오염 상태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분자가 발

생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오염토양이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난 뒤인 17일 오전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현장은 3m 깊이의 유출된 기름 위로 누군가가 밟은 신문지가 떠다니는 등 부주의에 따른 추락사고 위험성도 나타내고 있다.

춘천시도 다음 달부터 자체 오염도 재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춘천 민간검증단 구성이 이뤄지면 검증 결과에 따라 국방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허영 의원은 “북한 시범내에 민간 검증단으로 하여금 재관찰과 정화성이 보편된 재관찰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20. 6. 18.(목)



“국방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저라”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부실정화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17일 **춘** 춘역 일대에 이불 지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신세희기자

강원일보 '20. 6. 22.(월)

## 춘천 캠프페이지 사례 통해 부실정화 문제 진단

24일 서울서 미군기지 환경 포럼  
허영 의원 “민간검증단 운영 조율”

속보= **춘천** 캠프페이지의 부실정화 문제(본보 지난 18일자 4면 보도)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반환미군기지 지역의 주민을 중심으로 한 대책 수립의 장이 열려 주목된다.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02호에서는 강원도와 서울, 경기 지역의 환경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미군기지 환경정책 포럼이 열린다. 김휘중 토양 및 퇴적물 환경 복원연구소장의 주제발표로 진행되는 이날 포럼에서는 **춘천** 캠프페이지의 정화부실 사례 발표와 함께 원주 캠프풍의 반환 이후 과제, 용산 미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조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최근 두 번째 설명서를 통해 “30만 **춘천** 시민은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먼저 오염 원인 규명을 위한 민간위원회를 구성해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배상과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최근 **춘천** 지역의 모든 사회·보훈·직능단체에 범대위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한 상태다.

허영 의원은 “민간검증단 운영에 대해 **춘천**시와 국방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율 중”이라며 “**춘천** 캠프페이지의 재정화 과정이 국내 모든 반환미군기지의 완벽한 정화로 이어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 강원일보 '20. 6. 22.(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자문** 춘천시는 지난 19일 시청 접견실에서 전문가그룹 간담회를 열고 옛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관련 조사 자문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도민일보 '20. 6. 22.(월)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춘천시 줄속행정 참사"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 제기  
시민버스 부패 유물성 우려도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캠프페이지 탄광 당시 춘천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춘천시의회 시정질에서 제기됐다. 제30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의가 지난 19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정질의 행렬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과 시내 버스 대책이였다.

김은석 의원은 "당시 채택된 정화 방식은 '토양정화법'이었는데 이는 국내에서 적용된 비율이 11%에 불과하고 대기오염 우려가 있어 시민 건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데 2차 오염 우려도 제거되는 방식"이라며 "이런 방식을 채택한 국방부도 문제

지만 춘천시는 강원도 국방부에 의존, 이에 대한 교차검증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부실정화 의혹은 최대한 정화작업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국방부와 춘천시의 줄속행정이 맞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 역시 "오염도 재조사 비용을 춘천시가 먼저 부담한 후 국방부에 맡겼다고 했는데 국방부에서 거부할 경우 고스란히 시민의 협세를 대신 투입하는 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버스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은기 의원은 "춘천시민버스의 경우 자산을 줄고 부채는 증가해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공영제 논의 과정에서 인수시 비판계될 수 있는 자회사의 적립금 문제와 수익노선 확보보완에 대한 해결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수 시장은 "캠프페이지 반환 당시 시 자체 검증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며 "춘천시, 시민사회단체, 국방부, 환경부 추천을 받아 민간 검증단을 구성해 그 검증단에서 나온 결과를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osae@kado.net](mailto:osae@kado.net)

도민일보 '20. 6. 22.(월)



**춘천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대응 전문가 간담회** 춘천시는 최근 접견실에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자문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그룹 간담회를 열었다.



◇**춘천**시의회(의장:이원규)는 22일 시의회에서 제301회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10대 전반기 **춘천**시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 캠프페이지 의혹해소특위 구성

**춘천**시의회 결의안 가결

**춘천**시의회에서 옛 미군 기지인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부실정화 의혹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춘천**시의회는 22일 시의회에서 제30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석 의원 외 13명이 발의한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앞으로 특위는 캠프페이지 내 토양오염 부실정화 의혹에 대해 정화주체인 국방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재조사·재정화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할 방침이다. **춘천**=하위윤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 국방부가 재조사 비용 부담

허영 의원 중재로 환경부·국방부·춘천시·시민단체 합의

속보=부실정화 과문에 휘말린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의 전면 재조사(본보 6월3일자 4·10면 보도)가 결국 국방부의 비용 부담으로 이뤄지게 됐다. ▶관련기사 4면

재조사 및 정화비용, 방식을 놓고 환경부·국방부·**춘천시**·시민사회단체의 중재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은 정화자문위원회의 활동과 민간검증을 병행 추진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안의 핵심은 '민간검증단(이하 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하는 것과 주요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캠프페이지의 경우, 최초의 오염 조사(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와 정화(국방부 및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이 모두 국가에 있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검증으로는 추후 신뢰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핵심 합의 내용이다.

먼저 재조사는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위촉한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와 **춘천시**, 캠프

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법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법대위)가 구성한 민간검증단이 재검증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춘천시**와 국방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간검증단은 환경부·국방부·**춘천시**·법대위가 각각 2인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 등 총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무엇보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검증단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검증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의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하기로 했다. 검증단 활동 기간은 발족 후 6개월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빠르면 내년 4월께 재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무한기자

## 반환미군기지 완벽 정화 안전장치 마련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조사 비용 국방부 부담 의미는

미군기지 재정화 기준 정립·반환 예정 22곳 완벽 정화 유도  
민간검증단 구성 땀 오염 정화비용·책임 논란 사전 방지 효과

3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충청) 국회의원의 취재로 이뤄진 **충청** 캠프페이지 재조사 민간검증단 운영 및 국방부의 비용부담 등의 불거지는 반환미군기지의 완벽한 정화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캠프페이지와 같이 정화 완료가

보이지 않던 전국 50곳의 미군기지에서도 오염토양이 다시 발생하는 경우의 재정화 절차 및 기준을 정립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안에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의 최종 결과보고서를 환경부의 **토양**에 제출하고, 환경화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유도 이 같은 기준으로서 의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향후 반환이 이뤄질 곳의 완벽한 정화를 유도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법제화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토양환경 재검증위원의 경계사항 및 채취·처리·회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없는 경우 환경부 장관이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재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다. 실제 계획이 이뤄지면 수천억원이 투입된 정화 완료 미군기지에서의 오염 재발 시 나타날 수 있는 정화비용과 책임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영 의원은 "환경부의 계획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으니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를 통해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자는 성격이 되고,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우현기자 [imw@kbsnews.co.kr](mailto:imw@kbsnews.co.kr)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검증단 구성

**충청**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원인 규명 및 정화를 위한 민간검증단이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충청**·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환경부와 국방부, **충청**시, 지역시민사회단체 등 캠프페이지현안과 연계된 기관이 참여한 민간검증단 구성안을 최종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국방부와 **충청**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검증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증단 위원은 환경부·국방부·**충청**시·범대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국방부와 **충청**시가 추천한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 임명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최초 오염과 조사, 정화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는 만큼 당사자가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을 통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강원일보 '20. 7. 9.(목)

## “캠프페이지 재조사 실제 합의각서까지 집중”

환경부·국방부·**춘천시**·시민사회단체 합의에 지역사회 기대감  
구속력 갖도록 검증·과거 근무 미군 중언 등 확보 필요성 제기

속보=반쯤미군기지인 **춘천** 캠프 페이지의 오염토양 재조사 방식을 둘러싼 환경부·국방부·**춘천시**·시민사회단체의 합의(본보 8일자 1~4면 보도)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에서 기대감과 함께 철저한 검증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다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의 원내 총재로 지난 7일 발표한 이번 합의는 환경부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및 민간검증단이 병행 운영과 국방부의 비공·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캠프페이지토양오염오염해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 오동철 집행위원장은 “합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실제 당사자의 구속력을 갖는 합의각

서(MOA)로 이어질 때까지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발대위는 향후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활동과 민간검증이 완료되는 때까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완벽한 정화할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페이지를 포함한 국내 곳곳의 미군기지 오염 현장을 알리는 데 힘써 온 녹색연합의 서재원 전문위원은 “유류, 오염뿐만 아니라 방사능과 다이옥신, 고염분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물리적인 조사와 함께 2008년, 2012년 토양정화 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의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토양오염 연구의 권위자인 김휘준 (주)에이시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 연구소장은 과거 캠프페이지에 근무한 미군의 증언과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조사 및 정화의 효율성은 과거의 실제 오염물 유출 사례를 찾았을 때 높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오염현장을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문화재 발굴 기관과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8일 오전 기자회견회를 통해 “이번 합의는 국방부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시정부 등이 충공세를 펼친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계속 법조계 연구계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공동 대응하면서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강원일보 '20. 7. 16.(목)

##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차질 불가피

**춘천시**-환경부 토양오염 민간검증 운영방식 합의  
이재수 시장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방안 마련할 것”

【**춘천**】**춘천시**와 환경부는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의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발맞춰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민간검증에 대한 운영방식을 협의했다.

시는 최근 허영 의원 사무실에서 환경부 담당자를 만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활동 요건 및 절차를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서 시는 자문위원 9명 가운데 농어촌공사 임원을 시민사

회단체 추천자로 교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 임원은 캠프페이지 주체로 객관적 자문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 위원회 활동자료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내부협의를 거쳐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수 시장은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부실정화에 따

른 재조사 및 추가 정화작업으로 일부 사업지연이 불가피하지만 빠른 시일 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비 등 150억원이 투입되는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경우 토양오염을 재조사하게 되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사업 지연의 귀책사유는 **춘천시**가 아닌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비 미집행 등의 이유로 관련 사업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무현·하유림기자**



강원일보 '20. 7. 16.(목)

## 허영 의원 캠프페이지 오염 재발방지 개정법 추진

속보=춘천시와 환경부, 국방부의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재조사 및 민간검증 합의(본보 지난 8일자 1·4면 보도)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의원은 15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캠프페이지 사례와 같이 정부가 정화 책임을 맡은 후 잔여오염물이 확인되는 경우의 '재검증'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송기현·이철규·한기호·이광재 의원(이상 서명 순) 등 도내 의원 5명을 포함한 총 28명이 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당사자인 경우 민간검증단의 재검증을 통해 최초 정화 과정을 살필 수 있게 한 점

이 골자다. 우선 자치단체의 장이나 시민단체가 지역주민의 건강상 피해, 정화 이후 기준치 이상의 잔여오염물 재확인을 이유로 재검증을 요청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재검증을 실시토록 했다. 이를 위한 민간검증단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과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위원 결격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은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자인 경우 제3자적 시각에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원선영기자

강원일보 '20. 7. 16.(목)

##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숲 조성 차질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으로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캠프페이지 미세먼지 숲 조성도 차질을 빚게 됐다. 이재수 시장은 15일 "캠프페이지 정화 작업으로 미세먼지 숲 조성 2단계 사업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비 72억원 등 국·도비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숲 조성 2단계 사업 예산 규모는 총 120억원이다. 시는 국비를 모두 산림청에 반납한 뒤 추후 공모 때 다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춘천**시 등은 **춘천**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 원인 규정 및 정화를 위한 민간검증단을 구성, 오염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오세현

강원일보 '20. 7. 17.(금)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 회의 **춘천**시의회는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계획을 협의했다. 이날 김은석 의원과 김지숙 의원이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도민일보 '20. 7. 17.(금)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대책 특별위 **춘천**시의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16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김은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지숙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특위 회의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 2차 회의가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재검증 합의각서 조율 마무리

국방부-**춘천**시·시민사회단체 최근 합의각서 의견 조율 마쳐  
검증단 9명 구성·6개월 활동·재검증 비용 국방부 우선 마련  
세부내용 담은 각서 법적 구속력 갖춰 빠르면 이달 중 서명

속보=국방부와 **춘천**시, 시민사회단체가 반원 미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의 오염토양 재조사 방식을 둘러싼 합의(본보 7월8일자 1~4면 보도)를 한 데 이어 최근 삼재 합의각서(MOA)안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MOA는 세부 시행 내용을 담은 문서로 양해각서(MOU)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19일 **춘천**시와 국방부의 합의안 중재에 앞장선 허영(**춘천** 강서동)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번 MOA안에는 활

동기간과 검증단의 자격요건, 비용부담책임 등 10개 항목이 담겼다.

활동기간은 발족 후 6개월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검증위원은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캠프페이지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단 캠프페이지 최초 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배제된다.



재검증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검화 책임자 간 분담한다. 검증단의 운영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한다. 이

밖에 재검증 완료 시 회의를 열어 담긴 배서와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하고, **춘천**시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를 공개토록 했다.

검증단 활동에 앞서 **춘천**시는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4제3항)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환경부에 요청토록 하면 시 반행법상 절차도 밟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MOA안에 대해 국방부와 **춘천**시, 범대위는 빠르면 이달 중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반원 미군기지 오염토와 정화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춘천** 캠프페이지가 최악의 정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아무런가

## 춘천 캠프페이지 재조사 이르면 내달 착수

검증단 구성 합의각서 내일 서명- 10월까지 위원 선정

속보=반환 미군기지인 **춘천** 캠프 페이지의 오염토양에 대한 재조사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이뤄진다.

허영(**춘천**간) 국회의원에 따르면 **춘천**시와 국방부, 캠프페이지토양 오염배상요구법시반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3일 민간검증단(이하 검증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각서(MOA·분보 8월20일자 4면 보도)에 서명하고 재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번에 합의된 각서 내용을 보면 검증단의 활동기간은 발족 후 6개월

이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검증위원은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범대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8명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춘천**시는 10월까지 위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곧바로 재검증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재검증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고, 추후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 정산한다. 검증단의 운영 비용은 **춘천**시가 부담한다. 이 밖에 재검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한다.

캠프페이지는 2007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정화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올 5월 **춘천**시가 부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2011년 정화 완료 보고 9년 만에 재검증에 이르게 됐다.

**춘천**시 관계자는 “조속히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을 찾고, 정화작업을 통해 안전한 캠프페이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하위원기자

### 캠프페이지 오염 재검증 민간검증단 구성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의 원인 규명 및 정화를 위한 재검증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춘천**시는 3일 국방부,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법시반대책위원회(범대위)와 함께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검증단) 구성과 운영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합의각서 체결에 따라 시와 국방부, 범대위는 검증단을 구성한다. 검증단은 발족 후 6개월간 활동하며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와 환경부, 국방부, 범대위가 각각 2명씩 추천한 8인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추천한 1인으로 총 9인이다. 다만 캠프페이지 최초조사나 정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검증단의 재검증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부담하고 검증단과 자문위의 규명 결과에 따라 정화책임자 간에 정산한다.

오세현





**시의회 캠프페이지 특위 간담회** **춘천**시의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석)’**는 1일 오후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의혹 이번엔 밝혀질까

(춘천시 및 지역 기자)

광복 75주년 기념사업 '봄 피크닉'이 캠프페이지 오염원을 막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9년 만에 이뤄지는 폐원권 결과에 따라 정화권이 펼쳐지는 봄 피크닉은 파장이 예상된다.

**춘천시**는 3월 국영부, 캠프페이지로, 양양군에 양양군 법사관 대령위와 함께 정화권 구상 및 운영에 대한 협의에 대해 사정했다고 밝혔다.

결정단은 6개월간 활동한다. 다만 한 차례 한해 3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춘천시**와 환경부, 국영부, 시민단체 등에 추진한 9월 1일부터 활동한다. 비록 국영부가 무한 부담하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 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보유오염에 대한 원인을 찾고, 정화사업을 통해 캠프페이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춘천시** 군영부와 소양호에 존재하는 캠프페이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춘천시**국영부-시민단체와 합의 정화 작업 실상 9년만에 재검증

환경부 등 각계 추진인사 9월 정화권 부여 6개월 동안 활동 시민 등 전원 앞서 오염원 규명

1951년부터 2007년까지 미군이 주둔했던 곳이다. 이후 2000년 국방부가 임주한 정화사업을 한국영여군공사가 2011년까지 진행했다.

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 3월이다. 정화사업은 11경에서 정화사업을 인근에서 기업까지 열전되었다.

**춘천시**가 의뢰한 조사 결과, 캠프페이지 내 정화사업은 연평균 2m 지점 지점의 총면적 500㎡(구지는 500㎡, 2.6ha)으로 나타났다. 기존 500㎡



지난 6월 강원 **춘천시**와 양양군지하(인) 캠프페이지 부지정화사업이 임진대 녹색연합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면적 500㎡(구지는 500㎡)였다.

TH는 요양에 알다나 기쁨에 의해 열려있는 지점 나타난다. 가깝게는 서울신장에 문제가 있고 장기간 꾸준히 노출

될 경우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년 4.5의 황기계류량 등 산악지역에 캐스프 100이 발견되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강원일보 '20. 9. 11.(금)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간담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김은석)는 10일 **춘천**시의회에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도민일보 '20. 9. 11.(금)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자문단 간담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석)는 10일 오전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자문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원일보 '20. 9. 17.(목)

## 캠프페이지 오염 재발방지 개정안 상임위 상정

허영 국회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반환미군기지서 잔여오염물 확인 시 민간검증단 재검증

속보=더불어민주당 허영(총선 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28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번호 7월16일자 3번 보도)이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이 법은 **총선** 캠프페이지와 같이 정부가 정화 책임을 맡은 전국의 반환미군기지에서 잔여오염물이 확인되는 경우 민간검증단을 통해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요건을 구체화한 것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법안 심의를 앞두고 18일까지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줄 것을 허 의원실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되는 과정을 거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기존 토양환경보전법(제10조의 4 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주

가적인 정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법의 의원들은 당사자가 정부 기관인 경우에는 객관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검증단을 통한 재검증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가결돼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허영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전국적으로 미군기지의 반환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정화를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우현기자 trustme@kwnews.co.kr

강원일보 '20. 9. 25.(금)

## “캠프페이지 완전정화 위해 심층구조까지 재조사 필요”

무상정화대상요구대학원 주최 '시민토론회'서 지역 토양 외 건물조사 필수·개발 계획 일체 중단 주장도

**속보=**전국 재검증을 앞둔 **총선** 캠프페이지(본보 지난 20일자 4면 보도)의 종전된 정화물 위생기는 "심층구조까지 건물부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여중 보양물 회계장 회계 책임자(구소속은 10일 **총선** 캠프페이지에 들어와 살인 '캠프페이지'를 위한 오염 재조사와 종전된 정화를 위한 사전토론회에서 열 개지로 나와 "10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는 재조사를 통한

수직·수평 오염 범위가 매우 넓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같이 설명했다. 특히 "캠프페이지 토양 이외에도 부속 건물에 대한 다이옥신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캠프페이지 무상정화 대상요구 대학원에 개최된 주최로 열렸다. 개발 계획이던 배후선 복원권을 재영생대검정 "캠프페이지는 앞으로 변형될 원상 미군기지 특이사항도 있고 최근 변형



이(정) 캠프페이지의 불치한 오염 조사가 시·군·자치단체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25일 **총선** 캠프페이지 무상정화 대상요구 대학원에 개최된 주최로 열렸다.

한민 무공-공공-동적선의 한 대이기도 있다"며 "관 시립을 오염토양 재조사에 시민과 한

곳지 일체의 무인한 계획 추진을 결속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환경고교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정화사업으로 인해 문화·발달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며, 특히 지역 안락세계를 유지해 서도구 역할을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동훈 시민단체회 집행위원장은 "환경검정단 구성 후 의지가 이뤄진 만큼 이번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 고관나와 재검증 절차를 지키며 캠프페이지로 움직여야 할"라고 강조했다.

이우현기자 trustme@kwnews.co.kr



도민일보 '20. 10. 7.(수)



**시의회 캠프페이지 특위 현장점검** **춘천시**의 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석)는 6일 오후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강원일보 '20. 10. 12.(월)

## 캠프페이지 재정화 미군기지 반환史 중요 쟁점 부상

환경부 서울 내 4곳 반환미군기지 오염도 조사 결과 최근 국회서 공개  
**춘천시** 사례 통해 국민적 관심 확산

속보=**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에 대한 민간 재검증 절차 본보 9월2일자 4면 보도가 이달 중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환경부가 반환을 앞둔 서울 소재 미군기지 4곳의 오염도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해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이번 환경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 공병대 사병고 캄파운드 등 4곳의 조사

지역 오염도가 전반적으로 심각했다. 토양에서는 기준치의 15배, 지하수에서는 380배의 석유계 탄화수소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한미 간 환경 협의 과정에서 오염 원인을 둘러싼 한미 간의 책임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미군기지 반환 협상 절차를 밟는 중 환경조사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협상 과정과 오염조사, 반환 후 정화 과정 모두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환경단체에서는 올 5월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군기지 전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춘천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재조사를 위한 민간검증단은 이달 중 구성을 마치고 6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정화책임자를 확정하기 위한 환경부의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활동도 함께 이뤄진다.

배재선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캠프페이지의 재정화 사례는 미군기지 반환 역사에 중요한 기록이 될 것"이라며 "이번 민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정화 요구를 미국과 정부 측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우현기자**





#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부지서 유류통 수십개 추가 발견

201 30여개, 일부 기름 가득차  
1m 깊이 파묻혀 부실정화 논란

충청남도 천안시 캠프페이지에서 기름띠가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때문에 제기된 가운데 천안시 문화재 발굴 부지에서 또 201 30여개의 유류통 수십개가 추가로 발견, 부실정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약 201 30여개의 유류통 30여개가 발견됐다. 해당 장소는 1984년 해군 해군으로, 지난 상반기 완공을 앞둔 기름띠가 발견된 부실정화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발굴 부지에 있던 기름띠는 미군 부대가 들어섰을 당시에는 통으로 활용했던 통이다. 27일 오후 발견된 통에는 원형을 알 수 있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한 쪽에 들어온 유류통은 기름띠가 덮여 땅에 묻혀있는 유류통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기름이 가득찬 유류통도 발견됐다.

시 관계자는 "기름 용도가 무엇인지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유류통 수십개가 발견된 모습. 사진은 27일 천안시 문화재 발굴 부지서 시 관계자가 유류통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다.

는 용도를 파악할 수 없다"면서도 "기름 발견되면서 2018년부터 2022년 천안시가 실시한 토지정화는 재확인 시 까지 진행될지와 여부가 불확실"이라는 지 로 중오염도가 범용기준치를 초과한 경 유류통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반기 기름띠에 이어 유류통이 부대 해이 되었다고 제기했다. 당시 한국농어 으로 나타난 지역 중심으로 진행됐다.

30~90m 간격으로 굴러 지점을 정하고 1m 깊이에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원상 복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일반기 기름띠는 관할 사에는 여 같은 기본배치에 2~3m 깊이의 유류오염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번 유류통은 1m 깊이에서 발견돼 부실정화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는 유류통을 발견한 직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국방부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날 오후 현장순찰을 할 예정이다. 시는 환경청과가 들어간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 조사단을 꾸려 유류통 폐기물 처리와 필요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시정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정은 2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화 방법은 민간전문가에서 정밀한 분석을 위한 유류통발견은 당시 토지정화/부실화 차이로 봤을 때 미흡한 증거"라며 "필요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오세현 opse@khan.com

## “문제 없다”던 국방부·환경부 책임론 대두

캠프페이지 유류통 대거 발견  
사전조사·오염기준 불합리 제기  
시의회 특위 오늘 현장방문 예정  
국방부 “미군 소행 확인시 조치”

캠프페이지에서 유류통이 부대기로 발견되면서 캠프페이지 정화작업을 총괄했던 환경부와 국방부의 책임론이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상반기 기름띠는 관 이후에도 양측은 마운적인 태도로 일관, 이번 유류통 발견이 태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천안시에 따르면 유류통이

부대기로 발견된 지점은 당초 보양오염 정화지역 밖이다. 때문에 캠프페이지 반환 당시 환경부가 주관했던 보양오염정화지역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캠프페이지 도양오염배상요구법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기름통이 발견된 부지는 환경공단 조사보고서에 비오염지역이라고 명시한 곳"이라며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사전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증거이며 환경부의 보양오염기준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는 부실한 사전조사에 대해 천안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시가 일은

불질적인 피해 배상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안시의 보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은석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장은 "미군이 우선적으로 조치해 줘도 한 지하에 매설된 유류통 제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환경부와 국방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지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특위는 28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유류통 발견이 환경부와 국방부의 태도 전환에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올 상반기 기름띠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화작업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방부와 환경부, 천안시 등이 참여한 보양오염민간공동연구구성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환경부측 2명과 국방부측 2명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국방부에서는 출근 이 기름이 정화작업 이후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피했지만 유류통이 대거 발견되면서 이제는 국방부와 환경부도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류통이 미군에 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국방부에서 조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현





**춘천 옛 미군기지터서 유류통 무더기 발견** 27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터에서 땅 속에 매립된 유류통 수십개가 발견됐다. 이곳은 부실 정화 의혹이 제기된 곳으로 춘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유류통 매립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춘천/연합뉴스**

##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지연 불가피

부지에서 유류통 수십개 추가 발견 따라 전면 재조사 시 "공원 조성 예정대로" - 특위 "국방부 책임져야"

【춘천=속보=춘천] 옛 미군기지 부지에서 토양오염 부실정화에 이어 땅속에 매립된 유류통 수십 개가 추가로 발견된 보(보)로(보)되면서 캠프페이지 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춘천시는 5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의 부실정화가 확인된 이후에도 옛 미군기지를 공

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설계공모를 진행했다.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캠프페이지 활용에 대해 문화공원과 수변도로를 시민 중심의 보행권도로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와 공모를 위한 1차 실시 및 환경실명회를 실시했으며 작을물수·기술실사·2단계 실

사·당선작 발표만 남아 있다. 시는 공원 조성은 분해재 발굴과 토양오염 재정화 이후 추진할 예정으로 점차 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밖에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최초 부실정화가 확인된 이외의 지역으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공원 조성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에 앞서 국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은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분해재 발굴과 토양오염 재정화가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사업은 예정대로 진행을 계획"이라며 "경국 토양오염 부실정화 조사 및 재정화 기간에 따라 사업 완료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의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는 38일 유류통이 발견된 현장을 점검하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는

"주현미군은 지하유류저장탱크 및 열발단 개리 등 기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매립고국방부의 검증도 없었다"며 "국방부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재조사와 재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캠프페이지 부실정화로 춘천시민들이 입은 상처와 피해가 크다"면서 "50년 만에 반환받은 땅에 시민공원을 만들고자 했던 꿈은 커억안이 무보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기자 hw43@koreans.co.kr**

## “페아스콘 이어 윤활유통까지... 이러다 방사능도 나올라”

분노한 주민들

북방 직원 “호실 책임 끝까지 명명확하게 밝힐 것”

국방부 “주한미군 폐업 확인 - 빠른 시일 내 처리”

속보=천안이 최초 보도했던 **북방** 폐업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국방부** 직원들은 폐업통고 기밀성이 폐업통고 사실에 대해 드로 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 독성물질 매립 의혹 불거져

**천안**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인체에 유해한 오염원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그동안 언급됐던 방사능과 고염제, 다이옥신 등의 독성물질 매립 의혹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2012년 국방부로부터 제출된 정화완료 검증 및 준공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정화작업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준 초과 오염물질이 없어야 했다. 하지만 10년도 안 돼 법정기준의 6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S) 함유 기름층에 이어 아스콘, 윤활유(추진) 기름통수습여개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그동안 유출 의혹이 일었던

### 1972년 핵무기 사고 미군 증언 - 실제 배치는 사실로 드러나 고염제 매립 증언도 쏟아져 - 환경단체 “철저 재조사 나설 것”

모든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캠프페이지에는 1987년 9월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다는 사실이 2005년 미군 측의 정보공개통해 드러난 데다 2011년에는 “1972년에 캠프페이지에서 핵무기 사고가 있었다”는 미군의 증언도 나왔다. 당시 증언했던 퇴역군인 댈러스 스텔씨는 고염제도 부지에 매립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1968년 당시 미 항공 6소대에서 **천안** 북쪽 DMZ 지역에 항공 삼포탄 후 남은 분량을 가지 내에 묻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독성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벤조다이옥신계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다.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 인체에 축적되면 심한 피부질환과 폐암, 인후암, 전립선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과거 조사 과정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며 “민간검증단과 함께 철저하고 완벽한 재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우한기자**

## “캠프페이지 유류통 발견 춘천 시민들에 사과해야”

정의당 도당 성명

정의당 강원도당이 지난 27일 옛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미군이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류통이 무더기로 발견된 것에 대해 “국방부와 환경부는 춘천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무한책임 자세로 정화작업 계획을 재정립하라”고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국방부 측이 사전 조사를 통해 오염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지역”이라며 “국방부의 사전 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캠프페이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 동안 무려 19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토양 정화작업을 했다. 그러나 올 5월 기름띠 발견에 이어 유류통까지 발견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정화와 복원에 대한 재검증 및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하라”고 강조했다.

이하늘기자 2sky@



## “국방부, 캠프페이지 재조사·재정화해야”

### 시의회 캠프페이지 특위 성명

속보=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기름통이 무단기로 발견,부실정화 의혹이 제기 (본지 10월28일자 5면·9면) 되자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특위)가 국방부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특위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견된 유류통은 주한미군이 기본조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떠났고,이에 대한 기본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유류통이 발견된 지역은 정화구역에서 배제된 곳으로 환경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범위가 충족하지 못했고 정화과정이 허술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방부는 민간검증단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재조사와 재정화에 나서는 것만이 춘천 시민들에게 제대로 사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사능과 고염제 의혹도 거론했다. 특위는 “토양 심층부와 지하수 오염까지 의심해야 하고 당시 조사했던 방사능과 고염제 의혹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현

## “국방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무한책임 필요”

### 정의당 도당 성명 통해 책임 촉구

### “정화·복원 재검증,전수조사 해야”

속보=정의당 강원도당이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논란 (본지 10월 28일자 5면)과 관련해 국방부와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28일 성명을 통해 “춘천 캠프페이지에 미군이 매립한 것이

확실히 보이는 유류통 수십개가 무단기로 발견,큰 충격과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 “국방부의 사전환경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만천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당은 “더 이상 발뺌할 생각 말고 춘천 시민에게 사과하고 무한책임의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화와 복원에 대한 재검증 및 전수조사 방법과 정화방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정승환

## 부실정화 책임소재 명백히 밝혀야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오염, 국방부·환경부 책임회피 안 돼

지난 5월 4년간이나 정화작업을 한 **춘천**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에서 기름띠가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정화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서 유헤유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20ℓ 규모의 유류통 수십개가 추가로 발견돼 부실정화 논란이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통 30여개는 봄내체육관 바로 옆, 활주로로 활용됐던 부지로 당초 토양오염 정화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오염도가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정화작업을 실시했는데 당시 20~30m 간격으로 굴착 지점을 정하고 1m 깊이에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지 않으면 정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2~3m 깊이의 유류 오염층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견된 유류통은 토지오염 정화지역 밖 지역의 1m 깊이에 파묻혀 있어 광범위한 토양오염 우려와 함께 부실정화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상반기 기름띠 논란이 불거질 당시 "정화작업에는 문제가 없었다", "정화작업 이후에 기름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하면서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구성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춘천**시 등과 토양오염 민간검증단을 구성하기로 합의만 하고 아직 검증단 인원을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유류통까지 대거 발견된 만큼 조속히 검증단을 구성, 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름통이 발견된 부지는 환경공단 조사보고서에 비오염지역으로 명시한 곳"이라며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사전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증거이자 환경부의 토양오염 기준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으며, 이재수 **춘천**시장도 "유류통 발견은 당시 토지정화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또 하나의 증거"라고 동의했습니다.

**춘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조사반을 꾸려 유류통 매입경위와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춘천**시의회 김은석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장의 지적처럼 환경부와 국방부는 책임을 인정하고 시민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을 수 있을지 진정성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 전국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공동 대응

속보=본보의 최초 보도로 드러난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관련 본보 10월28일과 5면 보도에 이어지면서, 전국의 반환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 간 네트워크 구성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과 미군기지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2강화실에서 '전국 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12년** 정화가 완료됐다고 보고된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물에 기름과 폐기스톤이 이어 최근엔 유류통 30여 개가 발견돼 발견되는 등 부실정화 근거가 속속 드러나자 공동 대응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이뤄진 자라다. 이날 **춘천**과 원주뿐만 아니라 인천 부평과 경기도 광명·동두천, 전북 군산, 서울 용산 등 미군기지 소재 지역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사회 발표를 할 예정이다.

반환미군기지 부실정화 해법은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 완료 보고 후 8년 만인 올 5월 초 법정기준치에 6배가 넘는 석유계혼탁도수(TPHS) 함유 기름 오염 보양이 발견되면서 알파벳과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한 달 만에 케아스본 폐업 사할까지 폭



○지난달 27일 **춘천**시 공무원이 옛 미군기지였던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땅속에 매립된 유류통 수십 개가 발견되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김남익기자

## 최근 **춘천** 지역 오염 사례 본보 보도 후 큰 반향 주민 네트워크 구성 추진-18일 국회서 증언대회

인되면서 부실정화 논란은 결국 민간 검증단을 통한 개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이달 초 국방부와 환경부, **춘천**시 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국회의원이 추진한 9명 드로 미회

전 검증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춘천** 캠프페이지 내 정화 대상에서 배제했던 지점에서 지난달 27일 유류통 수십여 개가 매립된 채 드러나자 이번엔 전국 모든 반환미

군기지의 개조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영 의원은 "최근 캠프페이지 사례는 다른 지역의 반환미군기지에서도 분명히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화 당시지가 정부기관의 경우와 민간 업체로 인해 정화할 당시 신청한 토양 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한미

# 춘천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 잠정 중단

폐유류통 발견 부실정화 논란  
방사능 존재 가능성까지 제기  
문화재청 조사원 건강위해 결정  
공원조성계획도 차질 불가과

속보=수십여개의 폐유류통이 팔  
아 파묻힌 채 발견된 춘천 캠프페이  
지(분보 10월28일자 5면 보도)의 문  
화재 발굴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문화재청은 올해 초 기름 토양과  
폐아스콘에 이어 지난달 폐유류통저  
지 발견되자 조사원의 건강 등을 보  
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기름뿐만 아니라 고열제로  
인한 다이옥신과 핵무기로 인한 잔  
존 방사능 등의 존재 가능성까지 제  
기되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사  
재개는 국방부와 춘천시가 최근 발  
견된 폐유류통의 제거작업을 모두  
마친 후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방  
침이다.

이로써 총 66만㎡의 전체 부지 가  
운데 30만5,000㎡를 대상으로 2023  
년까지 계획된 캠프페이지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는 작업 기간이 연장될



문화재청이 춘천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2일 폐유류통 수십개가 발견된 지역을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문화  
재 발굴과 토양오염 재정화 완료 뒤  
추진하려던 공원조성 계획도 차질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조사를  
하던 중 오염물질이 발견돼 중단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언제  
재개할지는 정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춘천  
시 관계자도 “국방부와 협의해 최  
한 빠른 시일 내에 유류통을 제거하  
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힘쓰  
다”고 말했다.

한편 캠프페이지가 위치한 춘천을  
비롯해 전국에 반쯤미군기지 소재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문제해결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구성에 착수했  
다. 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오는 18  
일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실에서 원주, 부령, 평택, 등  
무주, 군산, 용산 지역 시민이 참여하  
는 ‘전국 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중  
단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  
에 나선다. 이우현기자

## 이 시장 “캠프페이지 정화 시간끝기 그만”

국방부·환경부에 신속대응 촉구  
유류통 제거·민간검증단 등 과제

속보=옛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유류통 30여개가 무더기로 발견, 부실정화 의혹이 제기(본지 10월 28일자 5면 등)된 가운데 이재수 **춘천** 시장이 국방부와 환경부를 향해 “시간끝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수 시장은 3일 오후 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에서 매립된 유류통을 보고 ‘미군 측이 한 행위인 것 같다’고 했지만 와서 (유류통을) 끄집어 내고 사실 확인이 중요한 데 왜 이렇게 시간끝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절박하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원하는 데 신속하게 대응하고 진행해야 한다

는 자세가 없다”고 지적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유류통 발견 직후 현장을 찾아 미군 측이 한 행위임을 인정했지만 그 이후 후속조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국방부와 환경부, **춘천**시 등이 참여한 토양오염 민간검증단 구성 역시 환경부 측 2명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달 안에는 검증단을 출범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반기 기름띠에 이어 유류통까지 잇따라 발견되면서 캠프페이지 일대 개발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제대로 조사하고 치유하는 게 맞다”며 “국방부와 환경부가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오세현



## 춘천캠프페이지 또 오염토 나왔다 ... 이번엔 육아지원센터 옆

(강원도청에서 제공)

도로공사 현장 토양 2m 깊이·10㎡ 넓이 파헤쳐 커뮼늄계 전동  
**분석** 시 "당초 비오염 예상지역으로 구분" 잘못 분석 여파 나서  
토양오염·폐유누출 등 부실경차 과몰속 원상복구 요구 커질듯

북한=북한과 개마고원 지역을  
통틀고 있는 북 **춘천** 캠프페이지는  
보 1000여가 넘는 토양 파헤쳐  
연다시 뒤늦게 오염된 것으로 보  
는 토양이 발견됐다. 이번에는 또 대  
규모로 시공 부대 경제 지원단원 하  
차점지(차점지)에 인근 조종사 하  
소에서 토양이 나왔다고 한다.

지난 7일 **춘천** 시 소로 **춘천** 군  
동남부에서 발생한 강릉 구간과  
불사탄소(탄소) 도로 확보장차  
현장(현장)에서 발견된 토양이  
있다. 현장(현장)에서 발견된 토양  
은 강릉 부대에서 두 노 길이  
가운데서 새로 100 남의 구간과  
선 후 일부에서 발견된 토양  
토양이다. 이날 오전부터 공사  
나온 곳(현장)에서 토양이 나왔  
다. 발견된 토양은 강릉 부대  
전원이다. 이 토양을 강릉 부대  
에서 강릉 부대 부대 토양으로  
이 토양을 강릉 부대 토양으로  
이 토양을 강릉 부대 토양으로

토양(토양)을 강릉 부대 토양으로  
수정(수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을 파헤쳐 오염토를 파헤치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은 개마고원 **춘천**은  
보 시(보)를 파헤쳐 토양(토양)에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현장(현장)에서 발견된 토양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춘천** 시 관계자는 "약 500 여  
지점도 발견된 토양(토양)을  
구분(구분)하고 있다. 이 토양(토양)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이번 **춘천** 시는 토양(토양)을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 계기로 오는 11월에는 국  
제(국제)로 주요 구간(구간)을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지정(지정)하고 강릉 부대 토양으로



수출(수출)된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춘천** 시 관계자는 "약 500 여 지점도 발견된 토양(토양)을 구분(구분)하고 있다. 이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토양(토양)을 파헤치고 있다."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축소조사 안된다”

오염 사례 올해만 4번 드러나  
조사범위 전체부지 필요 불구  
국방부 “오염된 지역만 조사”  
법대위 오늘 규탄 기자회견

춘천=홍성욱 기자 캠프페이지 공역 지역에서 유류 오염 의혹 토양이 발견된(보도) 이후 4번 보도되면서 전국의 언론·시민단체에 대한(연구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캠프페이지에서 유류 오염 의혹에 대해 조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캠프페이지에서는

올 5월 병정 기증차와 함께 남은 석유계통탄화수소에 오염된 토양이 나온 데 이어 6월에는 제마스콘, 지난 달에는 제마스콘 수납이체가 쏟아져 나와 충격을 줬다. 세 차례에 걸친 오염 사례에 이어 이번에는 사전 조사를 통해 병정차에서 배출된 곳의 땅 속 유류 잔여물에서 기름 냄새만 토양이 나타난 것이다.

유류 오염 의혹 토양이 또다시 드러나면서 춘천시와 캠프페이지도 오염대응요구법시행대체위원회, 국방부, 환경부가 구성 중인 민간검증단의 활동 범위를 캠프페이지 전역으로 권리는 데 적극 않은 영향이 미

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캠프페이지 이남에 있어 병력편 후 권회 관료 보고된 국내 미군기지 57곳에 대한 재검증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증단 구성에 합의한 춘천시 중 4개 기관·사회단체는 9일 현재 7명의 추천위원 신청을 마쳤고 조민강 환경부로부터 2명의 추천위원을 받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증단 내부 운영 규정 조항 관련에서 조사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와 법대위는 올해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제반을 두지

않았지만, 국방부 측은 호안오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축소해 원상조사를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순회하고 있다”며 10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오동환 법대위 집행위원장은 “검증단의 활동에는 그 범위가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에는 유류 캠프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서 나온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도농환경안전연구원 세정분석을 의뢰했다. 늦어도 이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엔(이)

## “오염물질 쏟아지는데 국방부는 은폐·책임 전가에만 몰두”

법대위 ‘춘천 캠프페이지 전수조사’ 강력 촉구

민간검증단 구성 국방부 제한 운영규정에 “저부” 일장 발해  
전수조사 거부하면 일장 두들 - 국방부 “조사 축소 시도 하나”

춘천=홍성욱 기자 캠프페이지에서 오염물질이 토양에 발견된(보도) 지난 11월 4일 4번 보도되면서 언론·시민단체에 대한(연구조사)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대위에서 호안오염에 요구된(보도) 춘천시와 캠프페이지도 오염대응요구법시행대체위원회, 국방부, 환경부가 구성 중인 민간검증단의 활동 범위를 캠프페이지 전역으로 권리는 데 적극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캠프페이지 이남에 있어 병력편 후 권회 관료 보고된 국내 미군기지 57곳에 대한 재검증 요구도 거세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검증단 구성에 합의한 춘천시 중 4개 기관·사회단체는 9일 현재 7명의 추천위원 신청을 마쳤고 조민강 환경부로부터 2명의 추천위원을 받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증단 내부 운영 규정 조항 관련에서 조사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와 법대위는 올해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제반을 두지 않았지만, 국방부 측은 호안오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축소해 원상조사를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순회하고 있다”며 10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오동환 법대위 집행위원장은 “검증단의 활동에는 그 범위가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에는 유류 캠프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서 나온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도농환경안전연구원 세정분석을 의뢰했다. 늦어도 이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엔(이)



춘천시민을 기쁘게 하고 무장한 공화국. 춘천시와 법대위는 올해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제반을 두지 않았지만, 국방부 측은 호안오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축소해 원상조사를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검증단 구성에 합의한 춘천시 중 4개 기관·사회단체는 9일 현재 7명의 추천위원 신청을 마쳤고 조민강 환경부로부터 2명의 추천위원을 받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증단 내부 운영 규정 조항 관련에서 조사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춘천시에는 유류 캠프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서 나온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도농환경안전연구원 세정분석을 의뢰했다. 늦어도 이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엔(이)

앞서 검증단 구성에 합의한 춘천시 중 4개 기관·사회단체는 9일 현재 7명의 추천위원 신청을 마쳤고 조민강 환경부로부터 2명의 추천위원을 받아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증단 내부 운영 규정 조항 관련에서 조사 범위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와 법대위는 올해 조사 범위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제반을 두지 않았지만, 국방부 측은 호안오염이 확인된 지역으로 축소해 원상조사를 하는 것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국방부는 아직까지도 순회하고 있다”며 10일 오전 11시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오동환 법대위 집행위원장은 “검증단의 활동에는 그 범위가 있어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춘천시에는 유류 캠프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인근에서 나온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 도농환경안전연구원 세정분석을 의뢰했다. 늦어도 이르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엔(이)



## 도민일보 '20. 11. 11.(수)

### "국방부 캠프페이지 조사 소극대처시 투쟁 불사"

범시민대책위 전체조사 촉구  
민간검증단 이달 내 첫 회의 계획  
시 "국방부 협의 통해 방법 모색"

속보·옛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 현  
장에서 유류통 30여개가 무더기로  
발견,부실정화 의혹이 제기(본지 10  
월 28일자 5면 등)된 가운데 **춘천시**  
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캠프페이지 전체조사를 촉구했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상요구범  
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전 **춘천시**  
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십개의  
기름통을 매설한 근거가 명백하게 밝  
혀졌는데 환경오염의 당사자인 미군

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방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  
다"며 "매설된 기름통이 발견된 지점  
은 토양오염조사를 진행했던 환경공  
단이 오염지역이 아니라고 확정했던  
지점이기때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  
했다. 이어 "국방부는 민간검증단 활  
동을 위한 세부사항에서 전체 오염  
조사에 비중을 두지 않는 사항을 제  
시해 **춘천시**와 반대위를 우회하고 있  
다"며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  
이지 않을 시 합의각서 파기, 전국 반  
환기지 대책위와의 연대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기름띠에 이어 유류통까지  
발견되면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의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페이지 전체 조사를 촉구했다.

측은 확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문  
화재발굴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  
고 시 역시 1억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  
로 추진했던 나무심기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  
다. 시는 국방부와 환경부 등이 참여

하는 토양오염민간검증단이 구성된  
만큼 이달 내로 첫 회의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대책위  
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국방  
부와 협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 동아일보 '20. 11. 11.(수)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 전수조사하라"

#### 시민단체, 국방부에 강력한 유감 표해

옛 미군기지인 강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의 토  
양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양파 껍  
질이 벗겨지듯 땅을 팔수록 새로운 오염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5월 토양 오염과 폐아스콘 매립 사실이 드러  
난 데 이어 지난달 땅속에 매립된 유류통 30여  
개가 발견됐다. 이어 옛 미군 조종사 숙소 인근  
에서 유류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이 발견  
돼 **춘천시**는 9일 시료를 채취해 전문가에게 성  
분 분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캠프페이지 부  
실정화를 비판하고 토양에 대한 전수조사 등 적  
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  
세지고 있다. **춘천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

성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  
책위원회'는 10일 **춘천시**청 브라운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춘천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방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범시민대책위는 회견문을 통해 "고의 매설된  
유류통 사태는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  
는 책임 전가와 지연 전술로 시민의 분노에 기  
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드러난  
정황을 고려해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에 대한 전  
수조사를 요구한다"며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  
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합의각서 파기, 전국 반  
환기지 대책위와의 연대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땅속 페아스콘·기름통 잇단 발견 “**춘천** 캠프페이지 전수조사 하라”

시민대책위, 국방부에 촉구

반환된 미군기지인 강원 **춘천**시의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토양오염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땅속에서 페아스콘과 기름통 등이 잇따라 발견되자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춘천**지역 1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상요구법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페이지 토양오염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의로 매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기름통 수십개가 캠프페이지 부지 내에서 발견돼 부실정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모든 부지를 완전하게 정화하고, 환경오염 당사자인 미군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미군기지 비행장을 조성하기 위해 **춘천**

시 근화동 일대에 들어선 67만여㎡ 규모의 캠프페이지는 2005년 폐쇄됐다. 국방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캠프페이지의 오염 토양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일부 구역에서 폐기물에 오염돼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가 토양오염 우려 기준(500mg/kg 이하)을 5.2~6.2배가량 초과한 토양층이 발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또 지난달 27일 땅속에서 약 20ℓ 짜리 기름통 30여개가 발견돼 문화재 발굴작업도 중단된 상태다.

대책위는 “우리의 요구 사항은 캠프페이지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지 이미 확인된 토양오염 사례를 재검증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전국 반환기지 대책위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 8년 전 정화작업했는데... 춘천 캠프페이지서 또 무더기 기름통

법대위 5월 기준치에 오염 토양 발견  
이번엔 오염 없었던 곳서 기름통 30개  
부실정화 논란... 18일 국회서 피해증언  
市 관계자 "재검증 비용 부담 뒤따라"



8년 전 정화작업에 대무리된 승원 **춘천시** 옛  
캠프페이지 터에서 불행 매립된 기름통이 최  
근 잇따라 발견되면서 변방대군까지 부실 정  
화 문제로 일고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 요구 분서민  
대책위원회법대위는 11일 이와 관련, 국방부

에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유류통 30여개가 발견된  
후 시에서 전정조사에 나선 가운데 시 관계자가 유류  
통을 가린 곳에 상형을 설명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제공

가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각서  
위기와 전국변방대군까지 대책위원회의 연대  
등 모든 행위를 동원해 독려했다고 밝혔다.

법대위는 오는 18일 국방위원회에서 열리는  
한국미군기지 오염 피해사례 증언대회에  
참여해 한국 내트론크 구장에도 나가기로 결  
심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춘천** 시청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 "올해 5월 기준치와 6월 기준치에 오염  
토양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오염  
토양이 추정되는 기름통 수십 개가 무더기로 배  
설된 환경에 드러났다"며 "배설된 기름통이  
발견된 지점은 토양오염 조사를 했던 환경공  
단이 오염지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자원이기에  
더 심각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캠프페이지 터에 따르면 2012년 미군으로  
부터 반환받은 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국

방부주도로 정화작업을 했다. 하지만 **춘천시**  
가 개발을 위해 문외에 발굴조사를 하면서 지  
난 5월 일부 구역의 토양오염이 발견 기준치의  
6배 이상을 초과했고 6월엔 페이스트이. 지난  
달엔 폐유류통 30여개가 발견되며 조사가 중  
단됐다. 지난 7월엔 옛 대군 조종사 숙소 인근  
에서 기름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이 나  
오면서 부실정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춘천시** 환경정책 관계자는 "지난 3월 국방  
부의 합의각서에 따라 재검증과 오염 발생  
의원인 규명, 비용 부담 등이 뒤따라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춘천** 소환종 기자 [sohansong@naver.com](mailto:sohansong@naver.com)

##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민간검증 시작

속보=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연  
보 지난 11일자 5면 보도)의 실태를  
확인할 민간검증단이 본격적으로 활  
동에 나선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  
상요구법시행대책위원회와 국방부,  
환경부에서 2명씩, 하연(이하) **춘천시** 국  
회위원실에서 1명씩 추천위원을 총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이미  
**춘천시**가 추천한 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이날 인  
여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 호선과 화

총 9명 후보 추천위원 후보받아 검증단 이달 첫 회의 후 재검증  
법대위 조사범위 축소 반발-국방부 "검증단 추가 지정 따를 것"

해 끝까지 재검증 절차에 들어갈 것  
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조사 범위를 '기존 토양  
오염이 확인된 자역에 대한 전반적  
인 재검증 및 토양 정화조사 필요성  
검토'라고 명시한 국방부의 운영규  
정(안)에 대해 법대위가 "범위를 축  
소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에  
대해 조율이 시급했다. 그러나 국방

부는 추후 검증단이 추가 조사 자역  
을 지정하는 경우 그에 따를 것이라고  
는 입장을 표명할 만큼 민간검증단  
의 출범에는 긍정적인 의지 등을 전  
망했다. 결국 검증단은 출범 후 조사  
범위 결정에 무게를 두고 재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전 국민의 관심  
사건 변방대군까지의 재검증 과정에

대한 모범적인 처리 모델이 될 수 있  
는 만큼 신속하고 확실하게 검증에  
나서도록 도를 방심"이라고 밝혔다.

민간검증단은 올 9월 시행된 합의  
각서에 따라 발족 후 6개월간 활동하  
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재검증 비용은 국방부가 우선 마련하  
고, 추후 결과에 따라 중화책임자 간  
분산하게 된다. 검증단의 운영 비용  
은 **춘천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재검  
증 완료 시 회의록 등이 담긴 책자와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한다. 이후한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 SOFA 개정 힘 실려

(주변미군지원팀)

북한소방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으로 촉발된 전국 반한미군기지의 청소조사 필요성(본보 지난 11일자 9면 보도)에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 미군지원팀(SOFA)의 개정 요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군지원단장 김미환 대령은 지난 11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SOFA 개정을 위한 국제 토론회에서 **“SOFA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은 단순 사색이 아니며 미군도 정화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주변기지의**

윤미향 의원 “미군 정화책임도 안 지면서 기초환경정보 미제공”  
장은비 의원 “현법보다 우위-개정 통해 국민 환경권·알 권리 보장”  
환경단체 “계산안 일시미복족 불가-감시 부실 관할 끌어내야”

환경조사를 위한 기초환경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SOFA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 당사자 김은비 의원은 “미군 기지 방문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관

감으로 떠오른 기지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정보 협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한반도 무위에 있는 한미 SOFA를 개정해 국민의 생명·환경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우연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주변미군 기지·사고 발생 시 철저한 책으로 개입안을 발표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체지지도 않고 감시도 하지 않는 관행이 다 이상 관행에서는 면된다”며 “한미 SOFA를 개정해 좀 힘을 촉구했다.

SOFA 개정 필요성은 2005년 SOFA에 불검조항을 신설한 직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SOFA 불검조항에 개입된 오랜 기간에 대해 한미 간 의견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반도 건강에 대한 널리 알려진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만 오염이었고 본 후 정화를 떠맡다며 SOFA 미군기지를 침범함으로써 반박했다. 하지만 이후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오염지역이 이어지기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도 SOFA를 개정해 실효적인 정화 책임을 미국에 떨어야 한다는 분개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민환기자 [iminhwan@kmaeil.com](mailto:iminhwan@kmaeil.com)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민간검증, 전모 밝혀주기를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의 실체를 확인할 민간검증단이 구성돼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 반한미군기지의 제정화 과정의 모범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검증단은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춘천시**는 2명의 위원을 추천했다. 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와 국방부, 환경부에서 각 2명, 허영 국회의원의실에서 1명을 추천했다. 검증단은 이달 안에 첫 회의를 갖고 곧바로 재검증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간검증단은 올 9월 서명한 합의각서에 따라 발족 후 6개월간 활동하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재검증을 완료하면 회의록 등이 담긴 백서와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환경부와 **춘천시**에 제출한다.

캠프페이지는 2005년 반환 결정 직후부터 각종 오염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구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 실태는 전면 공개돼야 한다. 당시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작업을 **춘천도시개발공사(현 춘천도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되기도 했으나 국방부로 최종 결정됐다. 전문성과 문화재 발굴 비용 등을 고려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볼 때 복원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진작에 자치단체가

맡았어야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민간검증단은 본이 주도하는 검증을 신뢰할 수 없어 꾸려졌다. 캠프페이지의 경우 오염조사는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이 담당했고, 오염 정화는 국방부 및 한 국능어촌공사가 맡았다. 오염 정화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미군 부담 없이 정부가 다 조달하다 보니 부족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관은 이 지경까지 벌어진 상황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부실로 드러난 오염토양정화사업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

반환된 대부분 기지는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다. 얼마나 오염됐는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다. 따라서 오염 현황조사만 제대로 해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다. 수년 전에 오염토양상황을 실시간 조사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가 나왔다.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 신뢰할 만한 수준의 오염 현황조사, 충분한 예산 배정, 최저가입찰이 아닌 기술력을 갖춘 업체 선정, 사업 종료 후 책임검증 등이 요구된다. 나아가 현재 사용 중인 미군기지의 투명한 환경관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미군기지 오염 전국이 공동대응 나섰다

속보=전국의 **환경**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때문 보도본보 5월8일자 1면)을 계기로 전국의 빈민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확인과 공동 대응을 결의하는 지리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4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미군기지 오염피해사례 증언대회'에서는 캠프페이지뿐만 아니라 부평 캠프마켓, 원주 캠프봉, 동두천 캠프개성, 캠프함보라, 군산 미군기지, 용산 미군기지 등 7개 기지의 심각한 오염 실태가 각 시민·환경단체에 의해 상세히 소개됐다.

본보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보도 계기 피해 증언대회 열려  
국회의원·시민·환경단체 원주 캠프봉 등 7곳 실태 논의

가장 먼저 사례 발표에 나선 강원구 인권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부평 캠프마켓의 기지 주변에서 200여개 드럼의 다이옥신 성분을 발견한 점을 볼 때 타 지역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 정도를 반드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캠프페이지 사례를 소개한 최은애 **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민간검증단의 활동을 통해 완벽한 정화율을 이루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경환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캠프봉의 오염사태에 대해 "군사시설이 아닌 지원부대였던 기지에서 기름오염 사상이 드러나도 시민 참여 요구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 국방부에 대해 반드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언대회 진행을 맡은 윤성훈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국립의 미군기지 반경과 달리 국가는 책임지지 못한 우리나라는 오염물질의 재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강하게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경의강감은(비례) 의원과 **환경** 캠프페이지보안오염해상 요구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한 미군기지에 대한 재발 예방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준비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했다. 서울=이무현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기름 누출 또 확인

속보= **춘천** 캠프페이지의 옛 조종사숙소 인근 도로 하수관 공사현장에 빠져 있던 유류오염 의혹 토양(본보 지난 9일자 4면 보도)에서 실제 기름 성분이 나왔다.

**춘천**시는 이달 초 기름 냄새가 진동한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도보환경연구원에게 보내 확인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수치가 90mg/kg으로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500mg/kg의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하지만 이미 땅 위에 섰던 흙먼

조종사숙소 인근서 석유계총탄화수소 수치 90mg/kg 나와  
실제 오염도 더 높을것 예상-일대 정밀 분석 필요성 대두

다다 시물이 지난 후 재확인 시료에서 실제 땅속 오염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선이 높은 유류인 만큼 시추장비에 의해 땅속에서 채취 후 즉시 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는 게 **춘천**시의 입장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일단 유류가 누출된 것을 확인한 만큼 향후 민간검증단에서도 집

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는 지난해에도 옛 조종사 숙소와 붙어 있는 공차량정원 인근에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와 전문기관에서 9곳을 시추해 토양성분 분석을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총 3곳에서 각각 5mg/kg, 56mg/kg, 54mg/kg 등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검출됐지만 기준치 이하여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동철 캠프페이지토양오염해상 요구범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올 5월 기준치의 8배 이상의 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된 봄내체육관 인근과 이번 조종사 숙소 인근 및 지난해 공차량정원 부근 등은 연경 150~200m 사이"라며 "무선적으로 이 일대의 정밀 성분 분석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무현기자(humme@korems.co.kr)





도민일보 '20. 12. 24.(목)

##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방식·범위 다음주 결정

민간검증단 회의서 방향성 합의  
책임소재 판단 내년 3월 전망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작업을 위한 민간검증단의 오염 실태 조사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춘천시**는 이날 열린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민간검증단 2차 회의에서 검증위원 10여명이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조사의 방향성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검증단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에 정화를 했지만 오염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재조사하고 추가

오염 지역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정화 작업 이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이 지하수에 의해 비오염 지역까지 흘러갈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지하수에 의한 영향 조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범위는 다음주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2월 중에는 조사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염 정화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쟁점이다. 시는 지난 9월 환경부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책임자를 판명하기 위한 자문 요청을 한 상태다. 검토 결과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는 내년 3월쯤 나올 전망이다.

김민정

강원일보 '20. 12. 31.(목)

## 캠프페이지 문화재조사지역부터 우선 검증

(춘천)

민간검증단 “작업 순서 효율화”

**춘천시** “내달 용역서 정해질 것”

문화재청 “선조치는 나쁜 결정”

속보=본지적인 활동을 시작해 **춘천**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본부) 지난 24일자 4면 보도에 문화재청을 조사 지역에 대한 선 검증을 추진한다.

검증단은 30일 **춘천시**에서 열린 긴급 회의를 통해 “위험지역에 대해 선 검증단이 먼저 확인 후 이상없을

때 문화재 발굴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춘천시**에 전했다.

검증단이 이처럼 문화재 발굴 조사 지역 선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토양오염 우려지역 대부분이 문화재 발굴조사 중인 부지에 포함된 것으로 예상돼 신속하고 완벽한 검증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부터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초 유류에 오염된 토양과 폐아스콘 처리 사례가 발견된

곳 등도 모두 문화재 발굴 조사구역이었던 데다 변적 또한 전체 부지의 40%(27만㎡)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그만큼 검증 작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춘천시**측은 문화재청에 권장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측에서는 안전성을 먼저 검증한 후 현재 중단된 발굴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당초 발굴 조사를 중단한 이유 또한 오염 물질로 인한 조사단위 건강을 해를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인 만큼 전문가에 선 조치가 이뤄지는 것이 조사단으로서도 더 나은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검증 오염지역을 경멸 조사하고 그 이외 지역은 개황조사를 하기로 한 부분만 확정됐다”며 “조사 순서 등은 다음 달 용역차장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투먼기자 tustmon@herae.com.co.kr

## ‘부실정화 파문’ 춘천 캠프페이지 내달 재검증 착수

민간검증단 범위·방식 결정... 중점오염지역·문화재조사지역 포함

속보=반환미군기지인 춘천 캠프 페이지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 구성된 민간검증단(본부 2020년 12월31일자 4면 보도)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재검증에 착수한다.

검증단은 18일 춘천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재검증 시기와 위치, 대상 범위, 방식 등에 대해 결정했다.

착수 시기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께가 될 전망이다. 이미 1차 재검증 용역을 위한 업체가 선정돼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검증 범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토양정화 과정에서 중점오염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현재 발굴이 유예된 문화재조사지역 모두 포함된다.

트렌치 방식과 시추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오염 상태를 진단하기로 했다. 트렌치 방식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통해 넓고 깊게 굴착한 뒤 육안으로 토양 오염 상

태와 지하수의 유동 상황을 점검하는 검증기술이다. 검증단은 이를 통해 지하수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캠프페이지 경계 밖으로 오염물질이 이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하기로 했다. 시추 방식을 통해서도 5m 안팎으로 촘촘히 시추공을 심어 놓치는 구간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완벽히 복원된 캠프페이지를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무현기자

〈캠프페이지〉

## ‘부실 정화’ 춘천 옛 미군기지 새달 재검증 돌입

반환된 옛 미군부대 터인 강원 춘천 캠프페이지(64만㎡)의 완벽한 정화를 위해 다음달 중순쯤 재검증에 들어간다.

춘천시는 21일 민간인들로 구성된 검증단이 최근 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재검증 시기와 위치, 대상 범위, 방식 등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검증 범위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한 토양정화 과정에서 중점오염지역으로 지정된 곳과 현재 발굴이 유예된 문화재조사지역이 모두 포함된다.

트렌치 방식과 시추 방식을 동시에 활용해 최대한 빠르게 오염 상태를 진단하기로 했다. 트렌치 방식은 포클레인 등 중장비로 넓고 깊

게 굴착한 뒤 육안으로 토양 오염 상태와 지하수의 유동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검증단은 이를 통해 지하수의 이동 경로를 파악, 캠프페이지 경계선 밖으로 오염물질이 이동했는지도 살핀다. 5m 안팎으로 촘촘히 시추해 오염구간을 놓치는 곳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 터는 축구장의 78배에 이르며 2005년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뒤 2009~2012년 국방부 주도로 정화작업이 이뤄졌다. 하지만 춘천시가 개발을 위해 문화재 발굴조사를 진행하던 지난해 5월 일부 구역의 토양오염이 법정 기준치의 6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실정화 파문이 일었다.

춘천 조한중기자 hcs21@seoul.co.kr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 착수

속보=반원미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의 민간검증(본보 2월19일자 5면 보도)이 부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예정지부터 시작된다.

**춘천**시는 최근 용역업체의 착수보고를 받은 후 10일부터 시공 재회를 위한 시추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검증작업에 앞서 8~9일 이틀간 정확한 시추 지점을 선정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면적은 캠프페이지 전체(132만342㎡)의 4분의 1 정도인 15만㎡다. 검증업체는 이와 결반인 7만5,000㎡ 지점에 총 300개의

부지내 미세먼지 차단숲 예정지 내일부터 시추작업 돌입

일부 검증위원 "문화재 발굴 중단지역도 포함돼야" 주장

시추공을 17m 안팎의 간격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오염도에 따라 4m에서 최대 7m 깊이에서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달호 문화재 발굴지역까지 동시에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자칫 매장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문화재연구소의 입장 등을 고려해 최초 착수 지점에서는 배제된다.

하지만 일부 검증위원은 문화재 발굴이 중지된 지점도 향후 발굴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우선 재검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위원은 "문화재 발굴 지점 아래의 지층수를 따라 오염물질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문화재정을 적극적으로 살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검증

에 들어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5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법정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류 오염 토양층이 발견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 사이 캠프페이지에서는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은 채 토사를 덮었던 사실과 항공기 유류유가 담긴 기름통 수십개를 무단 배설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환경부, **춘천**시, 시민단체는 사전 회의를 거쳐 이달부터 실제 검증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무현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 연기

속보=10일 착수할 예정이었던 **춘천** 캠프페이지 재검증(본보 지난 9일자 4면 보도)이 연기됐다.

**춘천**시는 이날 오전 최초 재검증 지역이었던 미세먼지 차단 숲 예정지가 오염되지 않은 흙으로 덮여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따라 원 지형에 대한 자료를 확보한 후 재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캠프페이지를 국방부로부터 반환 받은 2005년 이후 밭밭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임시로 복토해 운영한 만큼, 자칫 의미 없는 재검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결정이다. 시는 최대한 빨리 시추 지점을 확정해 이번 주 중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 부지

중 일부는 원 지형이지만 정확한 현황을 확인한 뒤에 추진하는 것이 검증의 신뢰도를 보장하는 방안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5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법정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류 오염 토양층이 발견된 지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 사이 캠프페이지에서는 아스콘을 제거하지 않은 채 토사를 덮었던 사실과 항공기 유류유가 담긴 기름통 수십개를 무단 배설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환경부, **춘천**시, 시민단체는 사전 회의를 거쳐 이달부터 실제 검증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이무현기자 trustme@kwnews.co.kr

## 도민일보 '21. 3. 15.(월)

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재검증 지역 방문



▲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최근 옛 캠프페이지를 방문,꿈자람공원 주변 토양오염 재검증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 강원일보 '21. 3. 17.(수)

# 캠프페이지 유류 오염 의심토양 또 발견

속보=관공비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유류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또다시 발견돼 부실검토가 판여 계속 확산되고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 전화 재검증(춘보 지난 9·11일자 4면 보도) 결과를 받은 강원도 토양환경정보센터가 16일 캠프페이지 일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정지에서 진행된 시추작업에서 유류가 혼합된 토양이 드러났다. 원 토양의 2~3m 아래 지점에서 채취된 이 토양에서는 공제되지 않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현장에 있던 토양오염 전문가들은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기름 그대로의 상태에서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부지 원 토양 2~3m 아래지점서 채취 곳곳서 기름냄새 진동-민간검증단 기준치 초과 분석 착수

나오는 냄새와 같다”며 “발견된 지점들의 토양층을 볼 때 이 곳에서는 정화작용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류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은 이날 시추한 35곳 중 3곳에서 잇따라 발견됐다. 센터는 추후 해당 지점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 배르벤 3주 안에 TTGA(석유계충탄화수소)와 BT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성분 함량의 범용기준치 초과 여

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올 5월 말까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부지 중 7만5,000㎡ 면적에서 총 371곳의 시추장에서 나오는 1,200여개의 시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단일 시료 분석 결과 범용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당시 비군기지 정화팀을 운영했다고 보고한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와 책임 문제가 더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국방부의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12월 춘천에서 제

출된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사업 준공보고서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검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캠프페이지 환경오염정화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지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재검증을 통해 부지 반환이 전의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는 경우엔 국방부가 재검토 책임을 떠안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환경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5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범용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류 오염 토양층이 발견된다는 강원일보 단독 보도 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렇기까지





오염 의심토양 또 발견 부실정화 논란이 불거진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에서 16일 민간 검증단이 토양오염 재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검증단 관계자들이 지하 8m 깊이에서 사추한 토양의 냄새를 맡아보고 있다. ▶권언기사 1면 박승선기자

## 지하 2~3m서 기름범벅 토양... 부지 활용 차질 우려

**뉴스&이슈** 다시 불거진 춘천 반환 미군기지 부실정화 파문

재검증 아슬아슬 미세먼지 차단술 부지 내 사추지점 10곳서 발견 전문가 "정화 흔적 없어"-1차 예산 중 남은 72억도 반납 위기

반환미군기지의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또다시 무뎀 오염 의심 토양이 나오면서 부지 활용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부실정화 파문은 경호 원로 보고후 1년 만인 지난해 11월 기준의 수치가 넘는 석유계면면화수 177μm에 도달한 토양과 폐아스콘, 폐기물물수 침투가 연이어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후 구청민 안전검증단이 지난 16 일부터 재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또

다시 유류·오염 의심 토양이 발견됐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재검정 계획에 문제가 생기지 않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10곳에서 기름범벅 토양 나와 재검증 아슬아슬 17일 까지 캠프페이지 내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 부지 내 사추지점 10곳에 원점측 지하 2~3m에서 기름에 묻힌 토양이 발견됐다. 해당 지역 부지에서 17일 까지 드는 예정에 따라 1차 예산이



○반환미군정지에 대한 재검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내 미군정지 재검정 조성 예정지에서 17일 오전 기술자들의 시료 채취가 이뤄졌다.

했다. 이때 1차 예산이 177μm 1차 재검정에서 총 100여개의 시추공을 통해 나오는 1,200여개의 시료 분석 결과

과제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오염 원천차분까지 나온 뒤 재검정 비용 부담 등의 측면을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밀 정화불 현실 됐다"-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 2008~2011년 정화 후 오는 부지 내 토양의 오염도가 검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춘천**시에 준공 보고를 했다. 그러나 이번엔 유류 혼합 토양이 발견된 지점에서는 정화 흔적이 아예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재검정에 들어간 한 오염정화 전문가는 "공인된 공화방 나토양경자량과 자문열람(화물)을 물론과 정화후 후 외배우기를 했다. 면 일한 결과 정화후 등이 이루어졌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개발 계획 차질 불가피 2006년 캠프페이지를 반환받은 **춘천**시는 이를 시민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2019년 이미 50만 1,000여에 대해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용으로 지정하고 2020년부터 착공을 계획이 있다. 특히 구비 등을 포함해 130여 명이 투입되는 10만여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술의 적용을 논하에 있었다. 그러나 오염 의심 토양이 다시 나오면서 1차 예산 중 남은 72억 원도 반납 위기에 놓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토양오염 조사, 재검정 및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명제로서는 미세먼지 차단술 적용-준공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04월 16일 09:27

## 춘천 캠프페이지, 유류오염 확실하게 검증해야 한다

반환미군기지인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유류 오염이 의심되는 토양이 또 발견됐다.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 예정지다. 원 토양의 2~3m 아래 지점에서 채취된 이 토양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고 한다. 유류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은 지난 16일 시추작업을 진행한 25곳 중 3곳에서 나왔다. 현장에 있던 토양정화 전문가는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기름 그대로의 상태에서 나오는 냄새 같다고 했다. 발견된 지점들의 토양층을 볼 때 이곳에서는 정화작업이 아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의심한다는 것이다.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 재검증 용역을 맡은 강원대 토양환경분석센터는 해당 시료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 TPH(석유계탄화수소)와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성분 함량의 법정 기준치 초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또 올 5월 말까지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부지 중 7만5,000㎡ 면적에서 총 370곳의 시추공에서 나오는 1,200여개의 시료를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시료 분석 결과 법정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당시 토양 및 지하수 검증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미군기지 정화를 완료했다는 국방부와 한국능어촌공사의 보고서는 거짓이 된다. 시민을 기만했다면 보고서 작성

의 경위를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에 명품 시민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 공원을 기점으로 발박이 된 토양 위에 세울 수는 없다. **춘천**의 가치를 높이고 미군기지 반환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가꿔 나가기 위해서는 완벽한 정화가 중요하다. 이대로라면 **춘천**시의 계획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된다. 오염을 확실하게 치유하고 활용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미군기지를 되찾았는가. 반세기 만에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반관운동을 전개해 이뤄냈다. 끝까지 미군기지 반환의 모범사례로 남겨야 한다.

더 나아가 주변 토양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50여 년간 어느 정도 오염됐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그동안 지하를 통해 인근으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오염된 사실을 속인 채 문제가 없다는 주장들 퍼 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양 오염이 시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는 위해선 평가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현재 기지 주변은 아파트와 공공기관 설립 등이 예정된 상태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면 확실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 춘천 캠프페이지 페아스콘 매립도 의심

### 1.5m 두께 토양혼합층 발견 허영 의원 등 현장 방문 계획

속보=유류 오염 의심 토양이 또 다시 발견(본보 지난 17일자 1면, 18일자 2면 보도)된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폐기물인 페아스콘 매립 의심 토양층까지 발견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재검증 기관은 지난 17일 오후 미세먼지 차단술 조성 예정지 중앙 부근에서 실시한 시추작업 중 한 곳의 원표를 지하 2~3m 지점에서 1.5m 두께의 페아스콘-토양 혼합층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검증단 측은 조만간 중장비를 투입해 폐기물 매립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굴착조사를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시료 채취 주변을 굴착하게 되면 이번 폐기물 매립 의심층의 생성 시기가 미군 주둔 기간인지, 정화 기간인지, 그 이후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이뤄지게 된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번 재검증 과정에서는 10곳의 시추지점에서 유류 오염 의심 토양이 발견돼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허영(**춘천**) 국회의원과 녹색연합 등 환경

단체에서는 조만간 현장을 찾아 재검증 과정을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금 40여 개의 시추공을 통해 나온 것만으로 폐기물이 매립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향후 넓은 범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후에 처리 대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검증은 지난해 5월 문화재 발굴조사 과정에서 법정기준치의 6배가 넘는 유류 오염 토양층이 발견된 후 10개월 만에 진행됐다. 미우현기자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대책 특위** **춘천** 캠프페이지부실정화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29일 오후 **춘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토양 기준치 초과

### 시료 채취 2곳서 나와 시 조사후 대안 강구

속보= 부실정화 파문으로 인해 빈 감검증단의 재검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본보 3월17·19일자 1면 보도)에서 또다시 유류 오염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이 나왔다.

1일 **춘천**시에 따르면 시료를 채취한 142곳 가운데 2곳에서 TPH(석유

계통탄화수소)와 BTEX(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농도가 각각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TPH 농도는 7.135mg/kg(환경기준 500mg/kg)으로 14배, BTEX 농도는 21.7mg/kg(15mg/kg)으로 1.4배를 기록했다.

이번 결과는 지상에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과거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또는 지하수가 이동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오염토양이 발견된 곳이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예정지여서 향후 사업 추진 여부도 주목된다.

**춘천**시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시민대책위원회 등 토양오염 재검증을 위한 민간검증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16일 재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남은 392곳에 대한 토양조사를 마무리한 이후 오염지역에 대한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를 시민의 몫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토양조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현·하위윤기자**

## 캠프페이지 일부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

142곳 중 2곳, 기준치 14배인 곳도  
과거 조사누락·지하수 이동 추정  
잔여물량 완료 후 대책강구 계획

부실정화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 대한 토양조사가 일부 완료됐지만 이 중 2곳에서 오염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춘천**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토양조사 용역이 지난 2월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1일 기준 전체 조사물량 534곳 중 26.5%인 142곳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다. 검사를 끝마친 142곳 중 2곳은 TPH와 BTEX(크실렌) 농도가 각각 환경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PH 농도의 경우 환경기준은 500mg/kg이지만 검출된 곳의 농도

는 7135mg/kg로 무려 14배나 높게 측정됐다. BTEX(크실렌) 농도 역시 21.7mg/kg로 기준치(15mg/kg)를 넘어섰다.

시는 지상에 오염원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과거 조사에서 누락됐거나 지하수가 이동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잔여 물량 392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나면 오염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춘천** 옛 캠프페이지는 1년여간 부실정화 논란을 앓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름띠가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파문'이 제기됐고 지난해 10월에는 20t 규모의 유류통 수십개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옛 캠프페이지에 들어설 **춘천** 시민공원의 밑그림을 공개했지만 토지 정화와 문화재 발굴이 모두 끝난 뒤에 실시설계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캠프페이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토양조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현



# 캠프페이지 이번엔 화학물질 매립 의혹

(춘천=연합뉴스)

속보=춘천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의 부실정화 문제가 이번에는 화학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레드캡통이 무더기 발견과 함께 기존 처벌 초과한 보양오염도 추가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지난 본보가 춘천 미군부대 토지 오염 의혹 첫 보도(2020년 5월 8일자 1면) 이후 반도검출단 등이 토양조사를 위해 캠프페이지 내에서 땅을 파기한 주변 폐기물이 쏟아지고 오염이 확인되는 상황이 잇따르면서 부지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양오염 재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강원대 토양분석센터가 8일 캠프페이지 내에서 토양지 조사(화학조사)를 행한 결과 옛 불우로 인근 반죽에서 레드캡통 9개가 나와 오염도와 시료를 채취, 분석에 들어갔다. 토양지 토사는 산물 따라 흩날려서 땅을 파내 지층의 단면과 토양성분 등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현재 430ㄹ에서 1킬로그램 정도 중의 시추공 조사에 비해 광범위한 오염 시범이 가능하다.

아날 센터 측이 10년 전 경표가 이 화진 중량오염지역 인근에서 발견된 레드캡통 주변에는 아스팔트 MC-30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춘천시

## 부실 정화 논란 속 주변 지역 토양오염 재검증 급속조사 아스팔트유 추정 레드캡통 9개 발견-시트 채취 분석 돌입

는 레드캡통 안에 아스팔트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굴착기가 파낸 토사는 검고 끈적한 타르 덩어리가 묻어 나왔다. 조사 지점에서 유류 냄새가 마스크를 쓰고 진동해 조사원이 현장에서 10원을 받

긴 마스크를 나눠 쓰기도 했다. 환경을 지휘한 강원대 토양분석센터 어성필 박사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된 곳에서 불과 1-2m 떨어진 곳에서 레드캡통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준치를 넘어선 토양오염 지점 3곳도 새롭게 확인됐다.

추기된 3곳은 사유계출판화수조(TPH) 농도가 436-771mg/kg으로 환경기준 500mg/kg을 상회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TPH 농도가 환경기준치 대비 14배 높은 오염지도 시

발했다. 강원일보 2면

2면에 계속



수일 춘천 캠프페이지에서 진행된 토양 오염 관련 토양지 조사에서 화학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레드캡통이 무더기로 나온 실태(9일자)

## 캠프페이지 이번엔 화학물질 매립 의혹-1면에서 계속

춘천시와 국방부, 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꾸려진 민간검증단은 다음달까지 재검증 용역을 진행하기로 계

획을 세웠으나 오염 물질과 다량의 폐기물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조사 기간 연장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파문 초기부터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해 온 녹색연합은 빠른시일 내 현장을 찾아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재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묻힐 일들이었으나 이번 발견으로 인해 전국 80곳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 캠프페이지 화학물질 매립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춘천**의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의 부실정화 문제가 이번에는 화학물질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되는 페드럼통의 부더기 발견과 함께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도 추가로 확인돼 파문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토양오염 재검증 용역을 수행하는 강원대 토양분석센터가 지난 8일 캠프페이지 내에서 트랜저 조사(금작조사)를 벌인 결과 옛 캠프로 인근 땅속에서 페드럼통 9개가 발견돼 오염토양 시료를 채취, 분석에 들어갔다. 특히 정화가 끝났다고 보고된 곳에서 불과 1~2m 떨어진 땅속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준치를 넘어선 토양오염 지점 3곳도 새롭게 확인됐다. 추가된 3곳은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농도가 638~761mg/kg으로 환경기준 500mg/kg을 상회한다. 이번에 발견된 페드럼통의 불질이 어떤 성분인지 철저히 규명해 내야 한다.

그동안 지하를 통해 인근으로 퍼져 나갔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아울러 토양오염이 시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피는 위해성 평가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현재 가지 주변은 아파트와 공공기관 설립 등이 예정된 상태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으려면 확실한 검증이 가장 중요하다. 더욱

이 이곳은 **춘천시**가 명품 시민공원을 조성할 방침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공원이 화학물질로 범벅이 된 토양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부실정화 파문은 정화 완료 보고 9년 만인 2020년 법정 기준치의 6배가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에 오염된 토양과 폐아스콘, 폐기물물 수집 개가 연이어 나오면서 촉발됐다. 이후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3월부터 재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또다시 유류오염 의심 토양이 발견됐다.

국방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2008~2011년 정화 후 모든 부지 내 토양의 오염도가 법정 기준치 이하라며 **춘천시**에 준공 보고를 했다. 지금 또다시 화학물질이 나오고 있다면 그 보고는 허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캠프페이지를 **춘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일은 완벽하게 정화된 토양 위에서 추진돼야 한다. 즉, 토양오염을 완전히 처유하고 땅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미군기지를 되찾았다. 반세기 만에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반환운동을 전개해 이뤄냈다. 그런 만큼 캠프페이지 토지의 완벽한 정화는 필수다. 더 나아가 주변 토양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캠프페이지를 명품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춘천시**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 춘천 캠프페이지 시민공원화 차질

토양오염원 발견돼 미세먼지차단숲 등 일정 지연  
이제수 시장 "내년까지 10ha 조성 예정대로 진행"

**【춘천】**속보=**춘천시**가 구 캠프페이지에 조성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을 포함한 시민공원화 사업이 토양오염원 발견(분류) 지난 9일자 1면 보도)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수 **춘천시**장은 13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관련해 "총면적 15ha 중 내년까지 10ha를 조성하는 것은 예정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5ha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할 방향이지만 토양 정화 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확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면적 15ha 중 올해는 3ha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조성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

다는 조성 면적은 축소됐고, 일정은 늦어지는 것이다.

또한 시는 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오염원 토양의 정화 방식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예산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의회, 국방부 등에서 향후 논란이 될 여지를 남겼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춘천시** 근교동 127-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동안 조성될 예정이었다. 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정부지부터 1단

계 용역을 발주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토양 전방 조사는 현재 50%가량 진척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나머지 부지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해 7월 완료하고 8월까지 정화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지만 오염원에 대한 원인조사 및 정화가 조속히 이뤄지면 다시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정기자**



# 옛 캠프페이지 정화 연내 완료... 숲 조성 박차

시, 7월까지 2단계 조사 진행  
올해 10월쯤 토지 정화 마무리  
미세먼지 차단 숲 사업 본격화

속보=옛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이 지속(본지 4월11일과 11면 등)되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가 올해 하반기까지 정화를 마무리하고 중대 환경에 대한 미세먼지 차단숲과 시민공원 조성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춘천**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하반기까지 토지 정화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10월쯤이다. 현재 **춘천**시는 변방 1리군까지 전체 54만427㎡와 문헌봉 부지 8030㎡ 등 총 60만277㎡를 대량의 보토양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1단계 조사의 경우 15만㎡ 중 6곳에서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시는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 1단계 조사를 끝낼 때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단계 조사의 경우 이달부터 시작해 7월쯤 종료할 방침이다. 시는 전반적인 오염토지 정화 종료 시점쯤 10월쯤 보고 있다. 현재 시

가 진행하고 있는 토지 조사의 경우 오염된 보토양 모두 끌어내고 이를 새로운 흙으로 덮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정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정화 의혹으로 중단됐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캠프페이지

지 앞대 150m에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민선7기 이재수 시장의 역할 실현책이기도 하다. 시는 현재 국비 50억원 등 관련예산 100여억을 확보한 만큼 이를 최대한 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차단숲 조성은 서두를 방침이다.

시민공원도 본격화한다. 지난해 시는 시민공원마스터 플랜을 공개하면서 미세먼지 차단숲과 정자휴양지, 워터파크, 자족체육관을 비롯한 아레나, 구룡연못, 잔디테라스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수 시장은 "교부금 예산을 소홀하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불가피함이었다"며 "다른곳에 나무를 심기 보다는 바로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 토양오염, 치유와 숲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제환 oje@kado.net

# 이번엔 폐전봇대 ... 부실정화 파문 끊이지 않는 춘천 캠프페이지



이처럼 정화 사업이 끝나지 않고 있는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현황이다.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 전국민생도 영향 우려 제기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전국 1만 5천여개 전봇대 중 1만 5천여개는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전국 1만 5천여개 전봇대 중 1만 5천여개는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 나무가동-물라스틱 폐전봇대

다만, 앞서서 폐전봇대로 추정했던 폐기물에 추가 조사 나서 새삼 제기된 결과 **춘천**시 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 시정 당국도 폐전봇대 파편

시정 당국도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폐전봇대 파편이 산더미로 쌓여 있다. (강원일보 4월14일 보도)

# 캠프페이지 '기준치 47배' 토양오염

〈춘천·백마강기〉

속보=부실결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춘천** 백마강기지역 캠프페이지(백마강변로5면 15도 5번)내 35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특히 이 중 절반인 18곳은 국방부가 이미 정복해 반환한 구역으로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캠프페이지 백마강변로5면 15도 5번 **춘천**시청에서 진행된 1차 토양오염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지 내 4233119㎡에 대한 토양조사 결과, 석유계탄화수소(TPH)가 35곳, 크실렌(BTEX) 정도는 1곳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백마강변로5면 15도 5번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결과 의혹을 최초 보도(2020년 5월)이자 1년 보도만 이후 천안가동로 구상대 등 2월부터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토양오염지역 중 TPH가 가장 높았던 곳이 정도는 기준치(500mg/kg)의 47배에 달하는 2만3540mg/kg으로 조사돼 지난해 5월 문화재청조사에서 측정된 기준치의 14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또 지하수 오염도 2곳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곳은 TPH 기준 정도(1.5mg/l)의 38배(43mg/l)가 관측됐다.

1차 조사 지역은 미세먼지 차단용 지역과 자연학습관 조성 예정지도. 백마강변로5면 15도 5번 중순에 조사에 착수한 이후 총 4233119㎡의 1230㎡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지하수는 34개 지점에서 조사를 벌였다. 또 캠프페이지 내 잔여 부지(380000㎡)에 대한 2차 조사는 8월까지 모두 마무리했다.

**춘천**시청서 민간검증단 1차 조사결과 발표 36곳 추가 오염 확인  
석유계탄화수소 2만3,540mg/kg - 지하수 2곳도 기준치 초과  
이제수 시장 "문제 확인된 곳 모두 깨끗한 흙으로 교체해 청화"

는 계획이다. 1차 조사를 통해 추가로 361공에서 1261개의 시료를 채취하고 지하수 관전도 35개 설치해 관망하게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로 했다. 2차 조사 결과는 올 9월에 발표한다.

이와 관련, 오영철 캠프페이지 부실

결과 백마강변로5면 15도 5번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국방부와 비교한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재수 **춘천**시장은 "오염이 확인된 토양은 모두 깨끗한 흙으로 교체해 관망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시가

☑ **석유계탄화수소(TPH)**

토양이 함유한 경우, 폐유류, 방귀, 기름 등과 같은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상적인 상태로 지장을 주고, 장기간 노출될 경우 인체에 각종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크실렌(BTEX)**

이후에 발은 지렁이를 통해 세내에 흡수되는 것은 물론 증발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피해를 끼치는 독성물질이다.

## 캠프페이지 일부 토양오염 기준치 '47배' 초과

1차 조사 결과 471곳 중 38곳 오염  
시 추가 조사, 시민검증단 8월까지

속보=춘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를 둘러싼 부실정화 의혹(본지 4월 2일자 11면 등)이 제기된 가운데 기준치의 최대 47배가 넘는 오염이 지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국방부와 환경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은 1일 춘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차 조사 대상지역 471개 지점 중 38개 지점에서 토양 오염 및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고, 환경기준치를 47배

넘는 곳도 있었다"고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지역은 미세먼지 차단 숲 및 자연학습장 조성 예정부지(19만㎡)으로, 오염발견 지점 38개 중 토양 오염은 36개, 지하수 오염은 2개 지점에서 발견됐다. 중금속 오염 지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토양 오염 지점 중 한 곳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농도는 환경기준(500mg/kg)보다 47배 많은 2만 3540mg/kg이 검출, 오염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의 안전과 안심을 최우선으로, 완벽한 정화를 위해 오염된 토양은 모두 걷어내고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는 1차 대상지와 2차 대상지에서 발견된 오염 지점을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 정확한 오염 면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민간시민검증단의 2차 부지 조사(36만 2000㎡)는 8월말까지 진행된다.

정승환 jeong28@kado.net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춘천**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2일 시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환경부는 **춘천** 시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1차 토양오염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캠프페이지 내 3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 오염이 발견됐으며 그중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은 TPH(석유계혼탄화수소) 농도가 기준치(500mg/kg)의 47배에 달했다. 신세희기자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책임 국방부가 배상하라”

(**춘천** 옛 미군기지)

범대위 기자회견서 진상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속보=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이 지난 1일 발표한 1차 토양오염조사 결과(전보 지난 1일자 1면 보도)와 관련해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일 **춘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36곳의 토양오염 중 18곳이 정화구역 내에서, 6곳은 정화구역 경계에서 나왔다는 것은 2010년 정화작업과 오염조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실시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는 완벽하게 정화했다는 국방부와 환경부, 농어촌공사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춘천** 시민들은 1,700억원을

들여 오염덩어리 부지를 떠안은 꼴”이라며 “10여년간 **춘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껌변과 광개로 일관한 국방부와 환경부는 **춘천**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강조했다.

범대위는 정화작업을 책임졌던 국방부에 대해 “완전한 오염정화 비용 부담은 물론 허탈감을 느낀 **춘천** 시민들에게 물적·정신적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염토양을 교체하기로 한 **춘천**시의 결정에 동의하면서도 “오염된 토양을 외부로 반출하면서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동철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2차 오염조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

며 꼼꼼히 살펴겠다”며 “올 9월에 2차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이후 본격적으로 범시민운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순천기자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 형식적이었나

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이 지난 1일 **춘천시**청에서 발표한 1차 토양오염조사 결과는 지역사회의 우려와 상상을 초월한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춘천** 옛 미군기지인 캠프페이지 내 3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특히 이 중 절반인 18곳은 국방부가 이미 정화를 완료한 구역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국방부의 그동안 토양오염 정화는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토양오염지역 중 TPH(석유계탄화수소·토양)이 동유나 경유 등과 같은 유류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가 가장 높았던 곳의 농도는 기준치(500mg/kg)의 47배에 달하는 2만3,540mg/kg으로

조사돼 지난해 5월 문화재발굴조사에서 측정된 기준치의 6배, 올 4월 측정된 기준치의 14배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또 지하수 오염도 2곳에서 확인됐으며, 이 중 한 곳은 TPH 기준 농도(1.5mg/l)의 28배(43mg/l)가 검출됐다. 또 BTEX(크실렌·피부에 닿으면 지방질을 통과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은 물론 중독성이 강해 뇌와 신경에 해를 끼치는 독성 물질) 농도는 1곳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과 우려는 지금까지 계속돼 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역내 토양오염 차원을 넘어 오염원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했을 가능성도 있다. 오염이 확인된 토양은 모두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는 것은 기본

이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는 그야말로 완벽해야 한다. 향후 **춘천시** 도시 발전계획의 한 축이기 때문이다. **춘천**는 캠프페이지에 명품 시민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그 공원이 기름법박이 된 토양 위에 세워져서는 곤란하다. 즉,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 활용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 그룹의 조언과 참여를 통해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는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한다. 오염을 확실히 치유하고 부지를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필리핀 등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필리핀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수 오염과 중금속 오

염에 노출돼 2,0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군기지 내에서 이뤄지는 방사능 물질이나 중독성 물질의 피해는 크다. 가공·보관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나 폐기물이 발생하면 기지 내 일정한 장소에 매립할 수도 있다. 이 과정이 모두 비밀리에 이뤄져 기지를 철수하고 난 이후에도 쉽게 노출되지 않다가 우발적으로 또는 장기간에 걸쳐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의 오염 문제는 그간 현미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아직까지 정확한 오염 실태 조사는 물론 사후 구제책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는 그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의혹과 우려가 파생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사 결과 36곳에서 기준치 초과  
역내 오염 차원 넘어 주변 확산 가능성도  
정화 과정 투명한 공개로 주민 불신 해소

---

## 도민일보 '21. 6. 3.(목)

### “캠프페이지 오염정화 부실...국방부·환경부 책임져야”

속보=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조사 결과 기준치의 최대 47배가 넘는 오염 지역이 발견(본지 6월2일자9면 등)되자 **춘천** 시민단체가 국방부·환경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춘천** 캠프페이지 완전한 오염조사

와 정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0년 환경부의 오염조사와 국방부의 오염정화작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실시됐다는 의혹이 든다”며 “국방부와 환경부,농어촌공사의 ‘완벽하게 정화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결과”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와 환경부는 **춘천** 시민의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 오세현

## 강원일보 '21. 6. 23.(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대책 특별위 회의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김은석)는 22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민일보 '21. 6. 24.(목)

## 캠프페이지 2023년까지 출입 통제

2023년까지 캠프페이지 출입이 통제된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와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캠프페이지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내달 초부터 통제시설을 설치하며 캠프페이지 출입 통제 기간은 2023년까지다. **춘천시**는 올해 말까지 토양오염 정화에 매진하고 내년부터 문화재 정밀발굴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봄내체육관, 꿈자람물정원, **춘천시** 시육아종합지원센터, **춘천**장애인스포츠센터는 이번 통제 구간에서 제외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조사 완료 때까지 원활히 통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오세현

강원일보 '21. 7. 12.(월)

## “캠프페이지 문화재 발굴지역 오염조사 필요”

〈옛 **춘천** 미군부대〉

속보=부실정보 때문에 몇 미군기지 캠프페이지의 2차 토양오염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화재 발굴지역에 대한 오염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비상요구법시안(이하법안)은 지난 9일 **춘천시**에서 지난달 발표한 1차 토양오염조사 결과(본보 6월2일자 1면 보도)와 2차 조사 현황에 대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대에 따르면 2차 토양오염조사 범위가 기존의 13만1,319㎡에서 11만9,308㎡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문화재 발굴조사 구역 중 1만7,531㎡가 오염조사 범위였지만

법대위 “지하수 오염 심각 계획범위 모두 실시해야”

**춘천시** “민간검증단 추가 조사 결정하면 파동 것”

현재 일반 수준인 8.772㎝로 그 범위가 줄었다. 조사에서 제외된 전체 토양 범위의 1만2,011㎡ 가운데 73%가 문화재 발굴을 이유로 제외된 셈이다.

법대위는 “현재 2m 정도 급격한 발굴현장에서도 기류 냄새가 나고 있다”며 “발굴구역에서도 3차에 오염이 많이 확인된 만큼 이곳 역시 오염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국방부가 문화재 발굴조사 구역 중 일부가 문화재 발굴조사구역”이라며 “당시 문화재업을 위

해 4m까지 굴착했던 만큼 발굴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1차 조사결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나옴에 때문에 기존에 계획된 범위는 모두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법대에 따르면 일부 지하수의 DO(용존산소)는 2,000㎍/㎤가 넘었다. 일반적으로 DO 수치가 300 이하이어야 식수로 사용 가능하고 1,000㎍/㎤가 넘으면 공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지하수의 DO(용존 산소

량)도 일반적으로 5mg/l 이상을 기록해야 하지만 캠프페이지에서 30곳을 검사한 결과 5mg/l을 넘는 곳은 1곳뿐이었다.

법대위는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호기성 미생물이 살 수 없다”며 “어떤 경우 혐기성 미생물이 살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 관계자는 “토양 오염원사는 현재 민간검증단에서 결론 조사 범위와 방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며 “민간검증단에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론한다면 이에 따른 예산”이라고 말했다.

춘천일보 chuncheonnews.co.kr





강원일보 '21. 7. 26.(월)

## “국방부,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비용 전액 부담” 춘천시의회 결의문 채택

【춘천】춘천시의회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김은석)는 지난 23일 제6차 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 비용 전액 부담 촉구 결의문’을 채택, 국방부에 보냈다. 특위는 결의문에서 “춘천시민에게 납득할수 있는 사과와 약속대로 오염조사 비용을 포함한 완벽한 정화에 소용되는 비용 일체를 국방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를 통해 제시하는 등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정기자 hyun@kwnews.co.kr

도민일보 '21. 7. 26.(월)

## “국방부, 캠프페이지 복구비 전액부담해야”

속보=캠프페이지 부실 정화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정화 책임자로 국방부를 지목(본지 7월 23일자 4면)한 가운데 캠프페이지 조사·정화 비용 전액을 국방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춘천시의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이하 특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사과 및 조사·정화비용 전액부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별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방부는 춘천시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사과와 오염조사 비용을 포함한 완벽한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국방부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를 통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현

## 오염된 토양복원 책임은 국방부다

-환경부, '캠프페이지 오염시기 미군부대 주둔때' 적시

지난해 5월 캠프페이지 유적발굴과정에서 발견된 유류통과 기름성분에서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오염이 확인된 것과 관련, 환경부가 최근 **춘천시**에 보낸 토양정화지문결과서에서 "오염시기는 해당부지에 주둔한 미군부대때 오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토양오염 정화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책임을 둘러싼 **춘천시**와 국방부의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캠프페이지의 토양오염조사를 3년간 실시하고 2009년부터 2년동안 토양정화 작업을 한 후 2012년 **춘천시**와 캠프페이지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같은 해 6월 추가 오염이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추가오염지역 정화작업을 통해 정화를 완벽하게 했다"며 **춘천시**로부터 부지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또 다시 다량의 유류통과 기름성분이 발견되면서 부실정화 논란이 재점화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캠프페이지를 **춘천시**에 반환한 이후 토양이 오염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민간검증단이 실시한 1차 오염조사결과 8199

㎡의 면적에서 1만 5972t 상당의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했고, 환경부가 "오염발생시기는 **춘천시**가 관련시설을 점유하기 이전이며 점유 후 오염 유발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점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국방부의 책임'으로 결론났습니다.

부실정화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진 만큼 국방부는 캠프페이지 오염 토양 복구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식의 주장으로 **춘천시**민들을 호도한 것에 대한 사과와 해당 오염 토양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완벽한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합니다.

**춘천시**는 지난 2016년 1700억원의 혈세를 들여 캠프페이지 부지를 매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다 문화공원을 지정한 후 공원개발에 나섰지만, 첫 단추인 문화재 유적발굴과정에서 막히면서 수년째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역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며 "오염정화 비용은 물론 유·무형의 손해도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격해진 **춘천시**민들의 감정을 풀어주는 것도 국방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도민일보 '21. 8. 4.(수)

## 춘천시,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토양정화비용 36억원 요구

국방부, 시 방문 비용 적정여부 논의  
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속보=캠프페이지 부실정화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정화 책임자로 국방부를 지목(본지 7월 23일자 4면 등)한 가운데 춘천시가 1차 정화비용 36억원 부담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3일 본지취재결과 춘천시는 최근 국방부에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와 관련

해 1차정화비용으로 36억원을 청구했다. 정화비용 35억원에 감리비용 1억원이 포함됐다. 앞서 환경부는 토양정화자문결과서를 통해 "토양오염의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춘천시의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진상규명및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 역시 "국방부의 캠프페이지 부실정화사과 및 조사·정화비용 전액부담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춘천시의 보상 요구 움직임이 본격

화 되자 국방부는 3일 춘천시를 방문, 정화비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36억원으로 책정된 정화비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비롯해 향후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춘천시 관계자는 "실무진 방문이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국방부측에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의혹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했다. 오세현

강원일보 '21. 8. 18.(수)

## 춘천 캠프페이지 정화비용 국방부가 부담

사실상 부실정화 책임 인정  
연내 오염 토양 반출 정화

속보=부실정화 논란 속 지난해 11월부터 반환미군기지 민간재검증에 들어갔던 춘천 구 캠프페이지 부지(본보 2020년 11월 13일자 4면 등 보도)의 오염토양이 연내 반출돼 정화 처리된다.

춘천시에 따르면 1차 조사 대상 부지 15만 9,309㎡ 가운데 4%인 6,044㎡에서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이어 2차 부지 조사는 현재 65%의 진척도를 보이는 가운데 2차 부지 내 3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무현기자

2면에 계속

## 춘천 캠프페이지

### 정화비용 국방부가 부담

-1면에서 계속

이에 춘천시는 1차와 2차 부지 오염 토양을 올해 안에 반출시켜 정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차 검증 부지의 정화 비용 31억100만원과 1·2차 조사비용 6억5,900만원 등 37억 6,000만원을 국방부가 부담, 사실상 부실정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예상하며 추가 오염 토양 발생 시 전량 반출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기존 시민공원으로 추진했던 캠프페이지 활용 계획의 지연 및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1차 조사지역에서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은 춘천시가 기존에 계획했던 미세먼지 차단 숲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현재 공터로 남아 있는 캠프페이지의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문화재 발굴 조사를 벌이던 과정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말부터 환경부, 국방부, 춘천시, 시민단체 등이 함께 민간검증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캠프페이지 내 오염토양 등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일단락되는 의미가 있다”며 “민간검증단과 함께 정화작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민일보 '21. 8. 18.(수)

## 캠프페이지 오염부지 정화비용 국방부가 부담한다

1차 조사결과 37억원 추정

춘천시 하반기 정화작업 속도

속보=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가 정화 책임자로 국방부를 지목(본지 7월23일자4면 등)한 가운데 부실정화에 따른 국방부 예산 부담이 확정, 춘천시가 올 하반기 정화작업 완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수 시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 오염부지에 따른 국방부 예산 부담이 확정됐다고 밝

혔다. 1차 부지의 경우 조사한 면적 15만9309㎡ 중 약 4%인 6044㎡가 오염됐으며 여기에서 발굴된 오염토양은 1만5000t에 달한다. 해당 오염에 대한 정화금액은 조사비 6억5900만원을 포함한 37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시는 1·2차 조사비 6억5900만원을 국방부에 계반했으며 1차정화비 31억원도 국방부 부담이 확정됐다. 2차 부지 정화비의 경우 추후 협의를 통해 풀이갈 계획이다.

국방부의 예산 부담이 확정되면서 캠프페이지 정화작업도 속도를 낼 전

망이다. 춘천시는 내달까지 1차 오염부지에 대한 정화를 마치고 2차 오염부지 정화도 11월까지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이후부터는 민선7기 들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수 시장은 "1차 부지라도 비오염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만 핵심 사업을 전개한다는 이유로 캠프페이지 정화작업을 서두르거나 줄속으로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오세현 tgus@kado.net

도민일보 '21. 9. 8.(수)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규명 특위 간담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7일 오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3차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 파도 파도 오염 ... 181곳서 부실정화 추가 확인

독성물질 최대 63배 초과 - 국방부 책임 회피 어려워  
오염도 3만3,000톤 1차 조사에 비해 2.3배 넘는 수치  
현재 조사 불가능한 불내채독량 등 조사 진행도 권고

북부=부실정화 과정이 확인되고 있는 **춘천** 캠페이지의 2차 토양조사 결과 181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부실정화 확인됐다.

캠페이지 민간검증단은 25일 **춘천**시청에서 진행된 3차 토양오염 조사 결과 발표에서 부지 내 181곳, 40만㎡에 대한 부실정화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도를 나타내

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174곳, 34% 지점에 해당 지점의 독성 물질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농도는 133곳 중 4곳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오염도 중 TPH는 3만3000톤, 오염면적은 1만4,700㎡에 각각 1차(1만4,000톤, 10만㎡)에 비해 2.3배, 2.8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1차 조사에 비해 2.3배 넘는 벤젠의 부지내 조사 지점 상하의 많은 지점에서 모인도 양이 발견된 것이다. 또한 민간검증단이 "현재 조사가 불가능한 불내 채독량, 관외에 발광지역 등 추가 조사를 권고한다"고 한 만큼 더 많은 토양오염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토양오염이 나타난 181곳 중 73곳이 과거 정화사업의 실패한 구역 내에서 나타났다. 13곳은 강화구역 경제지선에서 확인됐다. 1차 조사에서 강화구역 내 오염지점이 3곳로, 경제지선 오염이 3곳

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수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때문에 공화정화를 책임졌던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토양오염지역 중 TPH가 가장 높았던 곳의 농도는 가문지(300mg/kg)의 10배에 달하는 1만439mg/kg으로 조사됐으며, 크실렌 농도가 가장 높았던 곳은 340mg/kg으로 기준치(15mg/kg)의 22배에 달했다. 지하수 오염은 1개 지점에서 확인됐으며, 미확인 TPH 기준 농도(1.5mg/kg)의 2배(2.9mg/kg)를 기록했다.

물류로부터 시작되는 조사에서

는 춘천1군에서 5000여㎡ 시공을 계획했으며 지하수는 20개 지점에서 조사를 받았다. 강원일보가 지난해 **춘천** 캠페이지에 부실정화 의혹을 제기한 뒤 2020년 5800㎡와 1만 4000㎡에 대한 정화사업에 2020년 11월과 2021년 1월을 걸쳐 2000여㎡를 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춘천**시청은 "오염 부지를 깨끗한 곳으로 바꿔 주는 공사가 이번 일부터 이뤄진다"며 "캠페이지 관련 정화는 시정부가 해무"라고 밝혔다.

춘천한겨레 chuncheonherald.com

## 캠페이지 토양오염 2차조사 결과 290곳 '기준 초과'

**춘천** 캠페이지 2차 토양오염 조사에서도 기준치를 넘어선 토양오염이 발견됐다.

토양오염 민간검증단은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토양오염 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민간검증단은 "부지 내 911개 지점에서 3099개의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 결과 181개 지점, 290곳의 시료에서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다"고 말했

다. 일부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경우 최대 농도가 환경기준(500mg/kg)보다 20배가 넘는 1만439mg/kg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1차 발표에 이어 2차로 최종 결과다. 1차 조사에서는 부지내 15만여㎡를 대상으로 5000여㎡(1만4800t)에서 오염을 확인해 현재 국방부 예산으로 1년간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오세현



## 춘천 옛 미군기지 토양 오염, 기준치 20배나 초과했다

환경검증단 2차 조사 결과 발표  
일부 자질성분별 기준치 초과 드러나  
국방부와 협조-연내 정화작업 진행  
1년간 정화 비용 60억원 예상



부담 증가 논란도 맞고 있는 강원도 춘천시 옛 미군 캠프 캠프페이지 토양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검증단 2차 토양오염 현장검증단은 캠프 페이지 2차 토양조사에서 부지 내 1차 지점 39개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10개 지점, 29개에서 시료가 50mg/kg 이상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부터 실시해 분석결과가 나온 것인데, 조사 대상 면적은 30만㎡로 오염 면적은

1만㎡로 조사된 4월 말 기준 2차 토양조사 결과 1차 조사 후 발견된 토양 오염이 더 심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수소(TSS)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10배 정도다. TSS는 미립자, 공기중 입자 등 다양한 크기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과 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질성분별 오염물질별 농도가 기준치 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환경부수소(TSS)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국방부는 부지를 반환받은 뒤 토양오염을 정화할 예정이고 2024년까지 2차 토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토양 정화 작업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춘천시가 지정한 토양 정화업체가 업체 선정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토양 정화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2차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해 1차 정화작업을 할 예정인데다 정화비용은 60억원, 기간은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춘천시는 “이번 토양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해 1차 정화작업을 할 예정인데다 정화비용은 60억원, 기간은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수소(TSS)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토양중 유기탄소(COC) 기준치보다 20배 초과했다.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2차 조사서 '심각수준'

오염면적 1차조사 대비 3배 수준  
정화만 1년...오염토양 반출 50일

강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대한 2차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민간검증단 박재우 단장이 발표한 2차 조사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강원대학교 산학협단이 진행한 1차 조사결과는 오염면적 508㎡·오염토양 1만4800이었으나 산학협력이 실시한 2차 조사결과는 오염면적 1만4747㎡·오염토양 3만3000으로 거의 3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단장은 “최종확인된 토양오염 정화에는 1

년의 정화기간이 필요하며 오염토지 반출에만 50일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재수 시장은 “2차 부지 조사결과, 1차 부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환경 기준치보다 최고 20배가 넘는 검출 결과가 나온 토양도 발견됐다” 밝혔다.

이 시장은 “완벽한 정화를 위해 오염된 토양은 모두 들어내고 외부의 깨끗한 흙으로 교체하는 반출정화 공사가 이번달부터 실시된다”며 “1차 부지에 대한 반출정화 비용은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토지정화비용도 내달 내로 국방부 협의를 완료하고 올해 안으로 즉시 정화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특위 간담회

**춘천**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진상 규명 및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석)는 1일 **춘천**시의 회에서 간담회를 개최, 특위 활동 중간점검과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